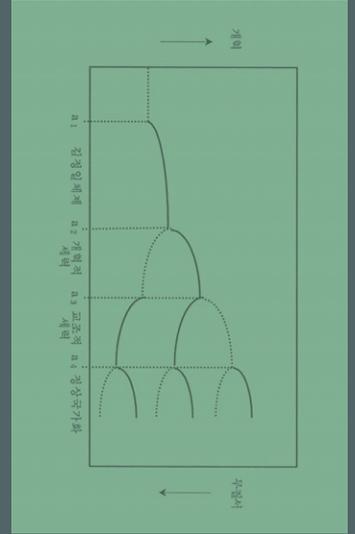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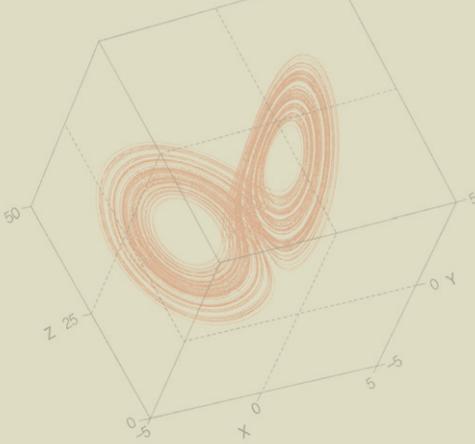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 이석 · 이교덕 · 민병원 · 채승병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서울산업대학교

www.kinu.or.kr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인 쇄 2009년 12월
발 행 2009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인수동(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76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디자인 양동문화사 (02-2272-1767)
인 쇄 처 양동문화사

가 격 6,000원

©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 총괄보고서 / 김국신,
이석, 이교덕, 민병원, 채승병 [지음].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 cm.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09-16-01)

ISBN 978-89-8479-528-0 93340 : ₩6,000

북한 개혁[北韓改革]

340.911-KDC4

320.9519-DCC21

CIP2009004208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통일연구원
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한국개발연구원
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서울산업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김 국 신 선임연구위원 (협동연구 총괄팀장)	이 석 부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이 교 덕 선임연구위원 민 병 원 교수 (서울산업대학교) 채 승 병 수석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협력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이 교 덕 선임연구위원	김 국 신 선임연구위원 조 정 아 연구위원 박 영 자 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이 석 부연구위원	김 창 욱 수석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양 문 수 부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이 석 기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김 은 영 주임연구위원
	서울산업대학교	민 병 원 교수	조 동 준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김 치 욱 연구위원 (세종연구소)

목차

C o n t e n t s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김국신, 이석, 이교덕, 민병원, 채승병

제1장 서론

- | | |
|------------------------------|---|
| 1. 연구의 배경 | 2 |
| 2. 연구의 목적과 방향 | 5 |
| 3. 2009년(1차년도) 연구의 내용 및 추진과정 | 8 |

제2장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 | | |
|--|----|
| 1. 머리말 | 12 |
| 2. 북한 시장화 연구의 한계와 복잡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필요성 | 14 |
| 3. 북한 시장화 연구를 위한 복잡계적 분석 틀의 재정립 | 23 |
| 4.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와 진화 | 29 |
| 5. 북한 시장의 형성발전과 시장 행위자 분석 | 36 |
| 6. 북한 기업의 변화와 행위자 분석 | 41 |
| 7. 맺음말 | 45 |

제3장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 | | |
|--------------------|----|
| 1. 연구의 개요와 분석틀 | 50 |
| 2. 북한체제에 대한 복잡계 적용 | 52 |
| 3. 김정일과 그 측근 | 56 |
| 4. 당과 국가기구 | 62 |
| 5. 일반 주민 | 69 |

제 4장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 | | |
|----------------------------|-----|
| 1. 연구목적과 내용 | 78 |
| 2. 국제관계와 복잡계이론 | 80 |
| 3. 비(非)정상국가와 외교정책: 개념과 이론들 | 88 |
| 4.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경험적 연구 | 96 |
| 5. 결 론 | 102 |

제 5장 결 론

- | | |
|-------------|-----|
| 1. 연구의 배경 | 106 |
| 2. 추진연구의 내용 | 107 |
| 3. 종합평가 | 111 |

참고문헌 / 11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37

〈그림 1-1〉 협동연구의 대상 시스템	8
〈그림 1-2〉 연차별 협동연구 추진과정	10
〈그림 2-1〉 복잡계적 접근을 통한 북한 시장화 연구의 목적함수체계	20
〈그림 2-2〉 시장화를 통한 시스템 변화요인 도출 방법 및 프로세스	22
〈그림 2-3〉 경제시스템의 3층위와 이들의 상호작용	25
〈그림 2-4〉 경제시스템의 진화과정	27
〈그림 2-5〉 1990년 이전 북한의 경제시스템	30
〈그림 3-1〉 북한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자기조직화	55
〈그림 3-2〉 북한 권력중추부의 정책결정 모델	57
〈그림 3-3〉 북한 주요 인사의 네트워크	59
〈그림 3-4〉 김정일을 제외한 북한 주요 인물의 네트워크 구조	61
〈그림 4-1〉 연구의 기본 구도	79
〈그림 4-2〉 정상국가와 상대 개념들	91
〈그림 4-3〉 정상국가 상대 개념의 핵심요소	92
〈그림 4-4〉 북한의 이미지: 현재와 미래	93
〈그림 4-5〉 비(非)정상국가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응	94
〈그림 4-6〉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연구디자인	95

제1장

서론

복잡계 이론에 대한 비판의 정서적 가화 및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한반도 안보환경을 둘러싼 정세는 냉전 종식 이후 줄곧 숨 가쁘게 변화해 왔다. 탈냉전과 이로 인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제한된 대외 교역채널을 통해 유지되어오던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왔다. 급기야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수백만 명 규모의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계획경제 하에서 국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 분배를 매개로 유일 지배체제를 구축해온 북한 으로서는 존립기반의 커다란 상실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실제로 대량아사는 중국 및 제3국으로의 집단 탈북현상으로 이어졌다. 외부의 시각에서 이를 관찰해온 한국의 학계와 정책당국은 이를 체제붕괴의 전조로 받아들이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 이면에는 북한의 위기를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격한 붕괴 과정 또는 중국의 점진적인 시장경제 이행 과정을 하나의 전형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북한체제의 변화를 이러한 이행(transition)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이 처한 난관은 북한 당국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란 판단이 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2009년에 이른 지금까지 북한의 체제는 외형적으로 여전히 공고하다. 오히려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과도한 군사우선주의에 집착하는 한편, 핵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실험에 나서는 모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 미국은 탈냉전기에도 이러한 호전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국제사회 규범에 역행하는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규정하고 정권전복 대상으로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거꾸로 북한이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전복하기 힘든 안정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확인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간 북한은 막대한 희생을 겪어 오면서 겉으로는 공고해 보이는 이면에서 일련의 변화를 노정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분배체계의 붕괴에 직면하여 아직 맹아적이거나 자생적인 시장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국제 교역을 국가가 독점해왔으나 느슨해진 북·중 국경을 따라 민간의 밀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자원의 공급 채널이 확보되었다. 또한 기존의 철도망과 과거 공공 운송수단을 전용한 물류체계가 북한 전국에 산재한 장마당으로 뻗어나가며 시장을 통한 자원분배가 현실화되었다. 현실적으로 과거의 분배 체계를 유지할 수 없던 북한 당국은 7:1 조치 등을 이러한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사실상 방조하였다.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자생적인 시장화를 통해 북한 체제가 당면한 붕괴위기를 회피하며 내구성을 보인 점에 주목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대다수는 연구의 과학적인 엄밀성 확보라는 이유로 북한체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고 그 요소 변화를 추적하거나, 분야별 변화지표를 확정하여 지표의 변화를 조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북한의 미래변화에 대한 유의한 시사점을 얻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것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은 물론 대외관계의 다양한 변인들이 부단히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고찰된 지표들 사이에서도 상호간의 복잡한 인과관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험적인 개별 지표에 초점을 맞추는 환원주의적 연구방식만으로 내재된 상호작용을 통해 시스템이 변화하는 동학을 재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동학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북한체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 또한 개별 연구자들의 경험과 직관에 상당 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 단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 변수 또는 정치 및 사회적 구성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 간의 동학 규명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비단 북한연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 및 사회시스템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의 틀과 방법론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해 최근에 사회과학 전반에서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잡계 이론(complex systems theory) 또는

복잡성과학(complexity science)이다.

복잡계 이론은 당초 자연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요소환원주의 전통에 대한 한계 인식에서 출발했다. 뉴턴 역학이 근대 과학사상의 서막을 연 이후에 과학적 방법론은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의 간명성을 중시했다. 현실 세계를 개별 요소로 세분화하여 각 요소의 운동을 지배하는 간결한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곧 과학적 연구방법론으로 정착한 것이다.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엄격한 인과적이며 기계론적인 세계관의 등장도 자연스러웠다. 이는 자연과학 및 공학의 커다란 발전과 물질문명의 진보를 가져다준 원동력이기도 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진화론과 생태학, 통계역학이 등장하면서 개체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우연성의 중요성이 서서히 인식되기 시작했다. 생태계 속에서 진화하는 각 종은 무작위적인 변이와 환경의 선택에 의해 새로운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며 성쇠를 거듭한다. 이 과정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요인과 구조적, 환경적인 요인이 동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개별 종은 물론 생물시스템 전체의 진화를 추동한다. 시스템의 변화 메커니즘은 과거의 개체 중심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관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개별 요소간 상호작용 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시스템 이론, 사이버네틱스 등의 발달이 이어졌다.

사회과학의 전통 속에서도 이러한 전일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이론들은 계속 발전해왔다. 환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물론적 세계관에 대한 반동과, 과거의 전체론(holism)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콩트, 뒤르켐 등에 의해 상호작용을 통해 미시-거시의 연계가 강조되는 창발론(emergentism) 등으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에서 발전된 시스템적 세계관이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며 공통의 줄기로 잡혀나간 것이 복잡계 이론이다. 이는 수많은 이질적인 개체가 국지적인 상호작용(local interaction)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의 원리가 자연계는 물론 경제사회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롯되었다. 여기에는 기존의 각 학문이 이상화된 대상에 대해 지나치게 미시적으로 천착하면서 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인식도 일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넘어서 학제간 연구

(interdisciplinary studies)가 다각도로 시도되면서 이러한 특성을 집약시킨 복잡성(complexity)과 복잡계의 담론이 점차 공통 코드로 부상하였다.

또한 복잡계 이론은 단순한 담론 형성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발전과 접목되었다. 실제 연구에서 복잡성을 고려하면 현실에 보다 가깝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고려할 요인과 관계가 많아지면서 계산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과거에는 이것이 복잡계 연구의 치명적인 한계였으나, 20세기 후반 들어 컴퓨터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연산능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복잡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복잡계 연구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이 점이 사회과학 연구에 주는 가능성은 자못 크다. 기존 사회과학 연구의 한계는 현실을 통제하여 엄밀한 실험을 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사회과학의 이론을 검증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대응책의 효과를 예측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복잡계적인 관점을 반영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형은 일종의 축소된 인공사회(artificial society)를 구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실의 다양한 개체와 상호작용 관계를 (부분적이거나 추상화시켜) 반영한 모형 속에서 다각도로 설정을 변화시켜가며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역 및 귀납적 접근과 다른 구성적 접근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학제간 연구의 담론 확대와 새로운 방법론의 시도라는 측면에서, 북한체제의 향후 이행경로의 탐색과 복잡계 이론의 접목은 시대적 요구에도 적절히 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일연구원은 2년간의 연구기간을 목표로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협동 연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과 방향

이번 협동연구는 앞서 밝힌 북한의 바람직한 정상국가화 방안을 복잡계적 시각과 분석 방법론을 통해 도출하는 2개년 연구사업의 1차년도 과제이다. 1차년도에서는 북한관련 연구자들에게 생소한 복잡계의 개념을 정립하여 적절한 연구 틀을 설계하고 2차년도를 위한 선행연구를 다지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2차년도에서 복잡계 연구에서 널리 시도되는 시뮬레이션 연구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 기획된 것이다.

북한체제의 향후 이행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하며 많은 변인과 행위자들이 결합되어있다. 이들이 향후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이나믹한 변화 가능성이 넓게 열려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동태적 시나리오는 기존의 연역적 접근이나 경험적 입증 등 사회과학에서 널리 이용되는 표준적인 접근 방법들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뮬레이션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반복 실험이 불가능한 사회과학의 특성상 많은 연구들이 사례기술형(idiographic) 분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뛰어넘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법칙정립적(nomothetic) 접근방법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뮬레이션은 이른바 ‘제3의 연구 방법론’으로 불리기도 하며, 사회과학에서 엄밀성을 견지하면서도 개연성을 포괄하는 방법론으로 큰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복잡계 관점에서 이러한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의 행태(또는 변화 동학)와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를 일련의 수식 또는 절차화할 수 있는 규칙으로 모형화한다. 그리고 현실의 시간에 대응하는 각 단계마다 이들 수식 또는 규칙에 따라 각 요소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복잡계에서는 보통 요소간 상호작용 관계를 단순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이 과정을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로 치환시켜 반복수행에 적합하도록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형은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파라미터를 변화시키거나 요소의 상호작용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조작을 통해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조건을 구성하게 된다. 이들 각 조건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수행해가며 시스템이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완벽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복수의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를 얻어내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통찰을 주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시뮬레이션 모형의 성패는 각 요소들의 행태와 상호작용 관계가 얼마나 적실성 있게 모형화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복잡계의 연구 모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잡한 현실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복잡계 연구도 우리가 주목하는 현상의 설명이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간략화된 모형에서 더 쉽고 정확하게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북한이라는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판별하고 간명하게 행태와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북한이라는 다층 시스템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에 도움이 되는 기존 연구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설사 기존 연구가 충실한 부분이라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코드화하려면 많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1차년도 연구는 이러한 2차년도까지의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크게 세 층위에서 병렬적인 목표를 추구하기로 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북한의 경제 시스템에 주목한다. 특히 현재 북한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맹아적인 시장시스템의 진화 프로세스를 규명하기로 한다. 이 시스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 즉 행위자들은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지역 상인들과, 기존의 기업소, 새롭게 등장한 소상공인 등이 된다. 이들이 외부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해가는 행태와, 이로 인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시스템의 질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사회 시스템에 주목한다. 여기서는 북한이 구축해온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유일 지도체제가, 지속되는 외부로부터의 변화 압력과 자연적인 세대교체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시나리오를 규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에서는 김정일과 그 측근을 위시한 최상층 지배층위부터 공식적인 당과 국가기구의 위계적 간부 체계를 따라 내려가는 단계적 층위간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사회 시스템 내부에서 작용하는 일련의 상호작용은 대외관계 및 경제부문에서 발생하는 변화 유인을 분산 및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강고한 모습을 보이는 듯한 북한의 사회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을 일반 주민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행태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대외관계 시스템에 주목한다. 앞서 두 층위에서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하나의 경계를 형성하는 시스템이었다. 반면 이 경우에는 북한은 하나의 행위자(agent)로서 활동하며 다른 주변 국가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미칠 수 있는 작용

점은 바로 이 층위에 분포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 내정에의 간섭이 불가능하고 쌍무적인 협상 또는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강온의 외교정책이 북한의 대외 관계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앞서 분석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에 연쇄적으로 자극을 주어 시스템 변화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고리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북한의 대외 협상전략 사례와 이와 유사한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전례를 통해 국가 수준의 행태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협동연구의 대상이 되는 3개 시스템 사이의 체계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협동연구의 대상 시스템



3. 2009년(1차년도) 연구의 내용 및 추진과정

금번 복잡계 협동연구의 주제는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으로서 복잡계 이론의 담론체계를 수용하고 북한체제 연구에 맞게 정립하는 작업과, 2차년도의 목표인 북한의 대내외 시스템의 진화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을 위한 선행연구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앞서 제시한 북한의 경제·사회·대외관계 시스템이라는 세부주제에 맞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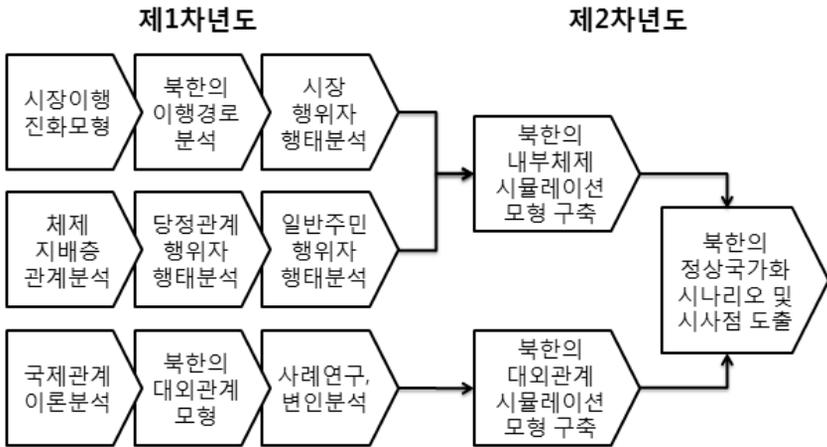
우선 첫 번째 경제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의미에서의 북한의 정상국가화란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동일한 의미라는 인식에서 출발하

여, 이를 복잡계 관점에서 이해하는 종합적인 동태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입각하여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조망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경제학의 이행 논의를 원활히 접목시키기 위해 진화경제학적인 논의를 인용, 발전시켜 유기적이면서도 유연한 모형 설계에 주력한다. 또한 현재 및 향후의 북한경제 변화와 관련된 각종 변수들의 내용을 확정하고, 2차년도 시뮬레이션 연구 및 시나리오 분석의 정량적 기초를 마련한다.

두 번째 사회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가장 큰 관건이 될 북한체제의 결속력을 다양한 층위에서 점검하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판별하는데 주력한다. 무엇보다 북한체제의 유지나 변화는 사회에 대한 정치의 침투력 증감, 내부 시장화의 진전, 남북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개별요인들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명하고, 복잡계적인 시각에서 체제 변화를 추동시키는 요인과 억제시키는 요인을 분류하여 정리한다. 아울러 최고 지배층부터 당 및 국가기구, 일반 국민대중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층내, 층간의 행위자 행태 및 상호작용 관계를 규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제 내 사회연결망 진화 동학의 기초 연구자료를 축적한다.

세 번째 대외관계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이끌어내는 주요 외부요인으로서 한국 및 주변 이해당사국의 외교정책의 영향 파급 메커니즘 규명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있는 비정상국가와 정상국가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한다. 다음으로 비정상국가의 정상국가화 성공 및 실패사례를 연구하고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을 추출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현재 한반도 국제관계 환경에는 얼마나 산재되어 있는지를 아울러 정리한다. 특히 2차년도에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 방법론으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할 것을 염두에 두고 국가단위의 행위자에 대한 규정과, 이들의 상황별 행동규칙 및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그림 1-2> 연차별 협동연구 추진과정



본 협동연구는 통일연구원이 기본계획서와 이에 따른 연구분야 및 세부 연구주제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연구기관 및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를 엄선하여 복잡계의 학제간 연구 특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통일연구원이 각 1개 세부과제를 담당하고, 나머지 1개 세부과제는 서울산업대학교가 참여하여 협동연구망을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삼성경제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세종연구소 등의 관련 연구자들이 각 세부과제별로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발전적인 복합학문 연구의 전범을 세우고자 노력하였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이라는 협동연구의 맥락 속에서 세부과제별로 추진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재구성한 협동연구 총괄보고서임을 밝힌다.

제 2 장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북한 경제 개혁의 통찰과 북한의 정치·군사·외교 연구



제2장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1. 머리말

만일 국제사회가 현재의 북한경제에 대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시장경제로의 순조로운 이행(transition)일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건재하는 한 북한으로서는 세계경제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규범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민주적 질서와 다양한 사회계층 간의 이해를 조절하는 시민사회의 건설 또한 요원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사회는 한시라도 빨리 북한경제가 순조롭게 시장경제로 이행하기를 바라며,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여 북한경제의 연구에 있어서도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이러한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관심을 배경으로 한 가지 매우 모험적이며 도전적인, 따라서 매우 참신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한, 시도를 실행에 옮기려 한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해 이제까지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전혀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새로운 일반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복잡계적인 분석방법을 원용하여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물론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북한경제 또는 북한의 시장화라는 단어나 복잡계라는 단어 가운데 어느 한가지에는 익숙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들 단어 가운데 한 가지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마도 이들 단어 두 가지 모두에 익숙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이 두 가지 용어를

* 본 내용은 이석·김창욱·양문기·이석기·김은영,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09-16-03)』 연구를 요약한 것임.

하나로 연결시켰을 때 그것이 갖는 이미지나 의미를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글을 쓰는 필자나 본 연구에 참여한 여타의 연구진 역시 연구의 초기에는 이들 단어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아마 본 연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질문이 쇄도할 것이다. 도대체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복잡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그것일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여기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시도하지 않는다. 특정의 사회현상에 대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단순히 몇몇 문장으로 설명되기에는 언제나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본 연구의 전체 결과물을 통해 왜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만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최초의 모험적 연구를 드러내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며, 따라서 이를 제일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2장에서는 기존 북한 시장화 연구의 한계가 정확히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왜 복잡계적 분석방법과 같은 조금은 생소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토론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북한 시장화 연구의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환의 논리적 정당성을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장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러한 논리적 정당성의 구축을 기반으로 이후 기존의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맞게 정련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한편, 4장에서 6장까지는 이렇게 정련된 분석도구와 기법들을 이용하여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 현상 및 이에 따른 북한의 경제 시스템 변화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제도와 행위자, 그리고 북한당국의 대응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괄하며, 이를 기초로 5장에서는 복잡계적 분석방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행위자 분석을 북한의 시장 자체에 적용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나머지 6장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를 기업의 행위자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그 의의를 간단히 약술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2. 북한 시장화 연구의 한계와 복잡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필요성

이 장에서는 우선 북한 시장화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왜 복잡계적인 분석 방법이 도입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논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존 북한시장화 연구가 당면하고 있는 방법론적 인식론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한계가 복잡계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가. 기존 북한 시장화 연구의 방법론적·인식론적 한계

현재 외부세계가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그것과 북한경제의 이행이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기존 북한의 시장화 연구는 본질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시장화가 경제체제 자체의 이행으로 연결된다는 이른바 비공식화 가설에도 나타나지만, 이를 반대하는 여타의 가설들에도 모두 나타난다.

(1) 비공식화 가설의 한계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화 가설(Informalisation)은 북한의 경우 모든 사회주의적 질서가 계획을 전제로 설정된 것이니만큼, 실제의 경제행위에서 이러한 계획이 무력화되고 시장으로 대체되어 나갈 경우, 언젠가 계획을 전제로 설정된 사회주의적 질서 역시 새로운 시장적 질서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그간 북한의 시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연구에 지배적 가설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접근에는 두 가지의 중대한 난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 안에서 과연 시장의 기능이 계속 확대된다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안에서 성장하는 시장은 한편으로 계획부문으로부터의 자원을 유출시켜 계획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

을 수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계획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오히려 계획을 강화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 안에서 시장이 확대된다고 해서 개념적으로는 반드시 계획의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말하기가 힘들다.

또 다른 의문점은 북한에서 시장이 확대되는 경우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존의 사회주의적 질서 자체가 변화하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비공식화 가설이 옳다면, 북한경제는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기존의 사회주의적 질서 자체가 변화하는 어떤 결정적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적 순간은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형성되는 것일까? 이는 당연히 북한의 시장을 사회주의 경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비공식화 가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질문 자체가 그 시야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비공식화 가설이 북한경제 이행에 대한 하나의 완결된 가설체계라고 이름을 붙이기조차 쉽지 않다.

(2) 계획경제 가설의 한계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간 북한의 시장과 관련해서는 앞서의 가설과 정반대되는 또 다른 개념 또는 가설이 적용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통상 사회주의 계획경제 가설로 불리는 이러한 접근은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북한경제 자체의 이행과는 적어도 개념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본다. 북한경제는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사실상 계획기능이 마비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자생적 시장화가 광범위하게 진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생적 시장화는 사회주의적 계획당국에게 ①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계획의 축소를 불려와 전체 사회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이었지만, ②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마비된 사회주의적 계획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의 공급처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계획당국은 2000년대 이후 당시까지 자생적으로 발전하던 북한의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자원을 통한 계획기능의 복원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북한의 시장은 이처럼 계획당국에 의해 제도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를 북한경제의 체제이행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여기에도 두 가지의 난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북한에 있어 시장의 발전을 과연 북한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의 시장을 사회주의적 계획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도는, 현재의 북한 상황으로 볼 때, 국가의 능력만을 너무 강조하는 일면적인 접근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의문점은 ‘그렇다면 북한경제의 이행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화는 이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하는 점이다. 우리 모두는 향후 북한경제가 결국에는 시장경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는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에서 경험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우리가 북한의 시장을 논의하는 이유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북한의 시장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계획당국의 의지와 능력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면, 이러한 기본적 문제의식 자체가 아예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 북한경제의 모습이 과거의 전일적 계획경제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전면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북한경제의 이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개념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다.

(3) 북한 시장화 연구의 방법론적·인식론적 한계

이처럼 현재 북한시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연구는 근본적인 장애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연구를 추동하고 있는 원동력이 북한의 경제이행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심이지만,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북한시장에 대한 연구 자체가 개념적인 혼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은 북한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경제학적 접근 방법의 한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여타의 조건이 일정하다는 것을 가정하여 그 사회현상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에서는 ‘일정하다고 가정한 여타의 조건들이 변화할 때 대상이 되는 사회현상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분석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거꾸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회현상이 이미 일정하다고 가정한 여타의 조건들(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북한의 시장

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거꾸로의 분석’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재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북한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 아니라, 반대로 현재와 같이 북한의 시장이 발전할 경우 이것이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북한시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제학적 접근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일정한 (경제)제도와 구조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특정의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제도와 구조가 어떻게 생성, 발전, 소멸하는지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특정의 경제현상이 이러한 제도 및 구조의 생성, 발전, 소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러한 설명 틀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 다시 말해 북한경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나. 북한 시장화 연구의 한계 극복을 위한 복잡계적 방법론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복잡계적 분석방법,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기존의 경제학 체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이른바 진화 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이다.

(1) 경제 시스템 변화의 일반 인식론으로서의 복잡계적 접근방법

무엇보다 복잡계적 분석방법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그것이 제도와 구조의 생성을 직접 개념화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 및 구조의 생성을 기존 제도 및 구조에서의 사회 현상을 토대로 설명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복잡계에서는 새로운 제도 또는 구조의 생성을 창발(emergence)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창발은 기존의 제도 또는 구조 속에서 자라난 각 요인들이 기존의 제도 또는 구조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복잡계적 분석방법에 따르면, 기존

의 제도와 구조의 활동을 통해 그 속에서 활동하는 개별 경제주체들은 역설적으로 기존의 제도 및 구조에는 포섭되지 않는 매우 새로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보편화되면 그 행위자들은 기존의 제도 및 구조 밖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일정한 규칙을 통해 조직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자기조직화의 원리가 충분히 발전되면, 당연히 그것은 기존의 제도나 구조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기존의 제도와 구조는 밑으로부터의 자기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규칙들을 기존의 제도와 구조의 영역으로 새롭게 끌어들이거나 또는 이를 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제도와 구조의 진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만일 기존의 제도와 구조가 밑으로부터의 자기조직화를 통한 새로운 규칙들을 일정부분 받아들여 스스로 변화해나간다면 이는 점진적인 제도화를 통한 연속적 진화라고 부를 수 있는 반면, 만일 기존의 제도와 구조가 이러한 규칙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와 대립하는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중국에는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규칙들이 기존의 제도와 구조 자체를 대체한다면 이는 불연속적이며 격렬한 진화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존의 제도와 구조 속에서 왜 이와는 전혀 다른 규칙들이 자기조직화라는 과정을 통해 등장하는가 하는 점이다. 복잡계에서는 하나의 경제제도 또는 구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미시적 차원의 행위 정합성과 거시적 차원의 기능 정합성이 동시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정합성에 균열이 생기면, 그 시스템은 지속될 수 없고 재편되며, 그 과정에서 자기조직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¹⁾

(2) 경제 시스템 변화의 현실 사례로서의 북한 시장화와 복잡계적 접근방법

복잡계적 분석방법은 북한의 시장과 관련된 우리의 본질적인 관심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현재 북한에서는 기존의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를 유지한 채 시장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만일 북한의 개별 경제주체들이 앞으로 북한에서 시장이 무한

1) 미시적 차원의 행위 정합성은 주어진 제도 아래에서 각 경제주체가 제도 또는 다른 주체들에 의해 기대되어 지는 행위를 실행하는가의 여부를 개념화 하는 것이고, 거시적 차원의 기능 정합성이란 이들 개별 경제주체의 미시적 행위선택이 종합된 결과가 주어진 제도에서 거시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생산하여 내는가를 개념화 하는 것이다.

정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거나, 또는 스스로 일정 수준 이상 시장경제행위를 수행할 경우 기존의 사회주의적 제도로부터 제재를 당해 그 고통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북한의 경제주체들은 시장행위를 수행하되 그 정도를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할 것이며, 그 결과 북한의 시장은 전체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체제 내의 현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비록 북한에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와 관련된 미시적 행위 정합성과 거시적 기능 정합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경우 북한당국은 개별 경제주체의 시장행위를 적절히 통제하여 그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계획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복잡계적 분석방법이 북한의 시장과 관련된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가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을 뜻한다.

반면, 북한의 개별 경제주체들이 앞으로 북한에서 시장이 무한정 확대될 것으로 믿거나, 또는 설사 기존 사회주의적 제도로부터 제재를 당하더라도 스스로의 시장경제행위를 더욱 늘리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앞에서와 정반대로 시장에 대한 북한의 사회주의적 통제는 무력화 될 것이고, 각각의 개별 경제주체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질서 밖에서 이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시장에 기초한 상호간의 질서를 형성해 나갈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 북한에 존재하는 시장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와 관련된 북한의 미시적 행위 정합성과 거시적 기능 정합성 모두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시장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자기조직화와 이의 제도화 또는 진화를 포함하는 이른바 새로운 구조의 창발로 인해 북한의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 자체가 이행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복잡계적 분석 방법은 앞서 북한의 시장과 관련된 비공식화 가설 역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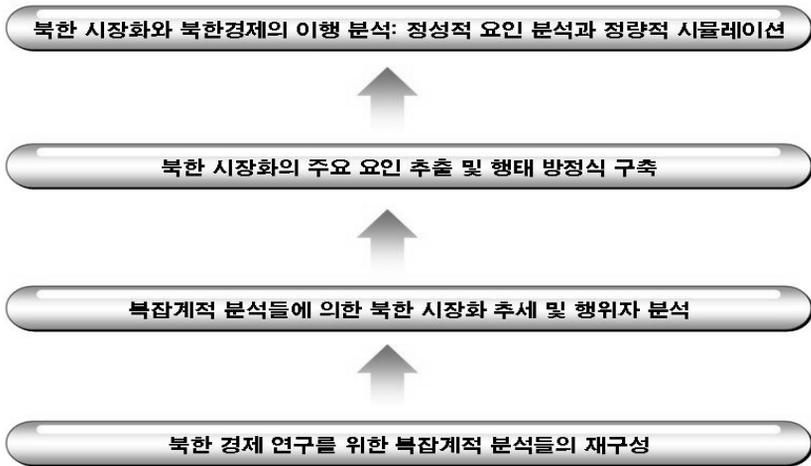
(3) 북한 시장화 분석을 위한 복잡계적 접근의 기술적 다양성과 적합성

복잡계적 분석방법은 북한의 시장화를 토대로 북한경제의 이행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현실적인 작업 방법론(working methods)을 제공한다. 실제로 우리는 복잡계적 분석방법에서 제공하는 여러 개념들을 토대로 북한경제

의 시장화와 체제이행을 연결시키는 다양한 조작적 정의들(operational definitions)과 계량적 설명모형(quantitative explanatory models)들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와 모형들을 활용하면 현재 북한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이 과연 새로운 시장경제의 형성 또는 창발로 나아갈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 또한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또한 어떤 조건에서 그러한지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당연히 이는 북한의 시장화를 북한경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토론하기 위한 최적의 현실적 방법론이다.

특히 복잡계적 방법을 원용할 경우, 북한의 시장화를 체제이행의 관점에서, 그것도 정량적 모델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림 2-1> 복잡계적 접근을 통한 북한 시장화 연구의 목적함수체계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동원할 경우 북한의 시장화 및 체제이행에 개입할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이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통해 북한의 체제 이행 자체를 설명하는 정량적 규칙이나 모델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들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낼 경우 이들의 관계를 일종의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하여, 이러한 방정식의 해(solution)를 찾거나, 또는 그에 기초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의 시장화와 체제이행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논의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복잡계적 분석방법은 기존 북한 시장화 연구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기존 시장화 연구가 갖고 있는 개념적이고 인식론적인 한계를 모두 초월하는 자기 완결적이며 완전한 가설체계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체제이행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는 다양한 분석도구를 제공해주는 최적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우리가 기존의 북한연구에서는 매우 생소한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굳이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다. 복잡계적 접근을 통한 북한 시장화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목적 함수들-시스템 변화의 정량 방정식 도출을 목표로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도달하려고하는 최종적인 연구 결과물의 형태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재정련 또는 재구성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이와 같이 재구성된 복잡계적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직접 분석한다. 셋째, 이처럼 북한경제의 이행과 관련된 시장화 요인이 추출되는 경우, 우리는 이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만일 가능하다면 이들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일종의 행태 방정식의 형태로 도출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의 모든 과정을 통해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북한경제의 이행으로 연결되는지를 계량적인 모형으로 분석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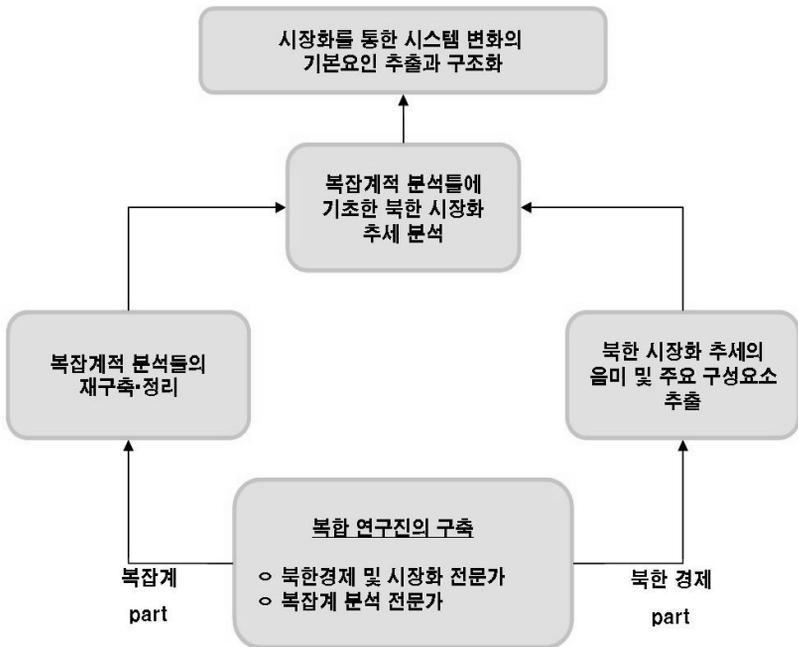
네 가지의 연구 목적 가운데 처음 두 가지의 목적만을 본 연구에서 다루고, 나머지 두 가지의 목적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후속 연구 또는 본 연구의 연장 작업에서 다루도록 한다.

(2) 본 연구의 방법-시스템 변화의 기본 요인 도출과 구조화

한편,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본 연구의 일차연도 작업방식과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본 연구의

일차연도 작업은 크게 ① 북한의 시장화 현상분석을 위한 복잡계적 방법론과 개념 틀의 정련과 ② 이를 통한 북한의 시장화 추세 재구성에 두어진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차연도의 연구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네 편의 상호 연관된, 그렇지만 별도의 주제를 갖는, 논문들을 작성한다. 첫 번째는 복잡계적 방법론의 일반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북한경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고 (재)정련하는 논문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정련된 복잡계적 방법론을 직접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의 시장화 추세 전반을 개관하는 논문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논문은 북한의 시장화와 관련된 각각의 행위자들을 분석하는 논문인데, 이 가운데 세 번째는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계획부문의 변화를 기업과 기업 참여자들의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논문이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논문은 북한의 시장 자체의 구조와 이에 참여하는 각각의 행위자들의 행태와 동기, 그리고 참여방식 등을 분석하는 논문이다.

<그림 2-2> 시장화를 통한 시스템 변화요인 도출 방법 및 프로세스



3. 북한 시장화 연구를 위한 복잡계적 분석 틀의 재정립

이제까지 복잡계적인 분석방법은 북한에 적용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더욱이 복잡계적인 분석방법은 어떤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매우 탄력적인 하나의 사고방식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복잡계적인 분석방법이 북한연구, 특히 북한의 시장화 연구라는 특수한 주제에 맞추어 (재)정련될 수 있는지를 타진한다. 이렇게 재정련된 복잡계적 분석방법만이 비로소 현실의 북한 시장화 연구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 복잡계 이론의 재해석

(1) 세계관으로서의 복잡계 이론

복잡계 관점에서 세계를 본다는 것은 ‘세계를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스스로 변화해가는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은 언뜻 보면 그 질서가 이미 주어져 있고 저절로 그것이 변화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다 면밀하게 깊숙이 보면 세상의 질서는 스스로 만들어졌고 스스로 변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질서와 지속적인 변화가 내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지는가? 복잡계 관점에 따르면 그것을 낳는 것은 바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이다. 세상은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또 그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로 변화해간다. 복잡계 이론은 시스템 차원에서의 질서의 형성과 그 질서의 변화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2) 복잡계 이론의 두 축: 자기조직화와 진화

복잡계 이론에 대한 위의 이해로부터 복잡계의 두 가지 특징이 도출된다. 첫째는 스스로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로 변화해간다는 것이다.

첫째, 스스로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자기조직

화(self-organization)와 창발(emergence)이다. 자기조직화란 외부의 의도적인 간섭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구조를 갖추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창발이란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요소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시스템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로 변화한다는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진화(evolution)와 적응(adaptation)이다. 진화는 시스템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존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의 상태로 이전해가는 것을 가리킨다. 적응은 시스템이 주변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스스로 변화함으로써 자신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는 자기조직화 과정과 진화과정의 교대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 이는 불안정성과 강화피드백이라는 두 가지 계기에 의해서 일어난다. 새로운 질서가 고착화되고 다시 불안정해지는 것은 진화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새로운 질서를 고착화시키는 것이 선별과정이라면 그것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시스템의 내부적 침식과정이다.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새로운 자기조직화 과정이 다시 시작된다.

나. 경제시스템 이행의 복잡계적 이해

(1) 경제시스템의 특성

인간사회에서는 단순 규칙에 기반하여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기반하여 행동이 일어난다. 자연계에서는 단순한 행동 규칙이 구성요소에 체화되어 있는 반면 인간사회에서는 행동 규칙이 구성요소와 분리되는 것이 가능하다. 인간은 이 규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며 그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구성요소의 행동 규칙이 구성요소와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이 자연계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연계에서는 행동의 조정이 주로 특정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의 형성과 구성요소 사이의 선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인간사회에서는 행동 규칙의 새로운 조합과 행동 규칙에 대한 선별을 통해서 행동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인간사회에서 이러한 행동 규칙을 규정하는 것은 제도(institutions)와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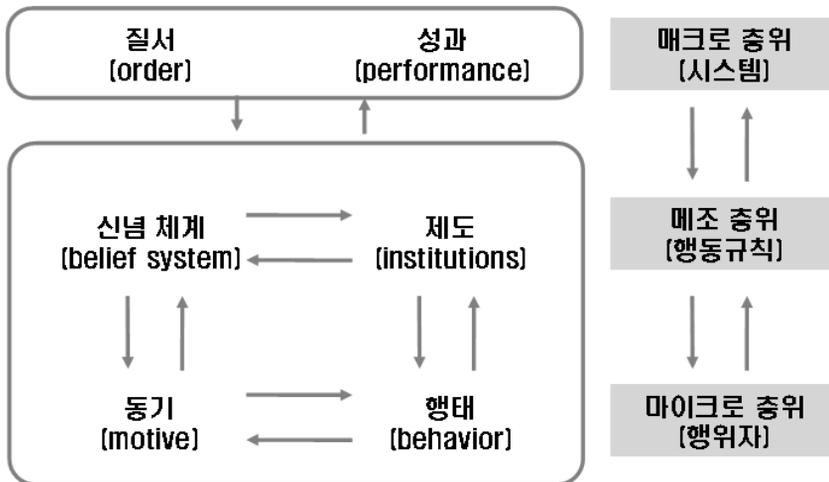
념체계(belief system)이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제도와 신념체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리고 제도와 신념체계의 변화에 의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동도 변화한다. 행동 규칙이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와 분리되어 별도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경제시스템의 구조

인간이 스스로 행동 규칙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은 인간사회의 시스템에 메조(meso) 층위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 제도와 신념체계가 위치한 메조 층위를 도입함으로써 규칙의 형성 및 변화를 수행하는 인간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경제시스템은 3개 층위로 구분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2-3> 참조). 마이크로(micro)-메조(meso)-매크로(macro)가 그것이다.²⁾

<그림 2-3> 경제시스템의 3층위와 이들의 상호작용



마이크로 층위는 개별 행위자의 수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행태(behavior)이다. 행위자의 행태와 이를 통한 상호작용이 경제시스템을 형성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가는 기초이다. 이 행위자들의 행태의 이면에는

2) Dopfer, K., J. Foster, and J. Potts, "Micro-meso-macro,"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Vol. 14, No. 3, July 2004.

동기(motive)가 작용한다.

메조 층위는 행동 규칙의 수준이다. 메조 층위에는 제도와 신념체계가 위치한다. 제도와 신념체계는 서로 제약하기도 하고 서로 변화를 추동하기도 하는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매크로 층위는 시스템 전체의 수준을 가리킨다. 시스템 차원의 질서와 성과가 이 층위에서 나타난다. 질서는 개별 행위자의 행태가 서로 충돌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리키고 성과는 시스템의 성장이나 부(富)의 창출과 같은 가치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가를 가리킨다.

(3) 경제시스템 지속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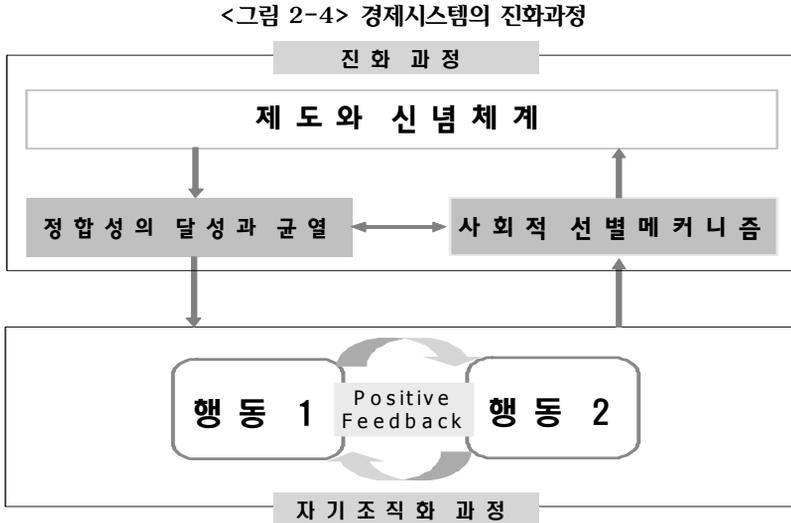
경제시스템이 질서와 성과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이다. 질서와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경제시스템이 내적으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합성이 떨어질 때 경제시스템의 질서는 깨지고 성과는 악화된다.

경제시스템의 정합성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행위적 정합성이고, 둘째는 기능적 정합성이다. 전자가 시스템의 질서 유지와 관련된다면 후자는 성과 산출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행위적 정합성은 개별 행위자의 행동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각자에게 기대되는 바대로 행동하도록 조정되는가의 여부이다. 기능적 정합성은 주어진 제도와 신념체계 하에서 유도된 각 경제주체의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기능적으로 조화를 이루는가, 즉 각 경제주체의 행동의 효과가 시스템의 재생산과 성과 창출에 순기능을 하는가를 의미한다.

(4)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와 진화

경제시스템 이행의 출발점은 행위자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도이다. 새로운 시도가 어떻게 새로운 질서로 발전하는가? 새로운 질서의 자기조직화는 강화피드백과 조절피드백의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관계를 낳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시도를 확산, 증폭시키는 강화피드백 관계가 형성된다면 새로운 질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조절피드백이 작동하여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이러한 새로운

행태가 번지는 것을 막게 된다.



새로운 시도들이 자기조직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질서로 발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것이다. 새로운 질서가 제도와 신념체계의 변화로 이어져야 비로소 구조화·고착화 될 수 있다. 즉 새로운 질서를 낳는 행동 규칙이 사회적 선별과정을 통해서 제도와 신념체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선별과정을 통해 제도와 신념체계의 재편을 이루고 일시적인 정합성을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합성에 균열이 발생한다.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합성의 균열은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이것이 새로운 시도의 활성화를 낳아 자기조직화를 유도한다. 결국 자기조직화 과정과 진화 과정의 교대에 의해 경제시스템의 이행이 일어나는 것이다.

다. 북한경제 이행의 복잡계적 분석들

(1) 복잡계 관점의 시사점

복잡계 관점은 아래로부터의 창발과 시스템 내적 논리에 의한 진화를 보는 관점이다. 복잡계 관점에서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분석한다는 것은 경제시스

팀의 자기조직화와 진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에 기반한 행위자들의 행태 및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가 시스템 변화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마이크로-메조-매크로의 다층 구조로 경제시스템을 보고,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스템의 변화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변화의 확산과 증폭을 강화피드백의 작용에 의한 내생적인 자기조직화 과정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북한 시장화 분석의 시점(視點)

북한에서는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80년대 이후 증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장경제 요소의 시도로 나타났다. 이의 자기조직화 과정은 강화피드백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텃밭 허용과 암시장의 형성이 이러한 강화피드백을 형성하였다. 이는 배급체계의 미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텃밭과 암시장이 배급체계의 취약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또 다른 강화피드백을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강화피드백의 분석에서 핵심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농민들 사이의 거래행위, 농민과 도시민 사이의 거래행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강화되었는가가 중요하다.

북한에서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시장적 요소가 일부 제도화된다. 자기조직화된 시장적 질서가 부분적으로 고착화되는 과정을 밟은 것이다. 제도화 이후 다시 새로운 행태들이 나타나게 된다. 시장적 행태를 강화시켜 가는 것도 있었고, 비시장적 행태를 결합시키는 방식도 있었다.

북한경제에서 시장적 질서의 제도화 과정은 새로운 질서가 구조화, 고착화됨으로써 시스템 전체적으로 새로운 정합성을 달성하는 과정이다. 정합성 유지를 위한 선별메커니즘을 잘 갖추고 있느냐가 진화 과정에서 핵심 문제가 된다. 북한의 경우 이 선별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집중된 상태에서 국가에 의해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별이 실제로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제시스템의 정합성 회복과 유지라는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정합성 여부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반영이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를 기초로 선별 메커니즘의 적절성 여부

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제도 변화가 점진적 방식을 따를 것인지, 급진적 방식을 따를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4.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와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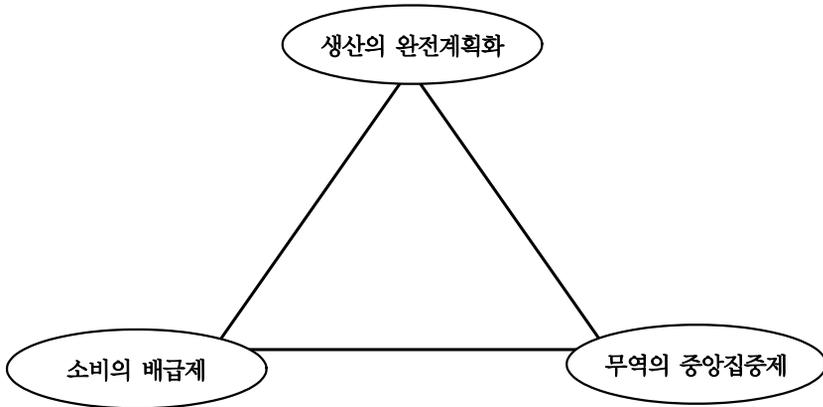
이 절은 앞의 절에서 재정립한 복잡계적 분석방법들을 원용하여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를 계획경제 시스템의 변이와 시장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본격적인 북한경제의 변화가 시작되기 이전인 1990년대까지의 경제시스템을 복잡계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스케치한다. 둘째,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 시장화의 현상을 시스템 외부의(새로운 사회적 규칙에 대한) 자기조직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셋째, 1990년대 후반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 경제시스템의 공식적인 변화를 이전의 자기조직화에 따른 기존 시스템의 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가. 기존 북한 경제시스템의 구조와 운영원리

1990년대의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북한에 존재했던 경제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국가가 개별 경제주체들의 일체의 경제행위를 모두 명령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생산의 완전계획화와 소비에서의 배급제, 그리고 무역에서의 중앙독점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움직여나갔다. 우선 북한은 경제의 모든 생산활동을 계획기구가 직접 명령하고 통제하는 전일적 계획화 제도를 구축하였다. 모든 생산활동이 중앙계획자로부터 일선 생산자에 이르도록 수직적인 명령의 형태로 작성·실행·보고되도록 하는 계획의 일원화 체계가 구축된 것은 물론, 이러한 일원화 체계가 경제활동의 거시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그와 관련된 모든 구체적·세부적 활동 내역에까지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계획의 세부화 체계 역시 형성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생산 측면에서의 완전 계획화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측면에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량)배급제가 완성되었다. 경제주체들의

기본적 소비품목인 식량을 국가가 직접 배급함으로써 국가가 사실상 모든 경제주체의 소비생활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북한의 배급제는 1945년 해방 직후의 식량난을 배경으로 사회주의 계획부문에 종사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부분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되어 1960년대 후반에는 전 경제주체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생산은 물론 소비활동까지 모두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또한 배급되는 것은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매우 위험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만일 국가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이는 계획 이외의 일체의 경제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경우 개별 경제주체들의 생산과 소비활동 그 자체가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기근과 같은 사회적 혼란은 물론 경제의 생산활동 자체가 일시에 마비될 위험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한 가지 완충장치로서 그간 북한경제에서는 일체의 대외거래 역시 중앙 계획자가 철저히 통제하는 시스템 또한 구축해 왔다. 자칫 국내경제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생산과 소비의 실패 가능성을 매우 잘 통제되고 계획되는 대외거래 활동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자 시도했다는 의미이다.

<그림 2-5> 1990년 이전 북한의 경제시스템



그런데 이러한 경제 시스템에서는 사실 미시적 행위 정합성이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개별 경제주체가 중앙 계획자의 명령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없으며, 또한 이탈할 유인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이전 북한에

서와 같이 계획 이외의 일체의 경제행위가 모두 금지된 경제 시스템에서는 개별 경제주체가 독자적 경제행위를 수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방법이 없다. 이를 수행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징벌이 매우 가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별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독자적 경제행위를 수행할 유인도 갖지 못한다. 국가가 배급제로 자신들의 기본적 소비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은 물론, 바로 이러한 배급제를 통해 설사 스스로의 독자적인 경제행위로 추가 소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비로 연결시켜 자신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물자의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 유인 정합성과는 달리 거시적 기능 정합성의 측면에서는 그 사정이 매우 다르다. 우선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증대 유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성 증대와 관련된 일체의 생산 활동이 중앙 계획자의 명령에 의해 수행되므로 개별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산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생산성 증대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또는 전혀 반대로 생산성 증대가 일어나더라도, 개별 경제주체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소비 활동과 같은 후생 수준이 이미 중앙 계획자에 의해 배급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실상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시스템에서는 생산성 증대에 의한 내포적 경제발전은 개념적으로 발생하기 매우 힘들며, 경제의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도 단순히 추가적인 자원의 투입이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생산성 증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노동과 물자를 생산과정에 투입할 때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현대 경제 시스템의 기본적 요건이 경제의 확대 재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가정하면, 1990년대 이전의 북한 경제 시스템은 경제 내부에 여분의 노동력과 자원을 끊임없이 경제에 추가적으로 투입해야만 거시적 기능 정합성이 유지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추가적 자원 투입은 무한정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서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는 1990년대 이전의 북한 경제 시스템은 그것의 발전에 따라 일정 순간이 지나면 자체의 거시적 기능 정합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동일한 이유에서 이러한 거시적 기능 정합성의 붕괴는 북한의 무역에서의 이상으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북한경제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서는 추가적 자원투입이 필요한데, 만일 이러한 자원을 국내에서 찾지 못한다면, 북한당국으로서는 자연히 이를 해외에서 구하려 할 것이고, 따라서 해외로부터 자원유입이 지속되는 한, 북한경제의 거시적 기능 정합성은 붕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거시적 기능 정합성이 붕괴하는 것이란 결국 이러한 자원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동 정합성의 붕괴가 북한의 무역에서의 이상 징후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 북한의 시장화와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자기조직화

실제로 1980년대부터 시작한 북한경제의 시장화는 이러한 무역부분에서의 이상과 이로 인한 기존 시스템의 거시적 기능 정합성의 붕괴로부터 야기되었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 북한은 곡물무역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배급제의 압박이 나타나면서 주민들이 제한된 범위에서 자구적 식량 확보에 나서는 시장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러한 자구적 시장화가 본격화 된 것은 1980년대가 아니라 1990년대 중반, 더욱 정확히 표현해서는 1994년부터의 일이었다. 실제로 이 해 북한에서는 두 가지의 외부적 쇼크가 한꺼번에 밀어닥친 해였다. 하나는 ‘러시아 쇼크’로 부를 수 있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중국 쇼크’로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 우선 러시아는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 대외거래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중요한 거래 파트너로서 석유나 기계류와 같은 북한경제의 기초적 투입 물자를 거의 전량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9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하고, 이로 인해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역은 이후 과거의 거의 1/10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석유소비와 같은 전략적 물자의 투입량은 과거의 절반 이하로 하락하며, 이로 인해 1994년부터는 북한의 농업 및 산업 생산량이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1994년에는 식량의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도 충격이 밀려왔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은 북한의 해외식량 수입 거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중요 거래 파트너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중국 동북지방의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하고 북·중간의 정치적 갈등현상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대북식량 수출이 전년의 1/4이하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쇼크는 기존의 북한 경제 시스템을 근저로부터 뒤흔들게 된다. 우선 당시부터 북한의 배급제가 사실상 작동을 멈춤으로써 배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사회계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기근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북한의 계획부문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실업 현상이 만연하게 된다. 이는 한편으로 북한 주민들의 소비생활이 불가능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부문으로부터의 소득획득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기존의 경제시스템에서 부여되었던 미시적 행위 정합성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 연이은 외부적 충격으로 북한경제의 거시적 기능 정합성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더 이상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만 경제행위를 수행한다는 미시적 행위 정합성 역시 지탱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정합성의 붕괴는 당연히 개별 경제주체들에 의한 자구적 시장화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화의 현상이 단순한 기존 경제시스템에서의 일탈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탈행위는 한편으로 거의 모든 경제주체들로 확산되어 이들 사이의 새로운 사회적 규칙들의 형성으로 발현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규칙을 기반으로 기존 경제시스템 또한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단계에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보면 1994년 이후 북한의 시장화는 기존 경제시스템의 행위 정합성과 기능 정합성이 모두 와해된 상태에서 시스템의 외부에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들이 형성되는 자기조직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구적 식량 확보 노력으로 텃밭과 땀밭 등 합법, 비합법, 불법의 모든 토지를 사적으로 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작 작물 역시 이제까지는 사적으로 재배가 금지되었던 옥수수 등의 배급곡물에 집중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적인 경작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시가구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통해 곡물을 구입하려는 시도가 일반화되었고, 이를 통해 이제 시장은 북한의 개별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 확보

채널이 되었다. 이처럼 일단 시장이 북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가장 중요한 식량 확보 채널로 등장하자, 이들의 여타 경제행위 역시 완전히 변모하게 된다. 시장에서의 곡물거래가격은 이제까지의 공식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이에 따라 계획부문의 소득만 가지고는 시장에서의 곡물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경제주체들은 시장에서 소위 장사라는 (추가적) 경제행위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이러한 시장소득이 불가능한 개별가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자산이나 화폐소득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이를 토대로 식량을 구입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그 결과 북한의 제반 경제행위가 이제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진화-시장의 제도화와 시스템의 변모

이러한 시장의 확대는 기존 계획부문의 급속한 침식과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북한의 계획당국은 더 이상 국가에 의한 충분한 식량배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식량배급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시키고자 시도하였다. 과거 국가, 특히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인식되던 식량 배급의 책임을 지방정부, 심지어는 기업에까지 분담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나 기업들 역시 추가적이며 자구적인 식량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현실적으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지방정부나 계획부문의 기업체에 이르기까지 이제 좋은 싫든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진행되는 원시적 시장화의 영향 하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북한당국은 이러한 배급제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식량에 관한 한 과거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행사하던 외국무역의 권한을 지방정부, 심지어는 개별 기업에까지 허용하였다. 그 결과 1950년대 이후 한번도 변함 없이 유지되었던 대외거래에서의 중앙 집중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한편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제 북한의 계획기구는 시장을 전제로 하여 운영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1998년 신헌법을 계기로 기존 계획경제의 운영을 대폭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유명무실했던 ‘독립채산제’, ‘원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고, 계획 및 경제의 분권화에 대한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2000년대 들어 군수산업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을 제외한 여타의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 지표의 설정과 실행 역시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게 분담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리고 일선 기업들 각자가 스스로의 고유 영역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운동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분권화 조치와 더불어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이를 위한 자율성 확보 또한 보장하려는 시도 역시 이루어졌다. 특히 이러한 기업의 자율적 생산 활동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거의 경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의 창설 또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변화는 결국 2002년 7·1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의 창설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제도화로 귀착되었다.

라. 평가

요컨대 1990년대 경제위기로 본격화된 북한의 시장화는 ‘기존 시스템의 행위 정합성 및 기능 정합성 붕괴 → 개별 경제주체의 자구적 노력을 통한 시장행위 일반화 → 시장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원시적 시장화 → 원시적 시장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한 기존 경제 시스템의 작동방식 변화 → 시장화를 전제로 한 기존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의 모색’이라는 과정으로 숨가쁘게 진전되어왔다. 복잡계적 분석방법에서 말하는 자기조직화의 현상이 기존 시스템의 외부에서 개별 경제주체들 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칙이 형성되는 것이라면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본격화된 (원시적) 시장화는 정확히 이러한 자기조직화의 현상과 그에 따른 제도화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화의 과정은 1998년을 기점으로 기존 북한경제의 계획 시스템 자체까지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복잡계적인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2000년대 들어, 더욱 정확히 표현하면 1998년의 신헌법 이후 새로운 진화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진화는 ① 1990년대 중후반 기존 시스템의 외부에서 진행되던 시장화라는 자기조직화 현상을 북한당국이 일정부분 승인하고, ② 이로 인해 발생한 자생적 사회

규칙들을 국가의 공식제도로 포섭하는 것은 물론, ③ 이를 근거로 기존 계획 부문의 제도나 운영원리 역시 시장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복잡계적 분석시각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변화과정을 ‘거시적·미시적 정합성의 붕괴 → 일탈행위의 증가 → 이에 따른 자기조직화와 새로운 사회규칙들의 형성 → 동 사회규칙들의 제도화 → 기존 시스템의 진화’라는 형태로 이해한다. 이렇게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 진행되었던 자생적 시장화 현상은 이제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북한 시스템의 진화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북한의 경제시스템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진화된 현재의 북한 경제시스템이 시장경제 시스템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시장을 전제로 하지만 계획부문의 존재와 그의 운영을 경제의 주축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일반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설명하는 복잡계적 시각과 매우 잘 일치하며, 따라서 향후 북한의 시스템이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시장경제로 이행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5. 북한 시장의 형성발전과 시장 행위자 분석

이 장은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발전과정을 시장 행위자 분석을 통해 접근한다.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동 및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북한에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시장의 형성·발전의 메커니즘을 정리하고 북한 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한편 간단하게 미래상을 조망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춘다.

가. 복잡계의 관점에서 본 시장화 일반

복잡계의 관점과 분석틀로 북한의 시장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적으로 볼 때 시장화를 행위자의 행태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공급자(판매자) 및 수요자(구매자)로 시장

에 등장한다. 최초에는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은 단순 물물교환일 수 있으나 점차 화폐를 매개로 한 교환으로 발전한다. 이들이 시장에 등장하는 목적은 초기에는 과부족 물자의 교환 등 비화폐적 동기였으나 점차 이윤획득 등 화폐적 동기로 발전한다. 이렇게 해서 소비재 시장이 형성된다. 이 때 지리적 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공급자(판매자)와 수요자(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 거래를 중개하는 상인이 등장한다. 이 상인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행상일 수도 있고, 고정된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는 점주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공간으로서의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자(판매자)는 상품을 직접 생산했던 여타의 방법으로 취득했던 소생산자 등 상품의 원 소유자이거나, 원 소유자로부터 상품을 넘겨받은 상인이다. 상인은 지역내 상업(근거리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지역간 상업(원거리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는 거래규모가 작고, 후자는 거래 규모가 크다.

한편 시장의 발달은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즉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 나아가 판로의 확대는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생산을 확대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소상품 생산자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분업의 발생, 확대 현상도 나타난다. 즉 소상품 생산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의 전문적인 품목에 생산을 집중하게 된다. 아울러 생산자들 간의 연계도 이루어지면서 생산재 시장이 형성, 발전하게 된다. 시장의 발달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인층의 형성, 확대 및 분화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것이 도매상과 소매상의 분화이다. 즉 초기에는 한 사람이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도매상과 소매상이 분리된다. 또한 특정 품목만 취급하는 전문상인과 여러 품목을 취급하는 종합상인의 분화도 나타난다. 아울러 초기에는 상인이 창고 업무와 운수 업무를 겸하게 되나 점차 창고업과 운수업을 전문으로 하는 상인이 나타나게 된다. 즉 상업에서 창고업과 운수업이 분리된다.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신용, 나아가 금융의 필요성도 증대된다. 신규로 시장에 판매자로 참여하는 사람이든, 기존에 상행위를 하고 있던 사람이든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 초기에는 시장에서 판매자로 참여하는 사람 가운데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여기서 일부는 전문적인 금융업(사채 및 고리대금업)자로 전환한다. 이른바 금융시장의 출현이다.

시장화가 더욱 진전되게 되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등장하게 된다. 상업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상인이 자본가로 전환하게 되고, 반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노동자도 나타나게 된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출현인 것이다.

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 창발과 자기조직화

북한에서 시장의 형성은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로 규정할 수 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합법적인 농민시장이 거대한 암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비공식적 영역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1990년대 초 계획경제의 와해와 배급제의 붕괴 등을 배경으로 주민 개개인에게 생존의 책임이 부여된 현실에서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시장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일반 주민들은 최초에 공급자(판매자)로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사(상행위)를 통해 시장에서 벌어들인 현금수입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그 자신과 가족들이 수요자(구매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물론 자신의 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한 형태로 참여했다.

초기에는 순수하게 개인의 차원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도 기업 차원 혹은 소속 구성원 차원에서 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기업이 보유한 차량, 창고 등을 활용해 직접 상행위를 하거나 상인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시장 참여자도 시장참여 폭을 확대하게 된다. 아울러 전문화 및 분화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다 불법이기 때문에 당국의 단속에 걸리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뇌물증여 등의 방법으로 단속망을 빠져 나갈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일종의 학습효과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초보적인 ‘소비재 시장’이라는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시스템 차원에서 나타났다.

북한에서 시장의 형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기존에 합법적으로 존재하던 소규모 농민시장이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대규모 암시장³⁾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복잡계의 개념으로 말하면 창발(emergence)이다. 아울러 이 초보적인 소비재 시장은 비록 국가로부터 때때로 단속과 억압을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확장을 하면서 또 생산재 시장, 자본금융시장, 노동시장을 잉태하고 있었다. 시스템이 스스로 구조를 갖추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냈다. 복잡계의 개념으로 말하면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인 것이다.

물론 이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시장이 만들어내는 개인주의적 사고, 경제합리적 사고는 기존의 전체주의적 신념체계와 양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대해 기능적으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를 대신해 소비재 부족 현상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은데 대표적인 것이 계획경제의 침식이다.

암시장의 창궐에 대해 북한당국이 취한 태도는 크게 보아 통제와 묵인의 반복이었다. 시장의 형성, 발달이 행위적 정합성과 기능적 정합성의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시장에 대한 단속과 묵인을 반복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아서는 묵인에 가까웠다. 적어도 고난의 행군 종료까지 국가는 사실상의 속수무책이었다. 적어도 2000년대 이전에는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의 구조화가 뚜렷하게 진전되지 않았다. 선별 메커니즘은 제대로 형성되지도, 작동되지도 않았다.

다. 북한에서의 시장의 발전: 진화와 적응

하지만 1998년 김정일 시대의 공식 개막과 함께 북한은 흐트러진 체제의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부분적이거나 시장을 공식 제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새로운 환경에 상당 정도 제대로 적응(adaptation)했다. 시장 참

3) 북한 주민들은 이 암시장을 장마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소생산자, 돈주, 중간상인, 소매상인 등 다양한 기능적 분화, 전문화 과정을 통해 시장을 양적, 질적으로 발전시켰다. 소비재시장은 생산재 시장, 자본금융시장, 노동시장을 탄생시켰고 각각의 시장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시장화를 더욱 진전시켰다. 아울러 개별 주민뿐 아니라 기관, 공장, 기업소들도 개별 행위자로서 시장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시스템 내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확산되어 새로운 상태로 이전해갔다. 복잡계의 개념으로 말하면 진화(evolution)인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여전히 기존 시스템과 충돌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계획경제와 시장의 올바른 결합이다. 이 경우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인정, 활용한다는 입장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 입장은 현실 세계의 모습과 큰 괴리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장의 발전에 따라 공식적인 영역에서도 신념체계(belief system)의 변화가 발생했으나 여전히 현실과의 거리감은 존재한다. 그러다보니 공식 정책 및 이념과 사회 현실, 주민의식 사이의 괴리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결국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의 이행에는 불철저하게 되고, 이른바 형식주의가 만연하게 된다. 주민들은 외양적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반항하는 ‘일상생활형의 반항’, ‘민생형 일탈’이 증대하게 된다. 집단주의 원칙보다 개인주의적 인식이 확산되게 된다. 공식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구속력이 약화되고 기존 질서가 동요하면서 화폐물신주의가 팽배하게 된다. 결국 신념체계의 대혼란은 불가피하게 된다.

시장 발달은 기능적으로는 재정수입 증대, 상품 공급 확대 등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계획경제의 침식, 인플레이션 등 역기능도 결코 만만치 않다. 1998년 김정일 시대 공식 개막 이후, 그리고 7·1 조치 전후해서는 선별 메커니즘이 부분적이거나 작동했으나 시장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 2007년부터는 혼란이 발생했다. 공식적인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을 국가가 서슴지 않으니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제도의 의미가 퇴색했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는 소비재 시장, 일부 생산재 시장 정도가 합법화되어 있다. 자본금융시장, 노동시장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지 않다. 다만 소비재 시장은 2007년부

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단속과 묵인을 반복하고 있다. 단속은 기존에 시장을 합법화한 제도와 충돌의 여지가 있으나, 북한에서 명령이 제도를 뛰어넘은 적은 한두 번이 아니다. 상부로부터의 명령은 초법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별 메커니즘이 구조화되기 어렵다.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렵다. 1998년 김정일 시대 공식 개막 이후, 그리고 7·1 조치 전후로는 선별 메커니즘이 부분적이거나 작동했으나 2007년부터는 혼란에 빠졌다.

라. 평가와 전망

시장화에 대해 북한당국은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시장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반면 시장화가 진전되면 정치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행동에 일관성이 결여되기 일쑤다. 시장화를 제도하는 데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 결국 주민들, 나아가 기관, 공장, 기업소의 행태와 제도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게 되었다.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북한 기업의 변화와 행위자 분석

가. 북한 기업관리체계의 원형: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

북한의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로 요약할 수 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세부적인 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사전적으로 계획화하며(세부화), 중앙으로부터 말단 기업에 이르기까지 위계적인 조직체계에 의해 계획화를 추진하는(일원화) 계획화 방식을 의미한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체계가 북한 경제의 조정양식이라면, 대안의 사업체계는 북한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에 의한 집체적 지도’를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당위원회에 의한 집체

적 지도는 다시 두 측면 즉, 당 조직에 의한 지배인 등 경영자에 의한 감독과
 균중노선으로 분리할 수 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공장·기업소 당위원회에 의한 집체적 지도’와
 ‘위로부터 아래로 자재를 공급해 주는 물자공급체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1980년대 부분적으로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북한 기업관
 리체계의 원형으로 유지되어 왔다.

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에 의한 시장관계의 자기 조직화와 확산

1990년대의 경제위기에 의해 공식적인 기업관리 제도인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및 대안의 사업체계가 수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체계의 전제 조건
 인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계가 사실상 붕괴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재생산의 지속을 위해서 공식적인 제도가 기대하지 않는 일탈행위
 를 더욱 빈번하게 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계획화 체계에서 벗어나 물물교환
 이나 현금거래를 통해서 물자를 조달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처분한다. 이 때
 물자의 조달이나 생산된 제품의 처분이 어떠한 명령이나 혹은 공식적인 규정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간, 혹은 기업과 개인간의
 자발적인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를 매개하는
 것은 ‘가격’이다. 국가에 의한 공식적인 제도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에서 기업들이 생존, 즉 생산의 지속을 위하여 사실상의 시장거래를 통하여
 물자를 ‘구매’하고,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시장화가 1990년대 북한 기업 행동양식 변화의 핵심을
 구성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일탈행위는 1990년대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계획화 체계에서 벗어
 난 행위는 항상 존재해 왔었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위기 하에서 공식적인
 기업관리제도가 행위적, 기능적 정합성을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개별적인
 기업의 일탈행위들이 강화 피드백을 통하여 확산, 증폭됨에 따라 시장화라는
 형태로 자기조직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장화 과정은 기업과 계획기구, 중간관리기관, 감독기관 간
 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이들 관리

및 감독기구들이 기업에 의한 시장화를 인정하거나 묵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제도화라는 형태의 선별 과정이 이 시기에는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일종의 사회적 선별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에 의한 자발적 시장화는 사회적으로 승인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다. 국가에 의한 선별로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1) 사회적 선별 메커니즘으로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7·1 조치의 입안과 이행은 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시장화에 대한 또 다른 국가 차원의 선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7·1조치를 통하여 기업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창출되고, 확산되었으며, 사회적 승인을 받았으나 여전히 공식적인 제도의 외곽에 머물렀던 시장관계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제도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계의 붕괴라는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의 자발적인 시장화, 그리고 사회적 선별과정을 통한 제도화라는 경로를 지나면서 북한의 기업관리체계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원형으로부터 시장적 요소가 도입된 새로운 형태로의 진화 과정의 일단을 완료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새로운 신념체계로서의 자력갱생의 확산

7·1 조치의 배급제와 사회보장 제도의 개편은 사회주의 국가가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역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며, 나아가서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종업원들을 기업이 책임질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 자재를 조달하여 생산하고, 생산한 제품을 처분하여 식량을 구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단위, 심지어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리는 적용되게 된다. 소위 ‘자력갱생’은 이미 1990년대에 북한 경제주체들에게 강요된 현실이었다. 7·1 조치는 북한 당국이 암묵적으로 요구한 자력갱생을 공식적인 신념체계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자력갱생은 사회주의와 함께 사회의 주요 구성원리가 된 것이다.

(3)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새로운 일탈행위와 자기조직화

7·1 조치를 통한 공식적인 제도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이전에 불법·비합법의 영역에 머물렀던 행위들이 합법적인 행위로 승인함으로써 제도와 기업 행위간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제도가 제공한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의해서 제도와 현실간의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계기로도 작용한다.

예를 들어 7·1 조치는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허용함으로써 기업간 거래를 부분적으로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었다. 그런데 이 조치는 당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1990년대 기업에 의해서 촉발된 새로운 관계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허용된 기업 간 거래에 머무르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재만 조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그것이 무엇이든 시장에서의 수요만 있으면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한다. 공식적인 제도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탈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일종의 새로운 신념체계로서의 자력갱생의 전면화는 시장을 활용하는 기업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일탈행위들이 확산되고, 자기조직화를 촉진한다.

라. 평가와 전망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공식적인 제도와 기업 행동 양식간의 간극을 부분적으로 축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이 조치에 의해서 확보되고, 정당화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공식적인 제도가 포섭하지 못하는 영역이 더욱 확산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발적인 진화과정 즉, 급속한 체제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별과정을 통하여 공식적인 제도와 기업의 새로운 행동양식 간의 갈등을 줄이거나, 혹은 새로운 행동양식 및 신념체계

가 확산되는 것을 제어해야 할 것이다.

2006년경부터 시도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는 북한 당국이 일단 후자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물질 토대가 단기간에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최근 시도되고 있는 북한당국의 시도는 공식적인 제도와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행위간의 갈등은 다시 증폭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7·1 조치와 같은 선별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가 공식적인 제도로 승인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은 결국,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것은 기존의 경제관리체제의 행위적·기능적 정합성이 크게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선별 및 제도화로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일탈 행위에 의해서 자기조직화하는 시장화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체제내로 흡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탈 행위의 발생 원인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성과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관리체계를 포함한 북한 경제 시스템의 점진적인 진화, 혹은 진화 방향은 개별 행위자의 일탈 행위가 증가하고, 시장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를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제도화해 나가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제의 성과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맺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접근방법의 한계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존재하는가를 탐색하였고, 그 결과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일반이론이라 할 수 있는 복잡계적인 접근방법의 유용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복잡계적인 접근방법이 과연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복잡계적 방법이 동원될 경우 북한의 시장화 연

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검토하였다. 우리가 이처럼 조심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북한 연구자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복잡계적 접근 방법을 굳이 검토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 시장화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우리가 이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목적인 시장과 이행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시장 자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정체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는 이미 20년 전에 모두 무너졌다. 그리고 20년 전에 무너진 사회주의 경제의 또 다른 20년 전에 이미 그 속에는 시장이 존재했고 또한 발전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가 모두 무너지고, 또한 북한경제마저 무너진 이후 10년 동안 시장이 꽃을 피웠고, 이것이 다시 우리의 뇌리 속에 각인된 것은 그로부터도 10년이 지난 오늘의 일이다. 사람은 역사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연구자의 인식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늘날 북한의 시장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역시 이처럼 쉽고 필연적인 길을 답습하였다.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을 인식하기 위해 20년 전에 무너진 사회주의 경제의 또 다른 20년 전에 나타났던 시장에 대한 기억을 투사했던 것이다. 사람은 역사로부터 배우지만, 사람의 상상력은 역사의 상상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먼 옛날 사회주의의 기억 속에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시장을 끄집어내어 오늘날의 북한에 대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이란 생동하는 풍부한 역사의 상상력을 따라가는 북한의 현실을 우리의 구닥다리 인식으로는 결코 따라잡지 못하는 일뿐이다.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한계가 바로 이러한 인식의 갭에서 기인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갭을 극복하지 않는 한 북한 시장화 연구와 관련된 우리의 성과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려한다. 우리가 이 글에서 듣기에도 생소한 복잡계적 접근방법을 검토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믿음과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우리는 이 글에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복잡계적 접근방법이 기존의 북한 시장화 연구방법 보다 더욱 우월하고 현실적합적인 패러다임이라는 사실을 보이고, 이를 통해 북한시장화 연구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우 전문적인 다섯

명의 연구자들이 작성한 다섯 편의 개별 논문을 하나의 연속된 장으로 묶어 이들을 모두 읽고나면, 마치 한 사람이 북한시장화 연구에 있어 패러다임 시프트의 필요성을 수미일관하게 논증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도록 시도하였다. 이 연구의 제 2장에서 기존 북한시장화 연구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이에 따른 복잡계적 접근방법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받아 3장에서는 과연 복잡계적 방법이 북한 시장화 연구를 위해 ‘맞춤 분석틀’을 제공할 있는가를 검토하며, 4장에서는 다시 이러한 맞춤 분석틀을 토대로 북한의 시장화 과정 전반을 재해석하며, 5장과 6장에서는 이러한 시장화 과정의 세부 사항인 기업과 개별 시장행위자의 행태분석을 시도한 것이 모두 이러한 논증의 느낌을 주기 위한 배치였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성공했는지는 아직 모른다. 아마도 그것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내려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을 대신하여 시족을 덧붙인다면, 적어도 이 글을 쓴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글쓴이들조차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단어의 생경함과 내용의 생소함에 대해 다시금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경함과 생소함을 만들어 냈던 글 쓸 당시의 사고들을 여전히 떠올릴 수 있으며, 때로는 이러한 사고를 통해 스스로가 아직도 자극을 받는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한다. 모든 새로운 시도의 결과물은 생경하고 생소하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생경함과 생소함이 가져오는 기분 좋은 자극이 있기에 누구나 한번쯤 새롭고 모험적인 시도에 나설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닐까? 글쓴이들은 이 글에서 비춰지는 생경함과 생소함이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자극으로 다가가기 기대한다. 모든 새로운 시도는 생경하지만 또한 아름답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 3 장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북한계 이념에 대한 북한의 정경수가 화 된인 피구



제3장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1. 연구의 개요와 분석틀

탈냉전 이후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심각한 경제·식량 위기를 겪었다. 계획경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자 사회통제는 이완되고 장마당이 확산되는 등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와 사회적 혼란에 직면하여 김정일 정권은 부분적인 개방을 실시하여 외부의 지원을 끌어들이는 한편, 사회 감시망을 확대하고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사회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고 후계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대내외에 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체제안보의 보루로서 핵·미사일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점차 개혁·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소련·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은 북한도 장기적인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화 사례를 적용하여 북한의 급진적 또는 점진적 체제변화 가능성을 논의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권의 전반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근본적인 변화없이 장기간 유지되자,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또는 체제 내구력 등을 평가하는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 사례를 적용한 연구들은 북한이 미래 어느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될 체제변화 가능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균형지향적인 사회과학

* 본 내용은 이교덕·김국산·조정아·박영자,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09-16-02)』 연구를 요약한 것임.

이론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북한체제의 안정 속에 내포되어 있는 변화잠재력을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방법은 “전체는 부분의 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작은 구성단위로 나뉘어질 수 있고, 이 작은 단위들을 분석하여 종합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소환원론적 사고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포기라는 역사적 대세를 거스르고 근본적인 체제변화를 기피하면서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은 경제·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정권 안정을 유지하는 원인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체제 균형(평형)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변화잠재력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보다 복합적인 이론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도 “전체란 부분의 합 이상”이라고 전제하고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 요소들을 나누지 않으며 다양한 요소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간 추진되고 있는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연구’ 중 1차년도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체제 내부 실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복잡계란 “무수한 요소가 상호 간섭해서 어떤 패턴을 형성하거나 예상외의 성질을 나타내어 각 패턴이 각 요소 자체에 되먹임되는(feedback) 시스템”을 말하는데 북한도 하나의 복잡계이다. 사회는 각 개체가 모여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자기조직의 원리에 따라 창발적으로 질서구조를 만들어낸다. 복잡계 연구의 핵심은 어떻게 개체간 상호작용에 의해 집단적 패턴이 창발적으로 생성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혼란하고 복잡한 거시적인 것에서 미시적인 하나의 규칙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많은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분석도구로서 행위자 기반 모형(ABM: Agent-Based Model)을 널리 사용한다. 행위자 기반 모형은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환경과 행위자가 활동하는 시스템 공간 속에서 행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행위자 기반 모형은 복잡계를 모의실험(simulation)할 수 있는 유력한 하나의 방법이다.

본 연구는 모의실험 할 2차년도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북한체제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체제의 행위자를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상에 따라 핵심층인 김정일과 권력중추부(Inner circle), 중간층인 당 및 국가기구, 하층부인 일반 주민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했다.

2. 북한체제에 대한 복잡계 적용

가. 복잡계 이론 적용 가능성

북한은 전체주의국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체주의(Totalitarianism)는 국가가 시민의 활동·사상·태도 등 사회 모든 영역을 총체적으로 통제하는 체제를 지칭한다.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bigniew K. Brzezinski)는 파시즘·나치즘·볼셰비즘 등 전체주의체제의 특성을 ① 정교한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존재, ② 일인 독재자에 의해 영도되는 단일 대중정당 통치, ③ 비밀경찰에 의한 심리적·물리적 테러체제, ④ 라디오·신문·영화 등 대중매체에 대한 총체적 독점, ⑤ 무장력의 효율적 독점, ⑥ 중앙집권적 통제·지시 경제체제 등의 여섯 가지로 기술하였다.⁴⁾

북한은 1980년대 말까지 김일성 수령 중심의 일당독재체제 하에서 외부의 정보 및 인적 교류를 엄격히 통제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및 당·국가기구의 철저한 사회통제를 통하여 체제안정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가 사회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체주의체제의 경우에는 복잡계 이론의 적용이 한계가 있다. 그러나 1989년과 1991년에 걸쳐 폴란드·동독·체코슬로바키아·루마니아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붕괴되자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이념적 기반과 경제적 기반이 크게 흔들리며 폐쇄체제에 균열을 보이게 되었다. 탈냉전 이후 이러한 북한의 사회·경제적 혼란이 복잡계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소련·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은 심각한 경제·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탈북자가 속출하는 상황

4)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을 겪게되었다. 북한체제의 위기상황에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 정권은 체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적인 개방을 실시하는 반면, 체제의 견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계획경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지배층의 부패는 만연되어 있고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이 이반하여 국가의 사회통제력도 점차 이완되고 있다. 배급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일반주민들은 장마당과 암시장 등을 통해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북한 도시·농촌지역에는 원시적 시장경제가 태동하고 있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계획부문을 강화하고 국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북한체제는 이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제각기 생존을 추구하며 새로운 관행을 습득해 가고 있으며, 보위부·보안성 요원들은 뇌물을 매개로 상인들과 공생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경제·사회적 혼란상황에서 각 계층별로 ‘자기조직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나. 복잡계 분석틀

복잡계 이론에 의해 북한체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서 취급하여 논의하는 거시적 구조분석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미시적 행태분석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요소환원주의를 거부하는 복잡계 방법론의 특징에 비추어 보면 두 가지 분석수준은 하나의 분석틀에 통합되어 총체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상 이를 각기 개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의 국가통치 구조의 특징을 기술하고, 이어서 국가의 통제력을 벗어나 사회적 무질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질서가 창발하는 동태적 변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한 국가-사회관계를 배경으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구도를 도식화하여 설명한다.

정치체제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 북한정권도 내부환경과 요구 및 지지를 교환하는 상호작용을 지속해야 한다. 즉, 주민들의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그 업적을 바탕으로 다시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주의적인 위계질서의 정점에 위치한 김정일 정권은 폐쇄적인 정책결정구조를 형성하고 자의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집행하고 있다. 당·국가기구가 사회집단에 깊숙이 침투하여 강압적인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북한체제에서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선을 위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의미에서의 정치체제는 작동하지 않고 통치체제만 존재한다.

국가가 사회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체주의체제의 경우에는 복잡계 이론이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북한의 사회·경제적 혼란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북한체제는 국가의 통제와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적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북한 행위자들은 새로운 행위 패턴을 구축하고 자기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가 창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행위자들이 처한 입장은 국가권력 위계질서에 따라 각기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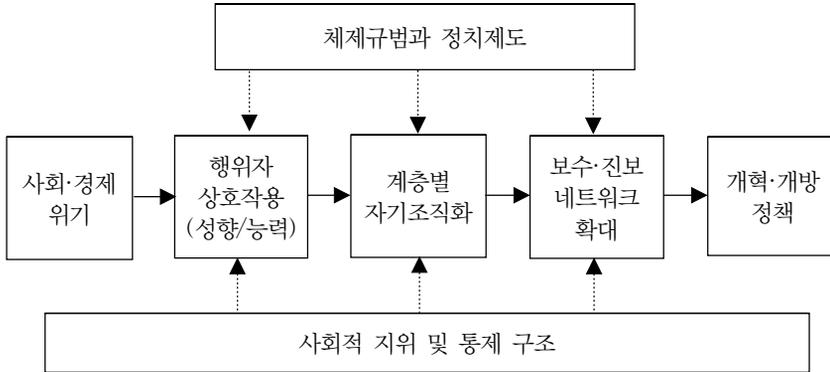
하층 행위자들은 사회·경제적 혼란과 무질서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생계 유지와 신변안전에 크게 고통을 받는다. 이들은 제각기 생존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통해 새로운 관행을 습득해 나간다. 중간층과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행위자들이 무질서와 혼란에 의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며 이에 비례하여 생계를 위협받는 강도가 약해진다. 최상층에 위치한 북한정권과 지배계층은 법·규범 및 물리적 강제력을 통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상층 행위자도 아래로부터 확산되어 온 혼란과 무질서 파급효과의 충격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적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보수·개혁 파벌로 분리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인다. 중간층에 위치한 당·국가 관료들은 정권에 순응하여 사회통제에 앞장서는 한편, 하층 주민들과 시장에서 공생하는 방향으로 자기조직화 해나갈 수 있다. 향후 정책방향에 있어도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북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자기조직화 역량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아래 그림은 북한체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미시적 관점

에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 북한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자기조직화



북한 행위자들은 주어진 현실에 대해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하며, 개인적 고립, 타자 동조, 연대·결속, 상호경쟁, 적대적 대립 등의 행위 양식을 전개한다.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반복됨에 따라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집단 사이에 자기조직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자기조직화는 진공상태에서 집단 행위자들의 내부역량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들이 놓여있는 정치·사회적 공간의 제약, 즉 체제규범·사회계급·국가통제 등의 구조적인 영향을 받으며 진행된다.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혼돈과 무질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권력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지배연합의 결속을 강화한다. 정권 차원의 권력 네트워크는 외부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확대될 수 있지만, 동원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이 그 한계를 규정한다. 만성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해진 상태에서는 상층 계층 사이에서도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될 수 있다.

당·국가기구를 중심으로 개인적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상층과 중간층에 위치한 관료들은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체제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해 정책방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행위자 네트워크는 향후 북한체제가 추구하는 목표에 관해서 보수와 진보 성향의 네트워크로 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네트워크가

확대되면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권력에 소외되어 있는 식량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하층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자율적인 연대를 강화하게 된다. 이들의 결속은 비정치적인 시장적응형 네트워크로 발전되어 갈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체제집단으로 조직화될 수 있다. 당·국가기구의 하부조직이 건재한 상황에서 하층 주민들의 자기조직화는 비정치적인 시장적응형 네트워크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가의 억압이 완화되는 정치적 기회구조가 주어질 경우에는 반체제집단의 자기조직화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체제변화가 불가피한 임계점에 도달해 가고 있는 북한에서 행위자들이 자율적인 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리고 이들의 자기조직화가 정치적 세력으로 발전되어 갈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계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북한체제는 미래에 대한 단순한 직선적인 예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체제의 변화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체제 행위자들의 실질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구체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3. 김정일과 그 측근

어떤 정치체제이든 체계의 모든 흐름과 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고위 수준의 정책결정이다. 정책결정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의 제약을 받으나 초인적인 능력과 무오류의 절대적인 수량이 존재하는 북한의 경우 정책결정을 둘러싼 수령과 그 측근의 상호작용은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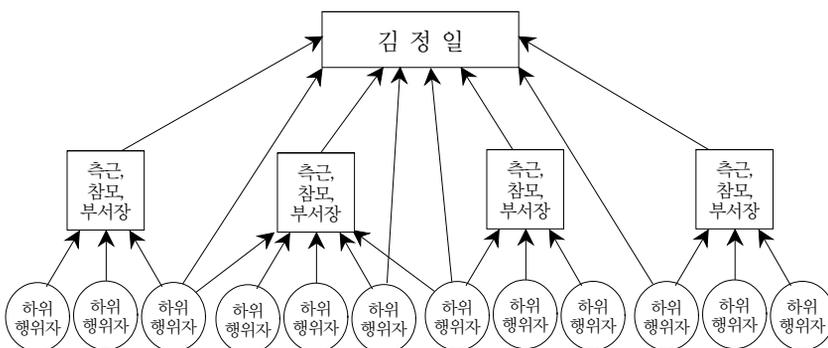
가. 정책결정상의 상호작용

김정일은 각 기구의 최고 책임자에게 전권을 위임하지 않고 하위 직책의 간부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임무도 주고 그들로부터 보고도 받는다. 그는 획일적이고 엄격한 위계질서를 중시하면서 공개된 토론이나 의견교환을 피하고 당, 정, 군의 각 보고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정보를 직접 취합한다.

물론 정책결정과정상의 일정한 수준에서 부서간의 조정과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김정일의 지침에 따른 일상적 업무에 한정된다. 측근이라 하지만 보통은 그들 사이의 정보 흐름이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정 전반을 모두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정일뿐이다. 이는 정책결정이 일관성과 단일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사시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치명적 약점을 지닌다.

정책결정을 둘러싸고 김정일과 그 측근의 상호작용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정책결정이 김정일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정전반이 권력자 일인에게 집중되면 업무부담의 가중에서 오는 혼동, 정책 결정에서의 객관성과 합리성, 신속성의 결여와 같은 부작용이 초래된다. 또한 모두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에게 보고가 집중되고 참모와 관료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은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는 있지만, 견해 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그 견해차를 뛰어넘어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각기 다른 부서에서 전문화되고 파편화되고 독립된 시각으로 문제를 진단한 뒤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김정일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러 변수가 다양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문제의 해결에 이런 정책결정구조는 적합하지 않다.

<그림 3-2> 북한 권력중추부의 정책결정 모델⁵⁾



5) 김성철, “통치스타일과 정치체계의 운용,” 통일연구원 편, 『김정일 연구: 리더십과 사상(1)』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7.

의사결정 과부하와 의사소통 부재는 혁신적 문제해결 능력을 마비시킨다. 특히 변화에 대한 담론의 불가능은 정치체계의 경화현상을 낳는다. 정치체계는 외부로부터의 요구 뿐 아니라 체계내 행위자들의 요구, 즉 내투입에 반응함으로써 자생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사회로부터의 요구 투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투입마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급속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지체 현상을 낳고 있다.

내투입을 위해서는 엘리트간 파벌 및 노선갈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 부자세습으로 이어진 장기집권은 집권자가 선호하지 않는 엘리트들의 등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 특히 선군정치는 지배집단에 속할 수 있는 후보집단의 규모를 줄였고 지배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을 군부에 더 많이 부여했다. 동시에 군부를 중심으로 엘리트들 동심원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지배집단의 크기를 줄였다. 이러한 특징은 현재 북한의 권력엘리트 가운데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위로부터의 변화를 주도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복잡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이고 응집력이 강한 조직은 오히려 쇠퇴한다. 안정적이고 평형상태에 있는 조직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김정일과 측근의 네트워크

김정일의 측근은 그의 가까이에서 통치와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들이 누구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북한 권력중추부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와 향후 전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복잡계 네트워크 과학은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발상하에 구성원 사이의 연결관계를 통해 전체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하고 네트워크의 ‘허브’를 찾으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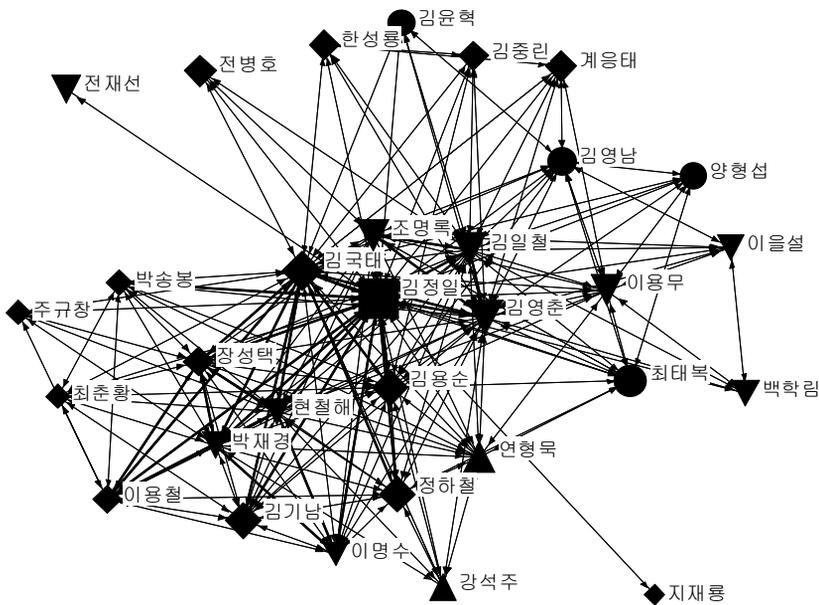
김정일과 측근의 연결망(network)이 어떤 형태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연결망 속에서 누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한 결과,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중심성이 높은 인물은 김기남, 김일철, 김국태, 김영춘, 최태복이다. 중심성(centrality)은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한 정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하여 연결망을 구성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이다.

<그림 3-3> 북한 주요 인사의 네트워크

※ 그림에서 사각형 노드는 김정일, 원모양 노드는 최고인민회의, 삼각형 노드는 내각, 다이아몬드꼴 노드는 당, 역삼각형 노드는 군 소속을 나타냄.

<1999~2003년>



김정일을 제외하고 그린 연결망에서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연결망의 중심 고리에 해당한다. 1999~2003년의 경우 김국태, 김영춘, 김일철, 김용순, 조명록 등이, 2004~2008년의 경우는 김기남이 독보적이다. 김기남은 당이나 내각,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인사뿐 아니라 군부 쪽 인사와도 접촉이 잦다.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인물들이 김정일의 현지도도 수행 시 상호 간 얼마나 접촉이 잦았는지를 비교해 보면 김기남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았다. 따라서 그가 80대의 고령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김정일 유고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권력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분야에 걸친 넓은 인맥으로 김정일 후계체제 수립에서 조정자, 중재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의 제2인자로 일컬어지는 장성택은 김기남, 박재경, 이용철, 현철해와 자주 대면했다. 그의 형제가 유력한 군인인 데다 그 자신도 군부 인사와의 접촉이 많음은 그에 대해 군부가 호의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4. 당과 국가기구

복잡계 이론의 핵심개념 중의 하나가 비평형성(far-from-equilibrium)과 비선형성(non-linearity)이다. 비평형성은 어떤 체제가 질서있고 안정적인 평형(equilibrium)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복잡계의 자생적 질서는 평형상태나 평형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평형상태에서는 시스템의 요동이 상쇄되어 새로운 질서가 창출될 수 있는 요소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형 상태에서야 분산구조(dissipative structure)가 형성되고 새로운 구조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비선형성은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선적인 선형구조에서 벗어난 복잡계의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한 체제가 운영되는 데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히 개별 행위자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양태보다도 개별 행위자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질서와 무질서 상태를 주목하는 것이다. 한 체제 내의 개별 행위자들은 복잡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개념에 주목하여 북한체제에서 당과 국가기구라는 행위자의 위상과 운영방식,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전자에는 비평형성, 후자에는 비선형성이 뚜렷히 나타난다.

가. 위상과 운영방식의 비평형성

당과 국가기구 행위자의 위상과 운영방식을 첫째,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성격, 둘째, 국가기구의 위상과 성격, 셋째, 조선노동당의 운영방식, 넷째, 국가기구의 운영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성격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1인 절대권력자를 정점으로 선두에서 북한 체제와 인민을 지도하는 전위 정치조직이다. 북한체제는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이후 소련군의 점령 하에서 스탈린체제를 모델로 하여 건설되었으며, 1953년 스탈린 사후 소련에서의 탈스탈린 흐름과 이후 소련과 동유럽의 탈사회주의 과정과 중국 및 베트남의 탈스탈린 흐름에도, ‘당의 지도성’을 견지하면서 1인 절대권력자의 절대권위와 수령관을 기반으로, 조선노동당의 지도성을 실현하는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로 자신의 체제 성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2009년 현재 선군정치체제에서도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성격은 절대권력자의 권위를 정점으로 한 당이 제반 국가기구 및 주요 정책결정을 전방위적으로 지도하고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들의 사상논리에 따르면, 당은 전위적인 정치조직으로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기 때문이다.⁶⁾

둘째, 국가기구의 위상과 성격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수령과 당의 명령/지침을 인민에게 전달하고 시행하는 집행기구로, 1995년 이후에는 수령과 당을 대표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실행의 집행기구이다. 북한은 1948년 최초 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수상·최고재판소라는 3권 분립 형식의 합의제적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였으나,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으로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였다. 국가기구는 입법, 행정, 사법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입법부문은 인민회의, 행정부문은 주석·인민위원회·국방위원회·정무원, 사법부문은 재판소·검찰소 등이다. 그러나 삼권

6)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91.

위에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당이 있고, 국가기구에는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 역할을 하였다. 1992년 헌법까지는 김일성 주석이 노동당을 통해 국가기구를 지도하는 형태였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인 김정일의 선군정치체제로 들어서며, 주석제가 폐지되고 국가기구내 국방위원회가 강화되었으나 당의 지도성은 유지되었다. 그리고 2009년 북한은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통해 11년 만에 헌법을 개정했는데, 국방위원회 위상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당의 영도성’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철학사전』은 국가를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라 정의하고, “무엇보다 먼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온 사회적 범위에서 조직적으로 실현하며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그 위상과 성격을 정의하고 있다.⁷⁾

북한은 중앙집중제, 독재, 당과 국가기구 관계에서 ‘절대권력자를 핵으로 한 당적 지도와 전략 시행’이라는 스탈린식 사회주의체제 원리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1995년 이후 2009년 10월 현재까지 선군정치로 군의 위상과 역할이 절대권력자의 지휘 하에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군 역할이 비대해진 ‘변형된 스탈린체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조선노동당의 운영방식을 보면, 당 자체가 고유한 전위적 체계로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당을 통해 국가와 사회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수령은 당 조직을 통해 국가와 사회 전반 사업을 장악 및 통제한다. 북한의 행정, 입법, 사법 기관들은 당이 최고 지도기관으로 통제하고 있다. 당은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상급당에 하급당이 절대복종하며 전당은 당중앙위원회에 복종하고, 당중앙위원회는 수령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다. 수령은 당중앙위원회의 총비서로서 전당에 대한 지도 통제권을 가질 뿐 아니라 공격적인 지위 이상으로 절대적 존재이다. 당 조직은 기층 조직인 초급당 조직으로부터 군당위원회, 도당위원회, 중앙당위원회까지 각급 지도 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실지로 당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당기관의 전임일꾼들이다.

7)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91.

이러한 수령 중심 체제에 더하여, 1995년 이후 약 15년 정도의 ‘비상 위기관리체제인 선군정치’로 김정일 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이 몇 몇의 당내 주요 전문부서 부부장들과 모든 국정을 관리 및 지시하면서, 당 운영의 체계성은 현격히 약화되었다. 2005년 이후 탈북한 고위직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선군정치 이후 당내에서는 전문부서를 담당하는 당내 부부장들이 가장 중요한 파워 엘리트이고, 그 중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그리고 김정일의 측근들이 배치되어 현지도 인물 등을 선정하는 서기실 등이 가장 중요한 파워 엘리트 밀집 부서라고 한다.

탈북자 증언과 북한문헌 및 2009년 새 헌법 등을 교차 비교할 때, 2009년 10월 현재 당의 운영은, 전체적으로 ‘김정일 주도의 당 전문부서 라인 특히,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간부부 라인’과 ‘선군정치에 의한 군대의 당라인 특히, 당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인민군 총정치국-인민군 총참모부’를 중심으로 지도와 통제가 실현되고 있다. 한편 1980년 이후 비록 형식적 추인제도라 할지라도 당기구 중 최고 권력기구인 당대회가 2009년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당이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김정일의 개인적이고 비상설적인 은둔정치·연회정치 등 비제도적인 정치행보가 당 운영의 안정성을 침해하였다.

넷째, 국가기구의 운영방식이다. 북한 역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20세기 근대의 산물인 ‘공화국’을 골간으로 하고 있기에, 국가운영의 합의제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특징이 국민주권의 실현이나 민주집중제에서 ‘민주’의 무게 중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기구 중 하나인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선군정치와 김정일의 절대권력으로 전체 국가기구를 압도하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도 국가기구의 파행적 운영은 불가피하다.

구체적 운영 양상을 고위직 출신 탈북자 구술에 기초해 살펴보면, 예를 들어 국가 경제-행정기구라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인민무력부 등이 관할하는 특수경제는 당 산하, 정확히 김정일 가계자금 관리실로 제2경제 사업 담당부서인 당 산하 39호실에서 관리하고 내각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오로지 김정일의 방침과 싸인을 통해 일을 처리한다. 내각 총리와 부총리는 일반적인 인민경제 부서만 관리한다. 경제 및 무역, 외화벌이 등

몽치 돈이 움직이는 주요 결정과정과 단위는 김정일과 핵심 측근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인민무력부(일반범죄)와 국가안전보위부(정치사찰)는 내각 감찰 역할도 겸하며, 연합 그룹빠를 형성해 대대적인 캠페인 형태로 공동검열을 수행하곤 한다. 그 이유는 상호 목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감찰에서 예외로 하는 인물은 간부 자식, 비행사, 공작원, 주요 간부친척, 핵종사자 등 예민한 분야 종사자들로 권력자와 그 혈연이 아님에도 상응한 대우를 받는다.

2005년 현재 세관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관할하며 허가량(수량) 감찰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인민보안성에서는 외화를 관리하고 있다. 반면, 무역성은 기능이 축소되어 국제시장조사, 무역정보 및 가격 감독을 한다. 대외문제는 정책적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내각총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요 군사기구 중 군 사업 관련해서는 총정치국(정치사업 조직 집행)과 총참모부(군령권 행사, 군사작전 지휘)가 중요하다.

선군정치 이후 국가기구 운영이 ‘수령 유일지배와 당지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기구 내에서 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2009년 새 헌법에서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의 위상과 역할 강화라는 법제도적 현실화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선군정치 체제의 파행적 국가기구 운영은 ‘2012년 강성대국과 후계체제 구축’ 목표와 맞물려 일층 강화될 것이다.

나. 당과 국가기구의 관계의 비선형성

본 연구가 북한체제의 행위자의 중간층으로 규정한 당과 국가기구가 각각 절대권력자와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관계를 질서와 무질서라는 관점에서 첫째, 당과 절대권력자 관계의 질서, 둘째, 당과 국가기구 관계의 질서, 셋째, 당과 절대권력자 관계의 무질서, 넷째, 당과 국가기구 관계의 무질서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과 절대권력자 관계의 질서를 보면, 당비서국과 조직지도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틀어쥐고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정일은 2009년 10월 현재까지 당을 중심으로 ‘1인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국가권력구조는 형식상 3권 분리체제인 최고인민회의, 내각, 중앙재판소·중앙검찰소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당우위 원칙에 따라 삼권위에 실권을 행사하는 당이 있고 또 그 위에 김정일이 있다.

김정일은 당총비서와 조직지도부 부장으로 당을 장악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군정치’의 중심에 있다. 더욱이 북한체제 운영의 실세인 조직지도부 및 전문부서 부부장들, 군내 당사업 라인에 소위 ‘만경대 혈통’이라는 항일무장투쟁 세력의 자손이며, 자신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인물로 배치하고 이들이 서로 충성 경쟁하도록 유도하여, 체제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권력자를 정점으로 하는 ‘당과 절대권력자 관계의 질서’가 지속되는 것이다.

둘째, 당과 국가기구 관계의 질서이다. 앞서 밝혔듯, 북한의 국가기구는 수령-당과 인민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로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따라서 절대권력자가 노동당을 통해 국가기구를 지도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국방위원회가 점차 강화된 1992년, 1998년, 2009년 헌법 개정시에도 변화되지 않는 지속성이다. 선군정치체제에서 군사관련 주요 간부 이력을 보면 모두 당간부로 군이나 내각에 겸직을 하고 있으며, 주요 감찰은 당으로부터 받는다. 따라서 국방위원회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한편, 개별 구성원 측면에서도 생활과 업무 모두에서 당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관계로 질서 잡혀 있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당적 지도는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수준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수평적·수직적 당에 의한 국가기구 지도 관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당과 절대권력자 관계의 무질서이다. 당과 절대권력자 관계의 무질서를 보여주는 대표적 양상은 절대권력자와 소수 친위대 권력층의 지도/통제로 당 체계 및 제도의 형해화, 즉 당의 비체계적이고 무질서한 운영이다. 익히 알듯이 5년에 1회씩 개최되도록 되어 있는 노동당대회는 80년 이후 2009년 10월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열리지 않고 있으며, 6개월에 1회 이상 열어야 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1993년 12월 제6기 21차 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개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선군정치 체제에서 당과 절대권력자 관계의 무질서를 보여주는 대표적 양상은 다음의 두 가지로 그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은둔정치, 측근정치, 연회정치 등으로 표현되는 절대권력자를 중심으로 한 당 운영의 무질서는 절대권력자 개인에게 업무하중이 집중되는 구조를 창출하여, 절대권력자 개인에 의해 체제 전체의 안정성이 좌우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시스템 이론에 기초해 볼 때 체제 불안정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것이 김정일의 건강이 북한체제 전망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현실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특권계급 네트워크의 성격변화, 특히 세대별 의식변화와 돈(뇌물)에 의한 특권계급 관계 변화 조짐 등이다. 제도와 달리, 대인관계적 인맥정치의 특징은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 정치구조의 질서가 자리 잡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제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개인적 이익과 상황에 따른 각종 임명, 결정 등은 북한체제의 무질서를 증폭시키고 있다.

넷째, 당과 국가기구 관계의 무질서이다. 당에 의한 국가기구의 영도성(지도성)이 전제된다고 하여도, 선군정치 체제에서 무엇보다 당과 국가기구 관계의 무질서를 대표하는 기구는 김정일로 대표되는 국방위원회이다. 국방위원회는 북한 국가기구 체제도로 보면 국가기구의 하나로 최고인민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 군 행정기구이다. 그러나 선군정치 이후 국방위원회가 국가기구의 실세로 부각되고 선군정치를 주도하면서, 국가기구의 위상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을 지도/통제하는 양태를 취하고 있다.

‘선군사상’은 2009년 신 헌법에서 주체사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북한의 사상으로 법제도가 되었다. 이 선군사상의 법제도화는 향후 후계체제와 맞물려 북한의 당-국가기구 관계의 무질서를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국방위원회 위원의 증대와 위원들이 당에 고위직 인물로 겸직을 통해 당과 국가기구를 동시에 관장하면서, 역할의 혼선과 무질서가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특히 주목해 볼 점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당과 국가기구 행위자들 관계의 무질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군정치체제에서 군과 함께 북한 체제유지의 핵심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와 노동당 간의 관계에서 특히 지역단위에서 무질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간부인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보위부는 중앙 직속이기에 각 지역에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보위부에 걸려들면 각 급 당책임비서도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

당의 수평적·수직적 통제에서 설명했듯이, 공장·기업소에서는 여전히 초급당이 결정적 권력을 행사하는 데 이들은 구역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당원이 아닌 각 작업반 선동원을 선출할 때도 공장 초급당에서 구역당에 등록하게 한 후, 구역당의 비준이 있어야 선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구역당이 초급당에 미치는 영향력은 식량난 이전보다 상당히 약해졌다고 한다. 이처럼 중앙-지방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지역 단위와 인민생활의 자력 갱생을 강조하는 선군정치 체제에서 중앙과 지방의 당과 국가기구 개별행위자들의 관계는 선군정치 이전에 비해 무질서한 모습이 상당히 증대하였다.

5. 일반 주민

북한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를 집단의 사회정치적 기능과 체제 내에서 위치와 영향력에 따라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누자면 수령, 간부, 일반 주민으로 나눌 수 있다. 주체사상에서는 사회를 일종의 유기체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인민대중은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성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통일체”이며, 지도자인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전체 인민이 굳게 뭉쳐 하나의 통일체로 활동하게 하는 인민대중의 심장”이다. 간부는 뇌수이자 심장인 수령과 말단 기관에 해당하는 일반 주민들을 연결하는 혈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주민과 최고지도자간 관계: 시혜로부터의 독립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수령은 전체 국가 유기체를 이끌어나가는 중심이자 북한 사회라는 대가족공동체의 아버지이고, 일반 주민들은 수령과 당과 주민이 하나가 된 유기체 속에서 수령의 시혜를 받고 그 뜻을 받들으로써만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받아 생존하고 기능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구도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배급제와 복지제도를 비롯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와 분배제도라는 물적 기반과, 교육기관, 언론·문화매체, 대중조직 등 수령과

주민을 혼연일체화하는 각종 이데올로기적 기구들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는 그 이전 시기까지 유체적 사회관에 근거해서 유지되었던 최고지도자와 일반 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근본적 변화가 발생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되었다. 해방 후 50년간 북한 주민들은 배급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이 심화되자 국가는 배급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국가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각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존의 방도를 강구해야 했다. 자생적 시장화가 진전되고 이에 대한 당국의 제도적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개별 기업과 시장활동을 하는 개인이 국가와 수령을 대신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 주체가 되었다. 국가 배급망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가족이 시장과 연계된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로 기능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대가정’을 대체하여 개별 가족이 생계유지의 기본단위이자 생존을 위한 안전망이자 신뢰의 단위로 자리잡았다.

배급제와 국가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던 의료, 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 도덕적으로도 수령과 주민들을 결속하는 강력한 기제였다. 배급체계의 마비와 시장활동의 활성화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의 시기는 도덕적 지배의 위기와 생계논리의 부상에 따른 사회주의대 가족의 호주인 수령으로부터의 심리적 이유기(離乳期)이기도 했다.

국가와 최고지도자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이전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당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게 만들었다. 최근 들어서도 경제적 사정이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배급제의 복구를 장담하지만 배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국가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나. 주민과 간부 간 관계: 타협과 기생

북한의 간부들에게는 “당의 골간 역량이며 당정책을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라는 사회적 역할이 부여된다. 간부들은 수령과 주민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북한의 중간 간부와 하층 간부들에

게 주어진 매개의 공간은 수령과의 관계를 그대로 반복하는 충실한 재현과 전달의 공간이 아니라 간부들과 주민들 양자간의 공모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전유의 공간이다.

간부들은 주민들과의 일상적 대면 속에서 교환관계를 만들어낸다.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간부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주민들의 일상에 약탈적으로 기식하면서 교환관계를 갖는다. 생산관료들은 작업장에서 권위적으로 군림하거나 노동을 규율하는 수단으로 소소한 분배의 특혜와 편의 제공을 통해 복종을 교환한다. 주민들은 간부들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제공한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다.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과 이후 시장관계의 확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조직형 뇌물’과 연줄, ‘보호대가용’ 뇌물과 연줄, ‘횡령’에 해당하는 개인 부패, ‘생활형 뇌물’등 간부들의 흥정과 부패 현상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시장 관련 경제활동이 전 주민층으로 확산되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활동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보호대가용’ 뇌물·연줄과 ‘생활형 뇌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간부들은 지배자에게 ‘매수된 관료’이며, 주민 위에 ‘군림’하면서 ‘약탈’을 자행하는 존재이며, 일종의 ‘작은 수령’들이다. 간부들의 뇌물 수수가 광범위한 사회현상이 되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비리와 뇌물, 탈법은 모든 층의 간부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일반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주로 시장통제나 일탈행위 통제와 관련하여 대면하게 되는 하급 간부들의 행위이다. 따라서 국가정책에 대한 불만은 최고지도자와 당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하급간부나 군당책임비서나 직장 책임자 같은 중간간부들에게 전가된다. 주민들의 불평과 비난은 고위 관료나 최고지도자가 아닌 중간간부들에게 집중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의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들에게 기생하는 행위가 중간간부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그들이 대행하고 있는 통치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간부라면 누구나가 다 그럴 정도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간부들에 대한 불만은 당이나 고위엘리트나 최고지도자에 대한 불만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고위엘리트층은 문제의 책임을 중간간부층에

게 전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체제와 지도부로 향하는 것을 차단한다.

다. 일반 주민간 관계: 사적 관계망의 팽창

일반 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개인주의의 확산과, 생산·재생산·소비의 단위로서 가족의 복귀, 이에 따른 사적 영역의 팽창이다. 경제난 이후 국가적 공급체제와 사회보장제도가 유지되었던 시기에 공적 영역과 상당부분 중첩되었던 소비와 여가활동이 개별 가족의 관할권 내로 들어 오게 되면서 사회적 행위 주체로서 개인과 가족의 의미가 확대되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 이외에는 다른 사람의 삶을 생각하거나 배려할 물질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경유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결속하였던 심리적, 도덕적인 유대가 해체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었다. 집단주의적 유대는 2000년대 이후에도 복구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가족이 시장과 연계된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로 기능하게 되면서 집단주의적 의식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유대가 사적 관계망에 기초한 배타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유대로 복귀되었다. 이것은 결국 사적인 소유의식의 강화와 공적 무관심의 증대를 낳을 수밖에 없고, 점차 사회적 개인화 경향과 사적인 가족주의의 강화를 가져오게 된다.

사회적 행위주체로서 개인과 가족의 복귀는 특히 소비와 여가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분화되기 시작한 개인의 사적 욕망이 의식주의 차별화된 소비와 여가 생활의 향유에서 표현의 출구를 찾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개인주의 확산과 사적 영역의 팽창이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 의식을 무더지게 함으로써 체제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세계 각지에서 북·중 접경지역을 통과해서 각 지방의 시장을 거쳐 북한 주민들의 안방으로 흘러 들어가는 각종 상품들은 북한의 주민들에게 단순한 소비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간 접촉이 차단되었던 외부 세계의 아이콘이자 외부와의 접촉 통로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 영화, 한국 드라마 등 외국의 문화상품이다. 북한 주민들의 여가 사적 영역 속에서 개인적 여가

활동 시간에 소비되는 이러한 문화적 상품들은 역설적으로 그간 단절되어 있던 외부 세계와 북한 주민들을 잇는 중요한 매개고리가 되고 있다.

경제난 이후 주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독립은 또한 주민들을 공적 관계망의 속박으로부터도 해방시켰다. 축소되고 이완된 공적 관계망을 대체한 것은 사적 관계망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이었다. 현재 북한에서 발전하고 있는 사적 관계망은 시장의 상거래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의 관계망이다. 특히 각 지역에 산재해있는 시장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루는 무수한 점과 선들이 만나고 진화한다. 시장은 사적 담론이 형성되는 공간이자, 공론화된 사적 담론이 사적 관계망의 공간적 확장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현재 북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즉 체제 변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비공식적 사회 조직의 존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민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도 부재하고,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대안적 담론의 창출이나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 형성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발원지는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 발전되고 있는 사적 관계망일 것이다.

라. 행위의 규칙과 창발성의 영역

북한의 사회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첫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탈행위를 통한 사적 이익 극대화, 둘째, 일상형의 소극적 저항 형태로 불만 표출, 셋째, 체제 내 적응이 불가능할 경우의 대안으로서의 탈북이라는 행위의 규칙을 찾을 수 있다.

북한 사회에서 일반 주민과 간부 등 사회적 행위자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때 적용하는 행위의 규칙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탈행위를 통해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개인적, 집단적 수준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 일탈행위는 경제난 이후 일종의 생존전략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인식, 공유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의 규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회적 행위자들의 저항은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소극적인

저항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과 연계된 상행위가 확산되고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신소’와 같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통로를 통한 불만 제기, 푸념과 닢두리 형태의 우회적 비난, 특히 상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항의와 같은 형태의 저항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은 국가 시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크게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우회적인 언술을 통해 국가를 대리하는 하급간부들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한다.

북한의 일반적 사회행위자들이 보여주는 소극적 저항, 일상형의 저항은 저항행위인 동시에, 대부분의 경우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체제순응 행위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권력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한편으로는 이전의 사회주의 체제와 강압적 사회 통제의 구조 속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숨구멍을 열어놓음으로써 체제 변화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성격을 변형시키고, 경우에 따라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요소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행위자들이 보여주는 저항의 이중성으로 인해 체제의 안정과 붕괴 사이의 간격은 그리 크지 않다.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 체제 내에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은 그 사회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로 이주하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북한 사회에서 탈북이 급증한 계기는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이다. 고난의 행군기를 지나 경제적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고 국가의 배급이 아니더라도 주민들 각자가 생존의 방도를 찾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한 탈북은 크게 줄어들었다. 대신 다른 이유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들이 늘어났고, 탈북의 동기와 의미가 다양화되었다. 2000년대 이전의 탈북이 식량난을 피해 양식을 구하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2000년 이후 탈북은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의 모색, 체제에 대한 불만, 처벌에 대한 기피 등 삶의 질적 차원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탈북의 동기가 작용한다.

생계의 곤란과 사회적 불만을 북한 사회 체제 자체의 변화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북한 사회 외부로 탈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민들의 탈북이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될 수만 있다면 북한 내부 체제의 안정적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부도 북한 내부의 식량사정과 대외관계 등에 따라 주민들의 탈북에 대해 일시적 묵인, 방조와 강력한 단속을 오가는 대응을 하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창발의 가능성이 높은 ‘혼돈의 가장자리’로 중국과의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과 여러 문화 매체들을 통해 중국, 남한 등 외부세계의 문화와 정보가 유입되고, 상거래관계망이나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이러한 문화와 정보가 전사회적으로 소통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을 통해 유입된 비디오와 컴퓨터, CD기기가 북한 주민들에게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대도시와 국경연선 지역을 중심으로 남한 영화와 드라마, 외국 영화를 접하는 주민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금지된 문화의 향유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친구 등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람들끼리 국가가 통제하는 내용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은 매우 사적이고 비정치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공간이 주민들 개개인이나 가족에 국한된 형태로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 공적 연결망을 통해 연결되고 공유되고 교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인 여가생활의 영역은 밀폐된 개인적 공간을 넘어서 공적 영역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배적 담론과 분리되어 사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사적 담론은 사회적 행위자들간의 정보전달과 공유의 과정을 통해 일종의 대항 담론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북한의 사적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적 담론이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는 공론장으로서의 성격을 갖추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 사회에서 국가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민사회 영역의 존재를 현 단계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네트워크의 증가, 외부 정보 및 문화의 유입이라는 조건 속에서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내부 정책 변화로 인한 창발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제 4 장

탈냉전 이후 국제 관계와 북한의 변화

북한계 이북에 대한 북한의 정정국가화 방안 연구



제 4 장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1. 연구목적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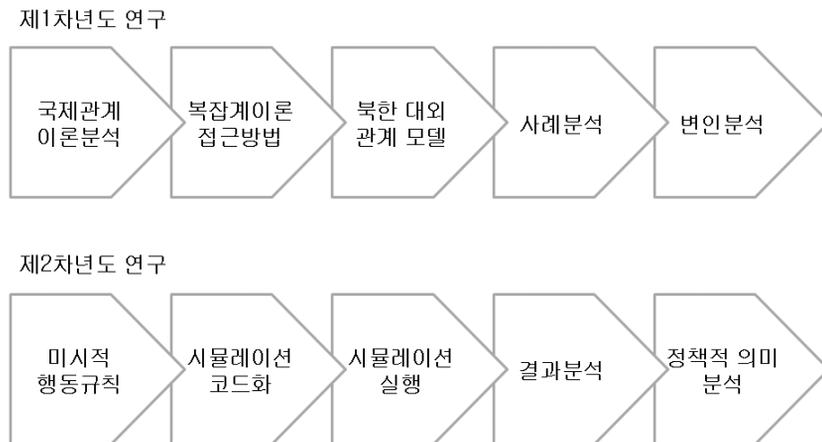
본 연구는 탈냉전기에 들어와 변화하고 있는 국제관계가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하여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정부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목표 아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정상국가화란 북한이 인권 유린, 테러지원국,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 등 국제사회가 정한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을 중지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표는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쳐 추진되어온 다양한 대북정책의 맥락 속에서 볼 때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북한의 대외관계를 모델화하고, 그로부터 미래의 행동패턴과 선택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북한의 대외관계를 모델화하는 작업은 기존의 북한연구가 대부분 지역연구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는 반성으로부터 시작한다. 기존의 북한연구는 대부분 현황 소개를 위한 사실관계 기술과 나열식 전개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에 관련된 정보 취득과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석작업들은 사실관계의 신뢰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미래 행동패턴을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행동은 지역연구자들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의문투성이였고,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북한은 정체불명의 대상이었다.

* 본 내용은 민병원·조동준·김치욱,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09-16-04)』 연구를 요약한 것임.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연구의 한계를 감안하여 초점을 국제관계에 둔 새로운 각도에서 북한문제를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관계는 개별 국가의 자체적인 속성보다는 국가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더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국가 내부사정보다는 대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가의 바깥 영역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을 중시하며, 국가들 사이의 권력관계와 상호교류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측면들에 관심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대외관계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경제문제와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갈등관계, 특히 ‘취약국가(weak state)’와 ‘불량국가(rogue state)’의 이미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관계의 역학구조를 모델화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즉 단순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기보다 이미 알려진 내용들을 국제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다시 복잡계이론의 틀 속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로 구현함으로써 이론적·정책적 맥락에서 의미 있는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림 4-1> 연구의 기본 구도



2. 국제관계와 복잡계이론

가. 국제관계의 환원주의와 구조주의

국제관계이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합리적 선택 패러다임은 수학적, 연역적 추론의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현실세계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 매우 제약될 수밖에 없다. 사회집단이나 국가, 글로벌 정치 등과 같이 거시적인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수많은 미시적 차원의 전제조건에만 의존함으로써 현실적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는 미시경제학적 접근법의 한계는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 개디스(John Gaddis)는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면서도 현실과 괴리된 사회과학의 많은 이론들을 비판하고 있다. 1980년대 말 냉전 체제가 무너질 때 사회과학의 대다수 이론들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가? 왜 사후에나 설명이 가능했는가? 인류의 생활과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는 이러한 거시적 현상에 대해 미시경제학적 접근법은 어떤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가? 과학적 접근이라는 포장 아래 자행된 수많은 시도들은 결국 직관이나 비과학적 수단에 의존하는 전통적 접근방식에 비해 결코 더 나은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은 급변하는 21세기의 정세를 진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국제관계의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상당수의 전통적인 이론들은 합리적 선택이론과 같은 환원주의적 설명방식을 비판하면서 거시적 변수인 ‘체계(system)’와 ‘구조(structure)’를 강조하는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전체(whole)로서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하며, 전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단위체보다 오히려 그들의 위치와 배열, 즉 ‘구조’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원주의의 대안인 것처럼 보였던 체계이론은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강대국 중심의 이론이었다는 것이었다. 구조와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안정적인 질서를 추구하던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체계이론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이 드러났다.

하지만 체계이론을 비판했던 국제관계의 구조주의 역시 이론의 정태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월츠의 구조주의적 국제관계이론은 이전의 이론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많은 현상들을 설명해냈지만, 그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구조’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구조를 단지 주어진(given) 설명변수로만 간주한다는 것은 분명 동태적(dynamic) 측면을 다루기에는 한계를 지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위체와 구조를 분리하고, 상대적으로 구조에 중점을 두면서 단위체와의 역학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등한시된 것이 이러한 문제를 낳은 것이다. 결국 월츠의 시각은 지나치게 체계의 구조를 강조한 나머지 그것을 당연하게 ‘주어진’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데 비판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제 냉전시대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21세기의 국제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차원의 ‘행위자’와 거시적 차원의 ‘구조’를 동시에 살펴보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위체와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웬트(Alexander Wendt)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국제관계라는 대단히 규모가 큰 시스템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단위체에 의존하는 환원주의나 구조를 맹신하는 구조주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단위체와 구조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변증법적 발전과정을 겪어나가는 동적 메커니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데 있어 복잡계이론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환원주의에서 강조하는 ‘단위체’의 요소와 구조주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구조’의 요소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복잡계이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구조라는 거시적 변수가 행위자라는 미시적 변수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바뀌는가의 동태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구현하는데 있어 복잡계 패러다임은 사회과학 주류 이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새로운 패러다임: 복잡계이론이란 무엇인가?

기존 연구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잡계이론은 과연 무엇인가? 복잡계이론은 그동안 수학이나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들어 사회과학이나 심지어 인문학 및 예술 분야로까지 파급되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학문적 조류이다. 복잡계이론의 핵심 용어인 ‘복잡계(complex systems)’는 개개의 학문 분야에서 관찰대상이 되는 시스템 또는 체제가 매우 복잡하여 이를 단순한 방법으로 이해하기는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이론은 자연 및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이러한 체계의 복잡성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집단적 현상이라는 인식론적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예를 들어 생물학에서 하나의 세포는 수많은 분자와 원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복잡계이며, 사회적으로 볼 때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 혼잡도 수많은 자동차와 사람들이 서로 얽히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복잡한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자연 및 사회체계의 기본적인 속성으로서 규정되어온 ‘복잡성(complexity)’의 개념은 ‘단순성(simplicity)’의 개념과 상치되는 것으로, 복잡계이론에서는 그동안 학문의 인식론적 기반을 이루어온 뉴턴식 접근방식의 한계를 먼저 지적한다. 뉴턴식 세계관은 변수들 사이의 선형(linear)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예를 들어 한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있다면 그 물체의 동적 궤도를 완전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결정론(determinism)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구성요인들의 패러미터 값을 알 수 있다면 자연 및 사회의 어떠한 현상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뉴턴식 과학은 복잡계를 계속 쪼개어 들어가 물질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왔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양자역학 및 열역학의 발전과 더불어 이와 같은 뉴턴식 접근방식이 지닌 한계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늘날 새로운 과학적 이론들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복잡계이론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일련의 이론들이 합쳐져 형성된 거대한 이론 집단이며, 이러한 점에서 과거의 뉴턴식 세계관이 지닌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복잡계이론은 생명체 또는 사회체계가 하나의 ‘질서’로서 존재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생명체들이 누려온 ‘진화’ 현상이 하나의 ‘질서’로서 자리 잡게 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질서와 무질서의 방향성에 관한 해답은 한 체계

내의 엔트로피가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외부와 교환되기도 한다는 발견으로 가능해졌다. 즉 전자의 경우는 모든 체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오로지 생명체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에너지의 흡수 등 신진대사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엔트로피를 외부로 발산함으로써 조직화된 질서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질서체계와 무질서체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두 체계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물리학적, 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질서 체계는 엔트로피 값이 제로인 상태에서 외부와의 엔트로피 교류도 전혀 없는 균형(equilibrium)체계이다. 반면에 무질서체계는 구성원들의 움직임이 끊임 없이 일어나면서 ‘균형상태로부터 크게 벗어난(far from equilibrium)’ 체계이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엔트로피의 값이 극대화되어 무질서를 형성하게 되는데, 생물학이나 사회과학 등에서는 이러한 엔트로피 증가현상과 반대되는 질서의 형성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무질서의 증가와 질서의 생성이라는 두 가지의 엇갈린 방향성을 하나의 통합된 이론으로 묶는 시도들이 바로 복잡계이론으로 자리잡아온 것이다. 시스템 내부의 여러 요소들이 자기조직화를 통해서 하나의 질서를 형성하는 체계를 하나의 ‘복잡계’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복잡계이론이며,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질서와 무질서의 스펙트럼 위에서 일어나는 ‘질서’ 현상의 발견과 설명이 복잡계이론의 중심 목표가 되고 있다.

다. 국제관계와 복잡계이론: 적용 가능성

앞서 논의한대로 복잡성이란 현실 자체의 속성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규정 하는데 이용되는 인식론적 개념이다. 복잡계이론에서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서 과학적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존재론적 가정을 거부한다. 다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복잡성 뒤에 내재되어 있는 일정한 질서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을 과학의 근원적인 목표로 삼고 있을 따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복잡계이론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식론이다. 우리가 탐구하는 ‘질서’는 그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우리의 시각에 의해 규정되고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는 항상 불확실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개개

세포들이 미시적 차원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변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복잡계가 바라보는 세상도 구성원들 사이의 끝없는 연계성으로 인하여 항상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모습으로 비쳐진다. 결국 복잡계이론은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질서의 현상을 발견하고 설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국제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미시경제학적 환원주의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한 채 분석적으로 쪼개어 들어가기만 하는 연구들이 많이 존재해왔다. 길핀의 헤게모니 주기이론은 개인 또는 국가의 합리적 계산능력이라는 전제 위에 만들어졌으며, 부에노 드 메스키타의 전쟁론 역시 기대효용의 계산을 통해 전쟁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왜 국제관계 분석의 기본 단위체가 개인, 그것도 ‘합리적인 개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혼란은 기본적으로 환원주의적 접근방식이 지닌 장점과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즉 이론적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환원주의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따라서 시스템의 하부 단위체들이 작동하는 원리를 찾아야만 하지만, 이러한 환원이 무한정 반복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인식론적 차원에서 복잡계이론은 구조주의의 한계와 환원주의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거친 수준의 환원(coarse-graining)’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제시한다. 즉 거시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미시적 작동원리를 제시하는 ‘환원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분석수준의 선택에 있어 한두 단계 정도만 아래로 내려오면 충분하다고 본다. 즉 끝없이 환원을 반복함으로써 세포나 소립자의 작동원리까지 파헤칠 필요가 없다고 봄으로써 ‘반복적 환원주의’의 덫을 피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합리적 선택이론과 같은 여타의 환원주의적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적어도 인간행위의 근원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즉 국제관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미시적 분석이 인간의 수준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나 집단, 국가 등 다양한 분석수준이 연구자의 선택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복잡계이론의 환원주의적 분석은 경제학적 접근방식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분석수준의 스펙트럼을 지닌다.

복잡계이론에서는 또한 낮은 분석수준의 ‘단위체’ 자체보다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명하는데 더 주안점을 둔다. 깊숙하게 쪼개 들어가는 것보다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하부 단위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비선형 상호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학적 접근방식에서 주로 다루는 단위체의 행동규칙보다 단위체와 단위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규칙을 찾아내려 한다. 따라서 복잡계이론의 환원주의를 굳이 정의하자면 기존의 ‘요소환원주의’가 아닌 ‘관계환원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미시적 단위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요소환원주의나 구조주의의 전제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기술적으로 정교한 모델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또 경험적으로 풍부한 자료들을 동원하지도 않았지만, 이들 국제관계이론가들의 복잡계적 시론들은 기존의 주류 이론과는 완연하게 다른 각도에서 국제관계의 맥을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라. 새로운 연구방법: 시뮬레이션과 행위자기반 모델

복잡계이론에서는 관찰과 이론화라는 학문적 작업에 있어서 연역적(deductive) 접근방식과 귀납적(inductive) 접근방식의 중간적 입장, 또는 혼합적 방법을 취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학적 엄밀성을 강조하는 형식논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곧 합리적 선택이론과 같은 완전한 연역적 접근방식을 배척함을 의미한다. 특히 경험적 차원에서 시뮬레이션 기법이 자주 이용되는데, 이것은 가상시스템 ‘환경(environments)’을 설정하고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행위자(agents)’를 등장시킨다. 또한 행위자 상호 간에, 그리고 행위자와 환경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규칙’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규칙은 대부분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시스템의 각종 요소들이 갖는 패러미터 값들이 설정되며, 이로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시스템의 현상들을 관찰하게 된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현상은 대부분 행위자 차원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창발적(emergent)’인 것들이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국제관계의 필연성이 만들어내는 거시적 패턴 뿐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상황의존적 요소들이 어떻게

거시적 패턴들을 바꾸어나가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국제관계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지를 실험해볼 수 있다. 임의적이거나 상황의존적인 요소들을 상정함으로써 작은 변수 값들의 변화가 다양하게 상호작용함으로써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동역학적으로 만들어내는 도구가 바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관계의 사건이 지닌 상황의존성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예측이 항상 제약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연적인 요소들을 통해 드러나는 국제관계의 중요한 맥(脈), 즉 패턴을 짚어낼 수 있다.

오늘날 복잡계이론을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 원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연구들은 첨단 시뮬레이션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복잡계이론의 제 저자들이 이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된 것은 합리적 기대이론에 대한 복잡계이론의 반발과 큰 연관이 있다. 복잡계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학적 모델의 강력한 추론에 찬성하지만 그러한 수리모델링의 과정을 통해서 ‘복잡한’ 현실 주제들을 결코 의미 있게 다룰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복잡계이론에서는 통계분석 등 경험적 데이터분석에만 의존하는 것 역시 거부한다. 이론적 틀을 결여한 데이터 분석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복잡계이론은 양 극단의 중간적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중간적 입장은 결국 양 극단의 방법을 배척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두를 포괄하는 통합모델을 수립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복잡계이론을 응용하여 사회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많은 연구자들은 행위자기반 모델(agent-based models)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왜 행위자기반 모델을 사용하는가? 이를 논의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과학적 연구에 왜 모델이 필요한가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모델은 현실과 이론의 중간 연결자 역할을 담당한다. 모델중심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복잡계이론의 행위자기반 모델은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이론화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이질적인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복잡하게 드러나는 현실을 행위자기반 모델로 재구성하고, 이론적 명제를 이와 같은 모델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론적으로 매우 합당한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들이 대부분 동일한 유형의 행위자들과 균형(equilibrium) 개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온 반면, 복잡계이론에서는 이질적 행위자들의 임의

적인 행동과 연결망을 강조하면서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복잡성의 근원을 추적하는데 적절한 모델들을 양산해준다.

행위자기반 모델은 행위자 개체가 환경 또는 시스템 내에서 적응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도구이다. 특히 개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결정이 전체 시스템 차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는데 있어 기존의 수학적 접근법이나 통계적 접근법에 비해 유리하다. 행위자 개체는 다른 행위자들 및 주위환경과 동시에 상호작용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조절하고 변화시킨다. 이와 같은 적응(adaptation)과 조절(adjustment) 행위를 통해 행위자기반 모델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거시적으로 일어나는 ‘창발적(emergent)’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행위자기반 모델은 전통적인 미시경제학적 접근법, 특히 연역적·수학적 도구를 주로 사용하는 하향식(top-down) 논리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행위자기반 모델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시적 구조나 현상을 생성하는 충분조건으로서 ‘미시적 조건(microspecifications)’을 탐색한다. 거시적 현상이 설명의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거시적 구조 내의 행위자들의 어떤 행동규칙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가를 살펴본다.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먼저 시뮬레이션이 발생하는 환경(environments)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적절한 행위자(agents)를 상정한다. 다양한 속성을 지닌 이질적 행위자들은 각자 행동규칙(rules)에 따라 움직이며, 개개의 규칙에는 수치화할 수 있는 패러미터값이 부과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작위로 생성된 수치가 대입되기도 하며, 현실 세계에서 유추한 범위 안에서 패러미터 값이 정해지기도 한다. 이처럼 환경과 행위자가 설정되면 다음으로는 ‘시간(time)’의 요소가 투입되는데, 이것은 행위자의 규칙과 패러미터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만들어 낸다. 시스템 내부에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환경을 만들고, 그로부터 거시적 차원에서 관찰의 대상이 되는 구조적 현상이 창발(emergence)하는 과정이 구현되는 것이다.

3. 비(非)정상국가와 외교정책: 개념과 이론틀

가. 실패국가와 취약국가의 개념

국가의 ‘실패(failure)’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는 1994년 미 행정부의 주도 아래 시작되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앨 고어(Al Gore)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구성된 ‘국가실패 태스크포스(State Failure Task Force)’는 이와 관련된 위협을 평가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많은 데이터와 연구작업들을 조사, 편찬하였다. 이 작업에서는 국가의 ‘실패’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상(normal) 국가의 틀에서 벗어난 요소들을 대부분 포함시키고 있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정치적 권위와 능력이 미흡하여 법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와 폭력적 분쟁이 난무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하게 만연해있으며, 이웃 나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한 국가간 테러행위나 국내 테러행위를 조장하는 경우도 국가의 실패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패국가(failed state)의 개념은 다소 모호하고 광범위하지만, 정치적 능력의 부재 또는 취약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거론되어왔다. 정치적 능력은 다양한 종류의 정치적 재화, 즉 안보, 교육, 보건, 경제, 복지, 환경, 질서 유지, 사회 인프라 확보 등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제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실패국가의 사례로 꼽혀왔다. 지난 10~20년 간의 사례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부룬디, 콩고공화국,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수단 등이 국가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어 왔으며, 소말리아의 경우 실패국가의 단계를 지나 ‘붕괴국가(collapsed state),’ 즉 무정부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가의 붕괴란 실패 국가의 극단적인 형태로서, 국토 전역에 걸쳐 정치적 권위가 부재한 현상을 일컫는다. 소말리아의 경우 지역 군벌들이 할거하면서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해적문제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실패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 ‘취약국가(weak state)’

이다. 오늘날 정치적 재화를 제공하는데 있어 국가의 능력과 권위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국가실패나 국가붕괴에 다다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실패국가’의 개념과 ‘취약국가’의 개념 사이에 일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약국가의 경우 내전이나 경제적 실패 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대외원조 또는 군사적 지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스리랑카의 경우 20여년 이상 끌어온 내전으로 인해 정부의 통제력이 대단히 취약한 국가로 간주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 등 다른 기준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여온 관계로 실패국가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고 있다.

나. 불량국가와 국제사회의 담론

이러한 분위기는 1970년대 후반 미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불량국가’의 기준이 대내적 측면에서 대외적 측면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리비아와 이란 등 제3세계권 국가의 테러지원행태에서 비롯된 이 기준은 곧 불량국가의 판별조건 중에서 주변 국가들에 가하는 위협의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여기에는 미사일 확산이나 핵무기 보유시도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기준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1991년 걸프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클린턴행정부에 들어와 탈냉전의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기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되었는데,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을 글로벌 차원에서 봉쇄한다는 냉전전략을 대신하여 새롭게 지역 차원에서 제기되는 불량국가들의 위협을 막기 위한 지역전략이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미국의 ‘불량국가’의 개념은 세 가지의 기준에 근거한 것이었다: (1) 대량살상무기 추구, (2) 테러리즘 지원, (3) 미국의 이해에 대한 지역적 위협. 하지만 진보성향의 클린턴행정부에서 수립된 이러한 현실주의적 ‘불량국가’ 개념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대폭 완화된 형태로 수정된다. 2000년 클린턴행 정부는 ‘불량국가’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강한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관심대상국가(concerned state)’로 다시 명명했다. 얼핏 보면 말장난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클린턴행 정부는 전략과 정책기조 사이

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불량국가의 기준 자체에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시리아의 경우에는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면서 테러리즘과 연관되어 있었음에도 불량국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반면, 미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고 볼 수 없는 쿠바는 자주 불량국가 명단에 오르내렸다.

‘불량국가’는 클린턴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 전까지는 단순히 ‘미국의 관심 대상인 국가’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미국의 특별한 관심은 주로 실패국가와 취약국가 등 대외원조를 통해 지원해야 할 국가들에 치우쳐 있었다. 그럼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붕괴나 실패가 이웃국가나 국제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지칭한 ‘악의 축’ 대상과 불량국가의 개념이 동일시되면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띠게 되었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불량국가는 대체로 국제규범을 거부하고 테러리즘을 지원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협한다. 국내적인 속성과 행태를 강조하는 경우, 국내적 불평등·차별·억압의 정도가 극심한 국가들을 불량국가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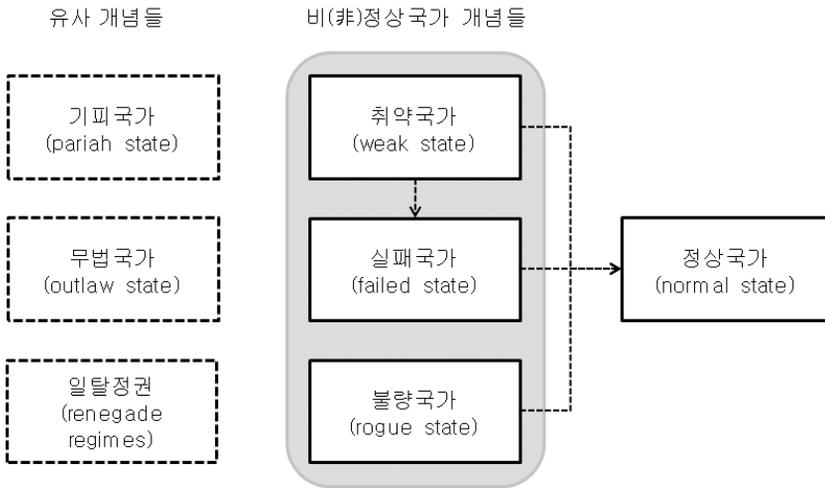
다. 국가 유형의 개념들: 정상국가와 비(非)정상국가

오늘날 국제사회는 담론을 주도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표준 상태 또는 규범을 벗어난 국가를 비정상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개념들이 역사적 배경 하에, 다양한 시대적 환경과 정책적 의도 아래 만들어진 것으로서, 오늘날 북한을 이해하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필요한 모델을 구축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우선 ‘정상국가’의 개념을 중심축으로 하되, 이를 위해 필요한 상대 개념들로서 취약국가, 실패국가, 그리고 불량국가의 담론체계를 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취약국가와 실패국가는 기존에 국제사회의 원조와 긍정적인 개입을 야기하는 조건으로서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불량국가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널리 사용된 개념이다.

다음 <그림 4-2>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핵심 개념 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 ‘기피국가’나 ‘무법국가,’ 또는 ‘일탈정권’ 등의 개념이 자주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북한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이해하는데 있어 크게 ‘취약국가’ 및 ‘실패국가’라는 한 축과, ‘불량국가’라는 또 다른 축을 주된 개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1990년대 이전의 북한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기아와 빈곤, 저발전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관심과 원조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으로 연결된다. 이에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위협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무력행사를 포함한 제재와 보복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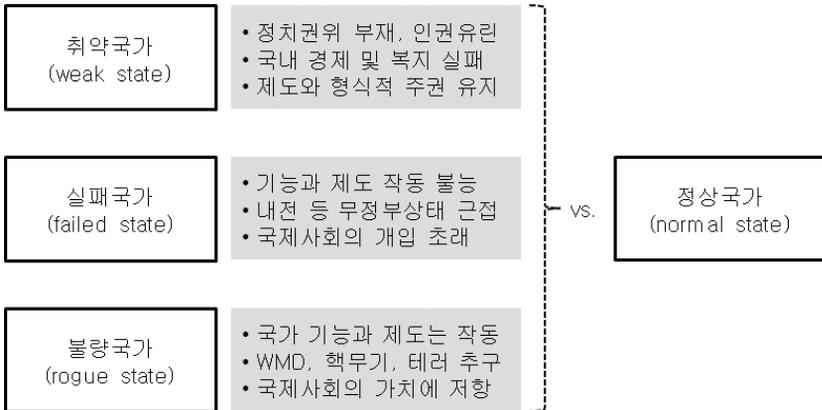
<그림 4-2> 정상국가와 상대 개념들



이러한 개념군을 동원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틀로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정상국가의 개념이 기존의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구성원을 가리킨다는 전제 하에, 그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다만 기존의 국제관계 이론에서 ‘정상국가(normal state)’라는 개념이 이론적으로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직접적인 개념 설정을 하기보다는 그것의 상대적인 개념, 즉 취약국가, 실패국가, 불량국가의 요소를 검토함으로써 역으로 정상국가의 조건을 추정하고자 한다. 다음의 <그림 4-3>는 이러한 정상국가의 개념 설정을 위한 상대 개념들의 핵심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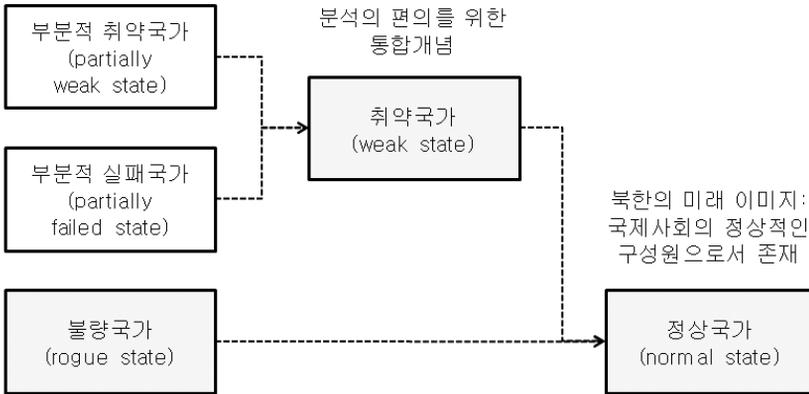
<그림 4-3> 정상국가 상대 개념의 핵심요소



한편 미국의 주도 하에 수립된 ‘불량국가’의 개념은 취약국가나 실패국가의 경우와 달리 국가의 기능이나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불량국가는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자 하며, 테러 등을 통해 정상적인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기 어렵고, 대외적으로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위협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를 일컫는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수립되어온 국제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에 대하여 도전하는 경우 불량국가로 낙인찍히곤 한다. 다음 <그림 4-4>은 이상에서 논의한 여러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 북한의 대외적 이미지는 대체로 ‘취약국가’ 및 ‘불량국가’의 개념으로 집약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를 극복하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상국가’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4-4> 북한의 이미지: 현재와 미래

북한의 현재 이미지:
국제사회의 우려와
위협을 제기하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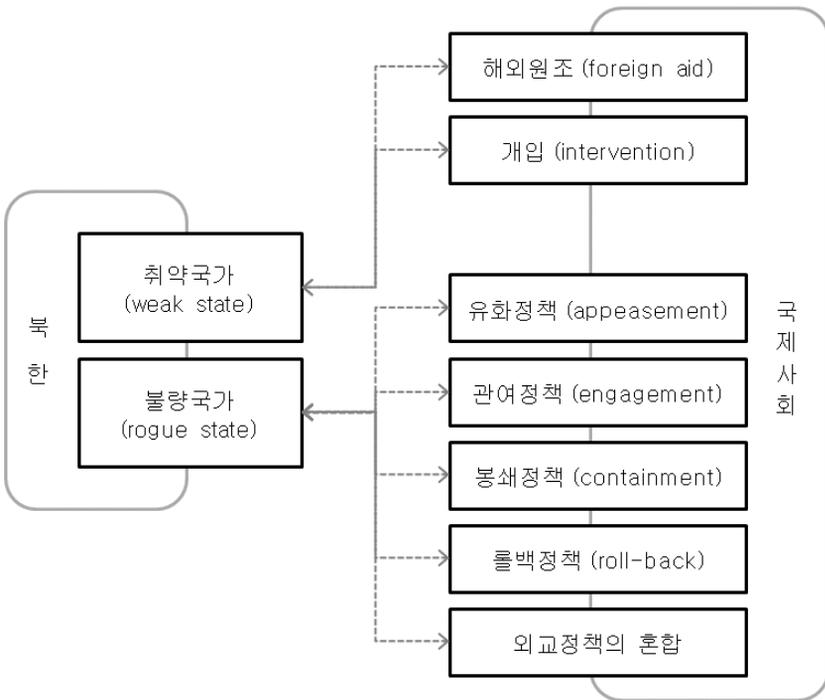
라. 국제사회의 대응과 외교정책

본 연구에서는 취약국가와 불량국가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 형성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련된 국제사회의 대응과 외교정책 유형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의 대외관계는 두 가지의 이미지, 즉 ‘취약국가’와 ‘불량국가’의 두 가지 이미지를 대표적인 축으로 하여 이루어져왔다. 물론 이와 같은 두 가지 이미지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중국-북한 관계와 같이 양국 간에 현실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교류의 통로가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기본 주제로 하고 있는 까닭에, 북한에 대해 부과되는 ‘비(非)정상국가’의 이미지가 대외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하되, 이미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정책적 선택과 결과가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가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렇게 설정된 모델은 앞서 논의한 행위자기반 모델의 기본 원리에 맞추어 행위자들의 행동패턴을 결정하는 기본 규칙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탐색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한정책 유형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

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유화(appeasement)정책 및 관여(engagement)정책과 같은 온건책, 무관심(non-entanglement)정책과 같은 중립적 정책, 그리고 봉쇄(containment)정책 및 롤백(roll-back)정책과 같은 강경책이 포함된다. 한편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행동에 대응하는데 있어 여러 외교정책 유형이 혼합될 경우 정책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외교정책의 유형을 비정상국가의 유형과 대비시켜보면 다음 <그림 4-5>와 같다.

<그림 4-5> 비(非)정상국가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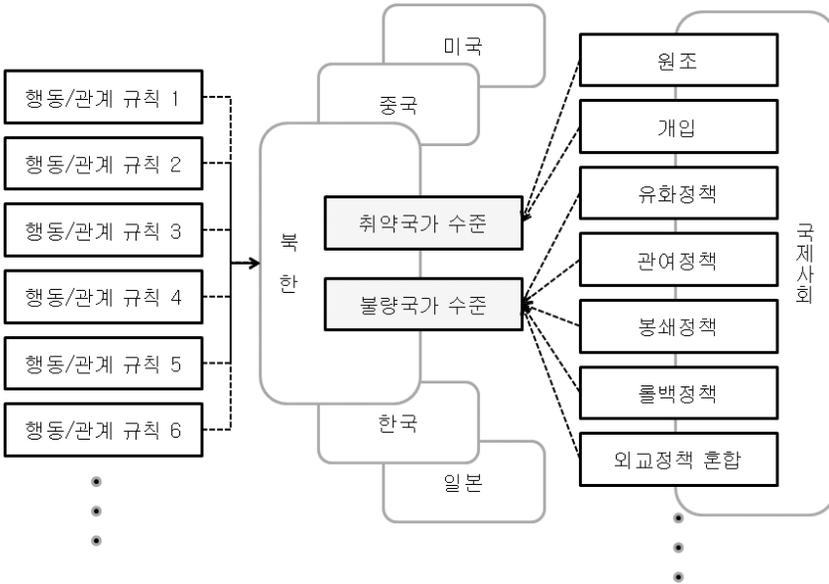
마. 북한 대외관계의 행위자기반 모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먼저 ‘비정상국가’의 개념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국제관계이론에서 정상국가의 개념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국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개념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비정상국가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크게 ‘취

약국가'와 '실패국가,' 그리고 '불량국가'로 집약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대체로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가 '불량국가'인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정책적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크게 유화정책, 관여정책, 봉쇄정책, 그리고 롤백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매우 온건한 정책으로부터 매우 강경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스펙트럼 상에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정책옵션들이 동시에 혼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유형들이 불량국가를 다루는 대안이라면, 해외원조나 인도주의적 개입은 '취약국가'인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다. 물론 이러한 대안들은 이론상의 옵션일 따름이며,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것이다. <그림 4-6>은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연구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6>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연구디자인



4.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경험적 연구

앞서 논의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외관계에 관한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의 대외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규칙과 관계규칙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년차의 연구는 이러한 규칙의 추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사전작업의 일환으로서 경험적인 패턴과 요인을 찾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북한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국제사회의 일탈을 상징하는 국가로 간주되어왔는데, 그만큼 북한의 행태와 관련된 자료나 기록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분석들을 동원하여 추후 진행하게 될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에 어떤 형태의 규칙들을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파일럿 연구 형태로 탐구하였다.

가. 국제규범의 준수를 둘러싼 갈등선

국제규범의 준수 여부를 둘러싼 국제사회 주도국과 반대 국가군 간의 경계는 국제사회의 속성을 가늠 짓는 주요 갈등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국제규범 가운데 두 가지가 국제사회에서 국가군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국제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금하는 국제연합헌장 제1조 1항 및 2항이다. 국제평화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테러 수출, 무력사용, 핵무기 확산 등을 포함한다. 국가차원에서 테러를 수출하거나, 국제분쟁에 무력을 사용하는 국가, 또는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국가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며, 종종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둘째,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의무’를 규정한 국제연합헌장 제1조 3항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행동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준수, 국내 테러의 금지 등을 포함한다. 국제연합헌장 제2조 7항에 나타나 있듯이, 국제사회는 인권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게 대하여 강한 제재를 시도하지 않지만 비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규

범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은 모두 비정상국가로 간주된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비정상국가의 구별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가의 여부; 둘째, 국가 차원에서 테러를 지원하는가의 여부; 셋째, 대량살상무기 또는 핵무기를 확산시키는가의 여부.

나. 비(非)정상국가에서 정상국가로의 전환: 사례연구

비정상국가의 행태 가운데 국가 차원의 테러 지원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이 가장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켜왔는데, 테러 지원과 핵무기 확산이 가져오는 큰 피해를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비정상국가들이 왜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비정상국가들은 국제사회의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자위권, 자기방어의 논리로 정당화시킴으로써 국제사회 내에 이미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먼저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곤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국가의 행동을 연구하는 출발점은 국제사회가 비정상국가에게 왜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면, 비정상국가와 국제사회의 상호작용을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비정상국가의 행태가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국제사회는 국제규범 위반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셋째, 비정상국가는 이를 위협으로 인지하고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 또는 국가 차원의 테러 지원에 나선다; 넷째, 국제사회가 비정상국가의 핵확산 또는 테러 지원에 대하여 강한 제재를 취한다. 이런 상호작용은 전쟁과 같은 파국, 비정상국가의 국제규범 순응, 또는 국제사회와 비정상국가 간 지속적인 긴장으로 귀결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여러 불량국가 또는 기피국가의 사례 중에서도 스스로 비정상국가로 자리매김 한 사례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과 나미비아 불법 점거는 국제사회를 반발과 제재를 초래했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게 안보위협으로 다가왔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 개발로 대응하려 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고, 결국 1980년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 폐기와 인종 차별을 중지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로 바뀌게 되었다. 리비아의 경우에도 1969년 9월 쿠데타와 함께 비정상행위가 시작되었다. 가다피를 중심으로 한 청년 장교들이 무혈 쿠데타를 성공시키면서 리비아는 일련의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반발을 초래했다. 국제사회의 반발로 인하여 리비아는 안보위협을 느꼈고, 이는 곧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다. 하지만 여러 경제제재와 무력개입을 거치면서 리비아는 1999년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복귀하였다.

이란의 경우 혁명 이후 반미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테러리즘을 지원하고 비밀 핵프로그램을 가동해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란의 불량국가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로 이란 정치체제가 갖는 이중적 성격, 미국의 일관되지 못한 대이란 정책, 그리고 허약한 국제공조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상국가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란은 지속적인 외부의 압박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의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이다. 수단은 국제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인종청소 등 인도적 범죄를 자행함으로써 불량국가의 낙인이 찍힌 경우이다. 정치·종교로 이원화된 이란과 달리, 수단의 내부적 갈등선은 인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사회는 수단의 테러리즘 지원이나 인종청소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테러리즘에 대한 초기 미국과 UN의 봉쇄정책은 실효적으로 집행되지 않았고, 이후 보다 강화된 롤백정책도 수사에 그쳤다. 다르푸르에서 발생한 인도적 참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응은 뒤늦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사태를 종식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가 국제사회로 편입된 몇 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 국제사회 주도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정권을 강제로 축출한 후 국제규범에 친화적인 정권을 이식하는 방법이다. 남예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이 대표적 사례로 국제사회 주도국은 ‘불량국가’의 정권을 무력화시킨 후 새로운 정치세력이 권력을 행사하도록 해왔다. 이 방법은 가장 주목을 받는 방식이지만 비용과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채택하는 옵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강제로 외부세력

에 의한 정권 교체가 발생한 후, 새롭게 이식된 정치세력의 토착화는 또 다른 난제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외부세력에 의한 강제적 정권 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갈등관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 사이의 국력차이, 외부 후견국의 존재 유무, 그리고 극화체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리비아와 이란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 등 강대국의 무력개입이 있었으나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에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둘째, 국내 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가 발생한 후 정상국가로 변화하는 경로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남미의 군부독재국가들은 국내 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가 발생한 후 국가의 행동이 변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이행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국내 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를 촉진하는 원인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회경제적 조건으로서 경제발전의 수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하는 경기 침체, 인구 분포 등이 꼽힌다. 사회세력 간 관계와 관련된 현상으로는 집권세력 내부의 분화, 사회적 동원을 담당할 수 있는 비정부조직의 존재, 군사화 정도 등이 있다. 국제적 요인으로는 극체제, 후견 역할을 담당하는 동맹국 존재 유무, 국제사회 주도국의 정책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셋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불량정권’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변화의 경로가 있다. 리비아는 집권세력의 교체가 없는 상황에서도 테러 수출금지 및 핵확산금지 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로 전환하였다. 시리아는 여전히 테러수출국이지만 핵확산금지 규범을 준수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란과 수단의 경우에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강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조치와 압박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로와 연관되어 있는 요인으로는 극화체제, 후견 역할을 담당하는 동맹국의 존재 유무, 그리고 국제사회 주도국의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던 국가가 정상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데에는 여러 가지 경로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위의 사례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변수들 사이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2년차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변수군들의 조합에 따라 북한이 어떤 외교정책 노선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사례연구는 이러한 작업의 전초작업으로서 중요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첫걸음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다.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대한 함의

이상의 사례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사회에서 비정상국가로 간주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앞서 논의한 이론들에서 본 연구는 ‘취약국가’와 ‘불량국가’라는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 비정상국가를 규정하였다. 취약국가는 경제적·사회적 실패로 말미암아 국가의 기능이 상당한 정도로 약화된 경우로서, 원조와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연결되곤 한다. 제3세계권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에도 1990년대까지 기아와 빈곤 등 국내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핵무기의 개발과 그것을 둘러싼 갈등관계로 인해 ‘취약국가’로서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형편이다.

북한의 취약성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북한과 관련된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량국가’의 이미지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부시행정부의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던 북한의 외교정책은 전형적인 현상파형 국가(revisionist)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연유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악의 축’이라는 낙인을, 국제사회로부터 ‘불량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앞서 논의한대로 국내정치적 인권탄압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지역 국가 등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최근의 북한은 테러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정치적 억압과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견제와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불량국가’의 프레임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취약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원조와 개입이라는 정형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불량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앞서 논의한대로 유화정책, 관여정책, 봉쇄정책, 그리고 롤백정책이라는 일련의 옵션 중에서 일부

또는 중복된 형태의 정책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유화정책과 관여정책은 온건책으로, 봉쇄정책과 롤백정책은 강경책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각각의 옵션이 여러 가지 보조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채택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옵션과 중복되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열한 유형들은 이상형(ideal type)의 모델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형의 외교정책 모델은 지난 50여년 이상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져온 행동패턴으로부터 유추한 것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과 압력의 패턴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상형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복잡계이론의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국제관계의 행위자기반 모델을 만드는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제1년차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연구디자인을 구축하고자 하며, 특히 개별 국가의 행동을 야기하는 기본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영향을 미치는가를 모델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살펴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 그리고 이란과 수단의 사례는 북한과 관련하여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는 모두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거나 근접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미국과의 마찰과 갈등을 경험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주도의 국제적 제재를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이란과 수단의 경우 불량국가와 취약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는 향후 북한의 대내적 변화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극도로 반미적인 성향의 정책을 추구하거나 경제실패로 인해 피폐한 상황에 빠진다면 국제사회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 내부에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글로벌 시스템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동패턴들이 지역적(local) 규칙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리비아의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을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들 두 나라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차원의 강대국이 아닌 상황에서 자신들의 안보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핵무

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비정상국가로부터 정상국가로 전환하는 일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증대나 협상력 증가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절박한 위협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두려움이 완화될 수 있다면 스스로 불량국가 또는 비정상국가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란이나 수단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국제사회의 압력에 완전하게 굴복한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제기되는 무력개입의 가능성과 국제기구를 통한 압박은 이들 국가들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격변상태를 맞이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북한도 이러한 가능성에서 완전히 비껴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5. 결론

이상의 연구작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취약국가’와 ‘불량국가’라는 비정상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들 두 개념은 언론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개념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인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국제관계이론과 주류 접근법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가장 큰 논점으로서 환원주의와 구조주의라는 양대 접근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서 복잡계이론이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복잡계이론은 자연과학에서 출발한 거대 패러다임이지만, 최근에 들어와 사회과학에도 적극 원용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연구가 대부분 지역연구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고려하며,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이론적 기반을 갖춘 북한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이론적 기반으로서 기존 국제관계이론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등 주류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접근법들을 대체하기보다 그 한계점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접근법으로서 복잡계이론을 고려하였다. 특히 사회현상에 대한 직접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년에 걸친 연구계획을 수립하였고, 제1년차에는 이론과 개념들의 구축, 그리고 제2년차에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실행과 분석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제1년차의 연구결과로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위한 파일럿 분석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외관계를 취약국가와 실패국가, 불량국가의 담론 속에서 재정립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정책옵션들을 구상함으로써 추후 미시적 세부모델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초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찾아낸 변인들이 얼마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제 사례들을 통해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교훈 중의 하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비정상성을 규정짓는 요소, 특히 인권 탄압,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테러 지원 등의 기준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는 훨씬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 그리고 이란과 수단의 사례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옵션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고려와 정책적 혼합을 통한 복합적 접근방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례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무조건적인 유화정책이나 일방적인 무력개입과 같은 단순한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연구와 사례분석의 교훈을 바탕으로 하여 제2년차 연구에서는 북한 국제관계 모델의 구체적인 행동규칙들을 추출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한반도의 정치적 동역학관계를 만들어내는가를 실험하고자 한다. 북한을 둘러싼 행위자들을 설정하고, 그들의 미시적 활동영역과 행동규칙을 세부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행위자기반 모델 속에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어떤 행동규칙과 정책옵션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북한을 둘러

싼 국제관계를 요동치게 만드는가 하는 패턴을 찾아내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북한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제5장

결론

복잡계 이론에 대한 비판의 정정국가화 방안 연구



제5장

결론

1. 연구의 배경

복잡계 이론을 접목시킨 경제사회시스템 연구는 크게 동태적인 현상 이해의 개념틀로서의 가치와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 전략적 개입방안의 검증 및 시나리오 도출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사업의 대상인 북한체제는 고질적인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분석과 모형화가 극히 까다로운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잡계 관점이 연구를 차용할 충분한 유인도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북한이 연이은 체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김정일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한 채, 경제시스템에서 자생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시장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중국 및 과거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도 사뭇 다른 이러한 독특한 경로가 존재하는 것이다. 본 협동연구에서는 복잡계 이론이 제시하는 자기조직화를 통한 자생적 변화의 원리와 인위적 변위 및 선별을 통한 진화과정을 엮어 이 경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모형 구성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경로 상에서 전략적 행위자로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유도할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구사하였을 때, 과연 북한체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사전에 진단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형 구성을 다음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획에 따라 2009년의 1차년도 연구사업은 2차년도에 추진될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을 위한 선행작업에 중점을 두어 이뤄졌다. 이를 위해 북한 체제를 경제시스템, 국내 정치사회시스템, 국제 정치외교시스템의 3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었다. 이들 각각에서 주요한 시스템 구성요소(행위자)들과 그들의 행태, 각 환경요소와 그들의 영향을 추출하고 정형화한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시스템별로 아직 상세한 동학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현실적합성을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사례연구 결과도 함께 정리하였다. 이들 사례연구 결과들은 2차년도에 검증용 시나리오로 가공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2. 추진연구의 내용

가.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상기 연구는 기존에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를 복잡계 이론의 틀에서 재구성하고, 북한의 자생적 시장 질서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복잡계 이론을 북한체제에 적용하는 연구틀로서, 경제시스템 내부에서 하위 수준의 자기조직화 과정이 연쇄되어 시스템의 진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매크로-메조-마이크로의 3개 층위에서 체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경제시스템은 질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적 정합성과, 시스템 재생산에 기여하게 하는 기능적 정합성이 유지될 때 존속할 수 있다. 이러한 정합성에 균열이 일어나면 경제시스템은 새로운 변화의 필요에 직면하게 되고, 여기서 제기되는 다양한 새로운 시도 가운데 정합성을 충족하는 것이 선별되어 자기조직화를 통해 기존 질서를 대체한다. 이러한 자기조직화의 연쇄가 중첩되어 경제시스템이 진화 동학이 구성된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1990년대를 기점으로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정합성의 균열과 붕합을 반복하는 과정을 조망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기능적 정합성의 파정 상태에 거듭 봉착해왔다. 북한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민의 자구적인 시장화를 용인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정합성의 회복을 촉진시킨 셈이었다. 이로 인해 경제시스템은 대폭 안정되었지만, 최근 북한 당국은 주민의 시장참여를 억제하며 과거와 같은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많은 부분에서 현재 정착된 경제시스템의 행위적·기능적 정합성과 맞지 않는 한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향후 북한 당국의 반전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 시장화 진화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오히려 이런 관점에 의하면 향후 북한 경제시스템이 새로운 정합성 균열이 일어날 단층선에 대한 예측과, 그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행위자에 대한 분석이 긴요해진다. 이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재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기업 부문의 새로운 부상 가능성도 다루고 있다. 기존 계획경제 하에서 정합성을 갖고 있던 다수의 국영기업들은 중앙집중적 자원 분배체계가 붕괴된 이후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해버렸다. 하지만 이들 내부에서는 중간 당 간부와 지배인의 새로운 거래관계가 발생하며 시장화에 편승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색다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북한 시장 시스템이 낮은 수준의 조직화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한층 조직화된 경제주체가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복잡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조직화를 통한 행위자의 고도화 과정과 연계시켜 해석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 진화방향에 적응되어가는 행위자들이 점차 조직화되고 고도화될수록 변화의 관성은 한층 강해지며, 북한 기존 지배체제의 역행 압력도 쉽게 무력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결국 북한 경제시스템의 향후 진화방향에는 현재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확대되는 정합성 균열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조직화 가능성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나.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북한체제는 김일성 사후에도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유일 지배체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고수해왔다. 외부로부터 닥친 최악의 경제위기와 체제 내부에서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북한의 사회구조를 떠받치는 위계적 상호작용과 이를 통해 형성된 거시적 관성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 체제 내부 구성원들간 상호작용의 현황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체제 수준의 관성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의 규명을 시도하였다.

우선 김정일 주변의 핵심 권력집단에 대해 수행여부 통계를 바탕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수행통계를 3개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여 시기별로 선군정치의 강화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가시화하였다. 아울러 김

정일을 제외한 측근들의 연결망 내 위치를 판별하여 김기남의 중요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주요 인사들의 이후 후계체제 수립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층부의 지배 시스템이 갖는 문제를 복잡계적 담론틀에서 조망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과 기타 연구로 드러난 북한의 지배 시스템은 김정일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과부하가 걸려 있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외부의 격렬한 환경변화를 받 빠르게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필요한 내부적 변화의 가능성을 억제하는 이러한 치명적인 관성은 후술하는 다른 사회 시스템의 행위자들이 빚어내는 변화의 동력과 궁극적으로 충돌하여 체제 균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 대목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의 당과 국가기구 체계가 갖는 특성을 복잡계적 ‘질서’와 ‘무질서’의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다년간 비정상적인 위기관리체제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압력과, 돌발상황에의 대처 능력을 계속 떨어뜨리는 비적응적인 무질서 요인을 다양한 인터뷰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북한 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이런 양면성은 사회 시스템 측면에서 자발적의 정상국가화 경로 설정의 어려움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편으로 연구는 층위를 내려가 새로운 사회 시스템 변화의 경로로서 시장 시스템과 결합된 일반 주민차원의 자기조직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북한 체제는 중하층부에 걸쳐 시장을 매개로 한 사회연결망의 성장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관찰되는 다양한 자기조직화는 북한 내부의 사적 담론을 성장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한층 조직화된 변화의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준에서는 사적 담론의 비판대상이 기생적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간 간부층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아직 체제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체제가 복잡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단속적 변화의 기본 전제조건을 충족해가는 과정으로 볼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다.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이 연구는 금번 협동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즉 ‘정상국가’에 대한 기준 정립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취약국가, 불량국가 등의 개념이 다소 무분별하게 혼용되었다. 이러한 모호성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북한 정상화라는 지향점을 흐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비정상국가들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북한이 당면한 인권탄압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큰 비정상요소를 지목하고 이의 순차적 해결 순위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외부 행위자인 한국 및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의 시스템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정책적 옵션에 대해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유화정책 관여 정책, 봉쇄정책, 물백정책의 4가지 옵션이 지니는 일반적인 효과와 기타 변인들이 이에 기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특히 과거 대북 유화정책의 틀 속에서 온건책 중심으로 짜였던 정책기조가 현 행정부 들어 중립적으로 변모한 이후 더욱 모호해진 북한의 전략적 딜레마를 체계화하였다. 이를 통해 강경책과 온건책 옵션을 종합하여 발전적인 행동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반을 제시하였다.

상기 연구는 이에 부가하여 비정상국가로의 이탈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이란, 수단의 4개국의 사례를 조망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공조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여 현재 사실상 정상국가로 복귀 또는 그 과정에 있으며, 반면 이란과 수단은 여전히 비정상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을 비교하면서 앞서 제시한 정책적 옵션의 조합이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는 조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의 경우 내부 체제 온건파로부터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거나, 극렬 테러집단과 같은 공동의 체제 위협세력을 직면한 상황에서 외부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경우였다. 이란은 대내적인 변화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결정적인 정상화기준인 핵 문제에 있어서는 전 국민적 안보위협이 심각하여 그 압력이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수단의 경우에는 주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제재를 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감쇄 요인들이 한

층 심층적으로 자리한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책 마련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의 정상국가화 유도에는 지역적(local) 규칙으로 정련된 행태분석과 이들이 종합된 시물레이션 모형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를 통해 단발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전략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외교정책 옵션의 포트폴리오 구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 종합평가

금년도 연구사업은 복잡계 이론을 비롯하여 최근에 진전된 중요한 학제간 담론을 북한문제 분석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확연한 차별성을 가진다. 우선 경제 및 사회시스템, 국가간 외교시스템을 아우르는 폭넓은 부문에 걸쳐 복잡계 이론을 재해석하고 효과적인 분석틀로 활용하기 위해 재정립했다는 면에서 학술적인 가치도 매우 높다. 특히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연구』에서 정립된 복잡계적 분석틀은 해당 세부과제뿐 아니라 다른 두 세부과제에서도 채용하여 종합적인 틀로 발전시킬 여지가 충분하다 할 수 있다. 시물레이션 모형이 전반적인 동학의 맥락이 갖춰진 상태에서 충실히 작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차기년도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정상국가화 논의에 있어 필수적인 미시적인 행위자 행태 기술이 다각도로 이뤄진 점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복잡계 연구모형에서 추구하는 상향식(bottom-up)의 창발과정 재구성을 위해서는 그만큼 미시적인 행태 관찰과 이것이 시스템 수준의 현상으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연쇄과정에 대한 세심한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폐쇄적인 북한 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가 지극히 부족하고, 이들이 효과적인 복잡계 연구를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아직 2차년도에서 추구하는 시물레이션 모형 구현에 적당한 수준으로 이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볼 수는 없지만, 이는 쉽게 개선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전반적으로 금년도 연구사업은 차기 2차년도 연구사업을 위한 맥을 짚고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대다수의 참여 연구진들이 복잡계적 연구 방법론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과감한 시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차기년도에는 이러한 인식 공유를 바탕으로 외부 환경변인 및 행위자와 상호 작용 관계를 한층 정리하여 다양한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는 유용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창욱·윤영수·채승병. 『이머전트 코퍼레이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 로버트 액셀로드, 이경식 옮김. 『협력의 진화: 이기적 개인의 틱포택 전략』. 서울: 시스टे마, 2009.
- 미첼 월드롭, 김기식·박형규 옮김. 『카오스에서 인공생명으로』. 서울: 범양사 출판부, 1995.
- 민병원·김창욱 편저. 『복잡계 워크샵: 복잡계이론의 사회과학적 적용』.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삼성경제연구소 편. 『복잡성과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 스튜어트 카우프만, 국형태 옮김. 『혼돈의 가장자리: 자기조직화와 복잡성의 법칙을 찾아서』.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2.
- 스티븐 존슨, 김한영 옮김. 『이머전스』. 서울: 김영사, 2004.
- 알버트 라즐로 바라바시, 강병남 외 옮김. 『링크: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서울: 동아시아, 2002.
- 에리히 얀치, 홍동선 옮김. 『자기 조직하는 우주: 새로운 진화 패러다임의 과학적 근거와 인간적 함축』. 서울: 범양사출판부, 1989.
- 에릭 바인하커, 안현실·정성철 옮김. 『부의 기원』. 서울: 랜덤하우스, 2007.
- 윤영수·채승병. 『복잡계 개론: 세상을 움직이는 숨겨진 질서 읽기』.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일리아 프리고진·이사벨 스텐저스·유기풍 옮김. 『혼돈 속의 질서』. 서울: 민음사, 1989.
- 장은성. 『복잡성의 과학』. 서울: 전파과학사, 1999.
- 제임스 글리크, 박배식·성하운 옮김. 『카오스: 현대과학의 대혁명』. 서울: 동문사, 1993.
- 존 카스티, 김동광·손영란 옮김. 『복잡성 과학이란 무엇인가』. 까치글방, 1997.
- 터너, 조나단. 정태환 외 공역. 『현대 사회학 이론』. 서울: 나남출판, 2002.

- 터너, J. H. 김진균 외 옮김. 『사회학 이론의 구조』. 서울: 한길사, 1989.
- 토머스 셸링. 이한중 옮김. 『미시동기와 거시행동』. 서울: 21세기북스, 2006.
- 통일부. 『2009 북한권력기구도』. 서울: 통일부, 2009.
- _____. 『2009 북한의 주요인물』. 서울: 통일부, 2009.
- 폴 크루그먼. 박정태 옮김. 『자기 조직의 경제』. 서울: 부키, 2002.
- 프리고진, 일리아 이사벨 스텐저스 신국조 옮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서울: 정음사, 1989.
- 프리고진, 일리아. 이덕환 옮김. 『확실성의 종말: 시간, 카오스, 그리고 자연법칙』. 서울: 사이언스북스, 1997.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서울: 시대정신, 2006.
- _____. 『어둠의 편이 된 햇별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 Almond, Gabriel A. and 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1966.
- Anderson, P. W., Arrow, K. J. and Pines, D., eds. *The Economy as an Evolving Complex System*. CA: Addison-Wesley, 1988.
- Arthur, W. B., Durlauf, S. N. and Lane, D. A., eds. *The Economy as an Evolving Complex System II*. MA: Addison-Wesley, 1997.
- Axelrod, R. *The Complexity of Cooperation: Agent-Based Models of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Axelrod, Robert. *The Complexity of Cooperation: Agent-Based Models of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_____.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 Badie, Bertrand. *The Imported State: The Westernization of the Political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 Badii, R. and Politi, A. *Complexity: Hierarchical Structures and Scaling in Phys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Bak, Per. *How Nature Works: The Science of Self-Organized Criticality*. New York: Springer-Verlag, 1996.
- Banks, Arthur S. *Cross-National Time-Series Data Archive*. Binghamton, NY: Banner Software, Inc., 1999.
- Benhabib, J. *Cycles and Chaos in Economic Equilibriu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Bremer, Stuart A. ed. *The GLOBUS Model: Computer Simulation of Worldwid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s*. Boulder: Westview Press, 1987.
- Brock, W. Hsieh, D. and LeBaron, B. *Nonlinear Dynamics, Chaos, and Instability: Statistical Theory and Economic Evidence*. Cambridge, MA: MIT Press, 1991.
- Bueno de Mesquita, Bruce. *The War Trap*.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 Butz, Michael R. *Chaos and Complexity: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Washington DC: Taylor and Francis, 1997.
- Byrne, David. *Complexity Theory and Social Science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1998.
- Carl, Friedrich, J.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Casti, John L. *Would-Be Worlds: How Simulation Is Changing the Frontiers of Scienc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97.
- Cederman, Lars-Erik. *Emergent Actors in World Politics: How States and Nations Develop and Dissolv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Cha, Victor and David Kang. *Nuclear North Korea*. 김일영 옮김. 『북핵퍼즐』. 서울: 따뜻한 손, 2007.

- Chia, Robert. *Organizational Analysis as Deconstructive Practice*. Berlin: de Gruyter, 1998.
- Cusack, Thomas R. and Richard J. Stoll. *Exploring Realpolitik: Prob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ith Computer Simulation*. Boulder & London: Lynne Rienner, 1990.
- Davies, John L. and Ted Robert Gurr. eds., *Preventive Measures: Building Risk Assessment and Crisis Early Warning Systems*.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1998.
- Dopfer, K. and Potts, J.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Evolution*. Oxford. UK: Routledge, 2008.
- Easton, David.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5.
- Easton. *The Analysis of Political Structure* New York: Routledge, 1990.
- Epstein, Joshua M. and Robert Axtell. *Growing Artificial Societies: Social Science from the Bottom Up*.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6.
- Fitzpatrick, S. *Everyday Stali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Forrester, J. *Industry Dynamics*. Cambridge: Pegasus Communications, 1961.
-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1992.
- Fulbrook, Mary. *The People's State*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5
- Gaddis, John Lew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_____. *The Landscape of History: How Historians Map the Past*. 강규형 옮김. 『역사의 풍경: 역사가는 과거를 어떻게 그리는가』. 서울: 에코리브르, 2004.

- Gaddis, John Lewis. *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 박건영 옮김.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서울: 사회평론, 2002.
- Gell-Mann, Murray. *The Quark and the Jaguar: Adventures in the Simple and the Complex*. New York: W. H. Freeman, 1994.
- George, Alexander L. and Juliette L. George. *Presidential Personality and Performance*.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8.
- Gilbert, Nigel and Klaus G. Troitzsch. *Simulation for the Social Scientist*.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2002.
- Gilbert, Nigel. *Agent-Based Models*. Los Angeles: Sage, 2008.
-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Gladwell, Malcolm. *The Tipping Point: How Little Things Can Make a Big Difference*. Boston: Little, Brown & Co, 2002.
- Gleick, James. *Chaos: Making a New Science*. 박배식·성하운 옮김. 『카오스: 현대과학의 대혁명』. 서울: 동문사, 1993.
- Gleijeses, Piero. *Conflicting Missions: Havana, Washington, and Africa, 1959~1976*.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2.
- Gouldner, Alvin W. *The Coming Crisis of Western Sociology*. New York: Basic Books, 1970.
- Granger, C. W. J. and Terasvirta, T. *Modeling Nonlinear Economic Relationship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Gribbin, John. *Deep Simplicity: Chaos, Complexity and the Emergence of Life*. London: Allen Lane, 2004.
- Gunderson, L. H. and Holling, C. S., eds. *Panarchy: Understanding Transformations in Human and Natural Systems*. Washington DC: Island Press, 2002.
- Haines, S. G. *Systems Thinking and Learning*. MA: HRD Press, 2000.
- Heikel, Mohamed. *The Road to Ramadan*. New York: Quadrangle, 1975.
- Henriksen, Thomas H. *Using Power and Diplomacy to Deal With Rogue*

- State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1999.
- Hillis, W. Daniel. *The Connection Machine*. Cambridge: The MIT Press, 1985.
- Hoffman, John. *State Power and Democracy: Contentious Concepts in Practical Political Theor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8.
-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Touchstone, 1996.
- Jackson, Robert H. *Surrogate Sovereignty? Great Power Responsibility and "Failed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98.
- Jervis, Robert. *System Effects: Complexity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Kantz, K. and Schreiber, T. *Nonlinear Time Series Analysi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Kaplan, Robert. *The Coming Anarchy*. New York: Random House, 2000.
- Kauffman, S. A. *The Origins of Order: Self-Organization and Selection in Evolu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Kauffman, Stuart A. *At Home in the Universe: The Search for the Laws of Self-Organization and Complexity*. 국형태 옮김. 『혼돈의 가장자리: 자기조직화와 복잡성의 법칙을 찾아서』.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2.
- Kelly, S. and Allison, Mary A. *The Complexity Advantage: How the Science of Complexity Can Help Your Business Achieve Peak Performance*. New York: McGraw-Hill, 1998.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1977.
- King, Gary, Robert O. Keohane, and Sidney Verba.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Krugman, Paul. *The Self-Organizing Economy*. Cambridge: Blackwell

- Publishers, 1996.
- Lake, Anthony. *From Containment to Enlargement*. Remarks Delivered at the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1993.
- Lambach, Daniel and Tobias Debiel, eds. *State Failure Revisited I: Globalization of Security and Neighborhood Effects*. Institute for Development and Peace, University of Duisburg-Essen, 2007.
- Ledeneva, Alena. "Continuity and Change of Blat Practices in Soviet and Post-Soviet Russia." S. Lovell, Alena V. Ledeneva & A. Rogachevskii eds. *Bribery and Blat in Russia* London: Macmillan Press Ltd., 2000.
- Lefebvre, H.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Paris: Gallimard, 1968.
- Lennon, Alexander T. and Camille Eiss. *Reshaping Rogue States: Preemption, Regime Change, and US Policy toward Iran, Iraq, and North Korea*. Cambridge: MIT Press, 2004.
- Litwak, Robert S. *Rogue States and U.S. Foreign Policy: Containment After The Cold War*. Washington, D.C.: The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2.
- Lorenz, H. W. *Nonlinear Dynamical Economics and Chaotic Motion*. Berlin:Springer-Verlag, 1993.
- _____. *The Essence of Chaos*.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5.
- Louw, P. Eric. *The Rise, Fall and Legacy of Apartheid*. Westport, CT: Praeger, 2004.
- Magnusson, L., ed. *Evolutionary and Neo-Schumpeterian Approaches to Economics*. Massachusett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4.
- Mainzer, Klaus. *Thinking in Complexity: The Complex Dynamics of Matter, Mind, and Mankind*. Berlin: Springer-Verlag, 1994.
- Mandelbrot, B. B. *The Fractal Geometry of Nature*.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1982.

- Mansfield, Edward D. *Power, Trade and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Mantegna, R. N. and Stanley, H. E. *An Introduction to Econophysics: Complexity in Fi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Maturana, Humbert R. & Francisco J. Varela. *Autopoiesis and Cognition*. Holland: D. Reidel. Dordrecht, 1980.
- May, Robert M. *Stability and Complexity in Model Ecosystem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 Meredith, Martin. *In the Name of Apartheid: South Africa in the Postwar Period*. New York, NY: Harper and Row, 1988.
- Miller, John H. and Scott E. Page. *Complex Adaptive Systems: An 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Models of Social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 Morgan, Gareth. *Images of Organiza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986.
- Morowitz, H. J. and Singer, J. L., eds. *The Mind, the Brain, and Complex Adaptive Systems*. Reading, MA: Addison-Wesley, 1995.
- Nelson, R. R. and Winter, S. G.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Newcombe, Hanna, Lynn Schopen, James Wert and Chris Young. *Nations on Record: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oll-Call Votes (1946~1973)*. Oakville-Dundas, Ontario: Peace Research Institute, 1975.
- Niblock, Tim. *Pariah States and Sanctions in the Middle East: Iraq, Libya, Sudan*. Boulder: Lynne Rienner, 2001.
- Nincic, Miroslav. *Renegade Regimes: Confronting Deviant Behavior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 Oye, Kenneth.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 Parsons, Talcott and Neil J. Smelser.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56.
- Parsons, Talcott.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New York: McGraw, 1937
- Prigogine, Ilya & Isabelle Stengers. *Order Out of Chaos: Man's New Dialogue with Nature* New York: Bantam Books, 1984.
- _____. *Order Out of Chaos: Man's New Dialogue with Nature*. 신국조 옮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질서』. 서울: 고려원미디어, 1993.
- Reiss, Mitchell. *Bridled Ambition: Why Countries Constrain Their Nuclear Capabilities*. Washington, D.C.: The Woodrow Wilson Center Press, 1995.
- Richardson, Lewis F. *Statistics of Deadly Quarrels*. Pittsburgh: The Boxwood Press, 1960.
- Rosenau, James N. *Distant Proximities: Dynamics Beyond Glob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A Theory of Change and Continu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Rotberg, Robert I. *Worst of the Worst: Dealing with Repressive and Rogue Nations*. Cambridge: World Peace Foundation, 2007.
- Russett, Bruce and John Oneal.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New York: W. W. Norton, 2001.
- Sabastanski, Anna, ed.,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1985~2005: U.S. Department of State Reports with Supplementary Documents and Statistics*. Great Barrington, MA: Berkshire, 2005.
- Sanders, T. Irene. *Strategic Thinking and the New Science: Planning in the Midst of Chaos, Complexity and Change*. New York: The Free Press, 1998.
- Sawyer, R. Keith. *Social Emergence: Societies As Complex Syste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_____. *Social Emergence: Societies as Complex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Schelling, Thomas C. *Micromotives and Macrobehavior*. 정창인 옮김. 『미시동기와 거시행동』.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78.
- Scott, W. Richard. *Organizations: 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92.
- Sedlenieks, Klavs. "Cash in an Envelope: Corruption and Tax Avoidance as an Economic Strategy in Contemporary Riga." Karl-Olov Arnstberg & Thomas Borea. eds. *Everyday Economy in Russia Poland and Latvia* Stockholm: Sodertorns hogskola, 2003.
- Slaughter, Anne-Marie. *A New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_____. *A New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Sprott, J. C. *Chaos and Time-Series Analy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Sterman, J. D. *Business Dynamics: Systems Thinking and Modeling for a Complex World*. MA: Irwin/McGraw-Hill, 2000.
- Taber, Charles and Richard Timpone. *Computational Modeling,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Thousand Oaks, CA: Sage, 1986.
- Tilly, Charles.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8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1979.
- Watts, D. *Small World: The Dynamics of Networks between Order and Randomnes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Wolfram, Stephen. *Cellular Automata and Complexity*. Reading, MA:

Addison-Wesley, 1994.

2. 논문

- 고영환.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소고” 『북한조사연구』. 제1권 1호, 1997.
- 곽승지. “북한체제 연구의 쟁점.” 『현대 북한 연구의 쟁점 2』.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7.
- 김갑식·오유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2호, 2004.
- 김광익. “중국연구를 위한 인류학적 패러다임 시론: 문화접점론과 국가-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1권 3호, 2002.
- 김성철. “통치스타일과 정치체제의 운용.” 통일연구원 편. 『김정일 연구: 리더십과 사상1』.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김영희·김병욱.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북한관료들이 사경제활동 연구.” 『통일문제연구』. 2008년 하반기 통권 제50호, 2008.
- 김정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김정일 선집15』, 2005.
- _____. “일군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8월 23일. 『김정일선집 9』, 1997.
- _____.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1987.
- _____.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8』, 1998.
- _____.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 기념 전국 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선집 7』, 1996
- 김종욱. “북한 관료의 일상세계.” 『현대북한연구』. 11권 3호, 2008.
- 민병원. “불확실성 속의 질서: 복잡계이론과 국제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1호, 2006.

- 박영자. “북한 중앙국가기관 특성과 체제운영 실태: ‘민주집중제’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비교사회주의.” 『동아연구』. 제49집, 2005.
- _____. “북한 지방국가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중앙권력의 이중통제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5호, 2005.
- 손혜민. “박기원 그 순천사람.” 『임진강』. 제5호, 2009.
-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9권 3호, 2006.
- 이광모·장순희. “복잡성이론의 적실성에 관한 사례 연구: 『2002 월드컵』 거리운동의 자기조직화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2004.
-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이영재. “하버마스의 소통적 권력과 민주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2005년 하반기호 통권 제44호, 2005.
- 이우승. “유언비어와 제2여론의 개념: 북한 사회에 적용을 위한 이론적 논의.”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2호, 2004.
- 이우영. “북한에서의 국가와 사회: 시민사회론은 적용 가능한가?” 『현대북한연구』. 제4권 1호, 2001.
- _____. “북한체제 내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 공적 담론 위기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1권 1호, 2008.
-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한국사회학』. 제39집 2호, 2005.
- 전재성. “관여(engagement)정책의 국제정치이론적 기반과 한국의 대북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43권 제1호, 2003.
- 조동준. “리비아의 비핵화 선택 연구.” 박기덕·이상현 공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성남: 세종연구소, 2004.
- _____.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핵화 사례 연구,” 윤영관·신성호 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서울: 한울, 2008.
- 조순구. “핵무기 해체사례와 북한 핵의 평화적 관리방안.” 『국제정치논총』.

- 제45권 제3호, 2005.
-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담론 201』. 제10권 2호, 2007.
- 채원호·손호중·김옥일. “북한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북한이 탈주민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제1호, 2006.
- 최대석·조영주.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전망.” 『북한학보』. 33집 2호, 2008.
-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6.
- 최완규·노귀남. “북한주민의 사적 욕망.” 『현대북한연구』. 11권 2호, 2008.
-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제15권 1호, 2009.
- 함택영·구갑우. “북한의 공과 사: 이론화를 위한 비교.” 『현대북한연구』. 제11권 2호, 2008.
- 홍민. “북한의 ‘관계자본’ 교환구조와 시장교환의 전유.” 『현대북한연구』. 9권 3호, 2006.
- _____.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Abbott, Russ. “The Reductionist Blind Spot.” *Complexity*. Vol. 14, No. 5, 2009.
- Achorn, E. “Integrating Agent-Based Models wi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ARE 2004 Papers, 2004.
- Albright, David and Mark Hibbs. “South Africa: The ANC and the Atom Bomb.” *Th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Vol. 49, No. 3, 1993.
- Albright, David. “South Africa and the Affordable Bomb.”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50, No. 4, 1994.
- Allen, P. M. “Introduction: Knowledge and Complexity.” *Futures*. Vol. 37, 2005.
- Allison, Graham and Philip Zelikow.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김태현 옮김. 『결정의 엇센스』. 서울: 모음북스, 2005.

- Anderson, Lisa. "Qaddafi's Legacy: An Evaluation of a Political Experiment." in Dirk Vandewalle ed., *Qaddafi's Libya, 1969~1994*. New York NY: St. Martins, 1995.
- Anderson, Philip. "Complexity Theory and Organization Science." *Organizational Science*. Vol. 10, No. 3. May-June, 1999.
- Ansell, Christopher K. "The Networked Polity: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Governance*. Vol 13, No. 3, 2000.
- Arthur, W. B. "Competing Technologies, Increasing Returns, and Lock-in by Historical Events." *Economic Journal*. Vol. 99, 1989.
- _____. "Complexity and the Economy." *Science*. Vol. 284, No. 5411, 1999.
- _____. "Positive Feedbacks in the Economy." *Science American*. No. 2, 1990.
- Ashby, W. R. "Principles of the Self-Organizing Systems."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Vol. 37, 1947.
- Axelrod, Robert. "Advancing the Art of Simulation in the Social Sciences: Obtaining, Analyzing, and Sharing Results of Computer Simulations." *Complexity*. Vol. 3, No. 2, 1997.
- Babson, Bradley. "Myanmar and North Korea: Informality in Asia's Pariah States." *SAIS Review*. Vol. 21, No. 1, 2001.
- Barnett, W., Medio, A. and Serletis, A. "Nonlinear and Complex Dynamics in Economics," *Mimeograph*, 1997.
- Bates, Robert H. "State Failur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008.
- Baumol, W. and Benhabib, J. "Chaos: Significance, Mechanism, and Economic Applications." *Economic Perspectives*. Vol. 3, No. 1, 1989.
- Beaumont, Peter. Kamal Ahmed and Martin Bright. "The Meeting That Brought Libya in from the Cold." *The Observer*. Internet ed, December 2003.

- Bederman, David J. "Collective Security, Demilitarization and 'Pariah' Stat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3, No. 1, 2002.
- Bennett, Andrew and Alexander L. George. "Case Studies and Process Tracing in History and Political Science: Similar Strokes for Different Foci." In Colin Elman and Miriam Fendius Elman, eds. *Bridges and Boundaries: Historians, Political Scientists,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The MIT Press, 2001.
- Betts, Richard K. "Paranoids, Pygmies, Pariahs and Non-Proliferation." *Foreign Policy*. Vol. 26, 1977.
- Beyerchen, Alan D. "Clausewitz, Nonlinearity, and the Unpredictability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3, 1992.
- Bialek, W., Nemenman, I. and Naftali, T. "Predictability, Complexity and Learning." *Neutral Computation*. Vol. 13, 2001.
- Bilgin, Pinar and Adam David Morton. "From 'Rogue' to 'Failed' State? The Fallacy of Short-termism." *Politics*. Vol. 24, No. 3, 2004.
- Boucek, Christopher. "Libya's Return to the Fold?" *Foreign Policy In Focus*. Vol. 3, No. 3, 2004.
- Boureston, Jack and Yana Feldman. "Verifying Libya's Nuclear Disarmament" in Trevor Finlay, ed. *Verification Yearbook 2004*. London, UK: Verification Research, Training and Information Centre, 2004.
- Bremer, Stuart A. and Michael Mihalka. "Machiavelli in Machina: Or Politics among Hexagons." In Karl W. Deutsch, Bruno Fritsch, Helio Jaguaribe, and Andrei S. Markovits, eds. *Problems of World Modeling: Poli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Cambridge, MA: Ballinger Publishing Co., 1977.
- Broad, William J. and David E. Sanger. "The Bomb Merchant: Chasing Dr. Khan." *New York Times*. December 26, 2004.
- Brock, W. "Complexity-based Methods in Cycles and Growth." *Working*

Paper, 1999.

- Brooks, Risa A. "Making Military Might: Why Do States Fail and Succee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2, 2003.
- Bueno de Mesquita, Bruce. "An Expected Utility Theory of International Conflic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4, No. 4, 1980.
- Bueno de Mesquita, Bruce. "The Contribution of Expected Utility Theory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nflict."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18, No. 4, 1988.
- _____. "Toward a Scientific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Conflict: A Personal View."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9, No. 2, 1985.
- Bullard, J. and Butler, A. "Nonlinearity and Chaos in Economic Models: Implications for Policy Decisions." *Economic Journal*. Vol. 103, No. 419, 1992.
- Caprioli, Mary and Peter F. Trumbore. "Identifying 'Rogue' States and Testing Their Interstate Conflict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9, No. 3, 2003.
- _____. "Rhetoric versus Reality: Rogue States in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9, No. 5, 2005.
- Carlisle, Ysanne and McMillan, Elizabeth. "Innovation in Organizations from a Complex Adaptive Systems Perspective." *E: CO (Emergence: Complexity and Organization)*. Vol. 8, No. 1, 2006.
- Carment, David. "Assessing State Failure: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olicy." *Third World Quarterly*. Vol. 24, No. 3, 2003.
- Cederman, Lars-Erik. "Modeling the Size of Wars: From Billiard Balls to Sandpil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7, No. 1, 2003.
- Cha, Vicor D. "Hawk Engagement and Preventiv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1, 2002.
- Chestnut, Sheena.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 North Korean Smuggling

- Net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1, 2007.
- Clapham, Christopher. “The Challenge to the State in a Globalized World.” *Development and Change*. Vol. 33, No. 5, 2002.
- Cliffe, Lionel and Robin Luckham. “Complex Political Emergencies and the State: Failure and the Fate of the State.” *Third World Quarterly*. Vol. 20, No. 1, 1999.
- Collins, Stephen D. “Dissuading State Support of Terrorism: Strikes or Sanctions?” *Studies in Conflict and Terrorism*. Vol. 27, No. 1, 2004.
- Cornwell, Rupert. “North Korea: A Pariah State, Its Secret Nuclear Programme –And a New Crisis for Bush.” *The Independent*. October 18, 2002.
- Crocker, Chester A. “Engaging Failing States.” *Foreign Affairs*. Vol. 82, No. 5, 2003.
- Crutchfield, James P., Dooyne Farmer, Norman H. Packard and Robert S. Shaw. “Chaos.” *Scientific American*. Vol. 255, No. 6, 1986.
- Dosi, G., et al.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Differentiation: a Multi-Country Evolutionary Model.”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ol. 3, No. 1, 1994.
- Drezner, Daniel W. “The Hidden Hand of Economic Coerc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7, No. 3, 2003.
- Dueck, Colin. “Strategies for Managing Rogue States.” *Orbis*. Vol. 50, No. 2, 2006.
- Duffy, Gavan. “Concurrent Interstate Conflict Simulations: Testing the Effects of the Serial Assumption.” *Mathematical and Computer Modelling*. Vol. 16, 1992.
- Dujarric, Robert. “North Korea: Risks and Rewards of Enga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2, 2001.
- Dyson, F. J. “Statistical Theory of the Energy Levels of Complex Systems.” *Journal of Mathematical Physics*. Vol. 3, 1962.
- Epstein, Joshua M. “Agent-Based Computational Models and Generative

- Social Science.” *Complexity*. Vol. 4, No. 5, 1999.
- Falk, Pamela S. “Cuba in Africa.” *Foreign Affairs*. Vol. 65, No. 5, 1987.
- Fearon, James D. and David D. Laitin. “Neotrusteeship and the Problem of Weak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4, 2004.
- Fontana, Walter and Leo W. Buss. “What Would Be Conserved If ‘the Tape Were Played Twic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91, 1994.
- Gaddis, John Lewis. “Containment: Its Past and Fu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5, No. 4, 1981.
- Goldberger, A. L. et al. “Fractal Dynamics in Physiology: Alterations with Disease and Ag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 99, 2002.
- Granovetter, Mark. “Threshold Models of Collectiv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3, No. 6, 1978.
- Grant, Thomas D. “Partition of Failed States: Impediments and Impulses.”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Vol. 11, No. 2, 2004.
- Grassberger, P. “Toward a Quantitative Theory of Self-Generated Complexity.”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etical Physics*. Vol. 25, No. 9, 1986.
- Gros, Jean-Germain. “Towards a Taxonomy of Failed states in the New World Order: Decaying Somalia, Liberia, Rwanda and Haiti.” *Third World Quarterly*. Vol. 17, No. 3, 1996.
- Gross, Dominique and Roger Strand. “Can Agent-Based Models Assist Decisions on Large-Scale Practical Problems?” *Complexity*. Vol. 5, No. 6, 2000.
- Harkavy, Robert E. “Pariah States and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5, No. 1, 1981.
- Harkavy, Robert E. “The Pariah State Syndrome.” *Orbis*. Vol. 21, No. 3, 1977.
- Hart, John and Shannon N. Kyle. “Libya’s Renunciation of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In Stockholm

-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05: Armaments, Disarmaments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Heilbrunn, John R. "Paying the Price of Failure: Reconstructing Failed and Collapsed States in Africa and Central Asia."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4, No. 1, 2006.
- Henrickson, Leslie and Bill McKelvey. "Foundations of 'New' Social Science: Institutional Legitimacy from Philosophy, Complexity Science, Postmodernism, and Agent-Based Modeling." *PNAS*. Vol. 99, No. 3, 2002.
- Henriksen, Thomas H. "The Rise and Decline of Rogue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2, 2001.
- Herbst, Jeffrey. "A New Approach to Sovereignty in Africa." *SAIS Review*. Vol. 21, No. 1, 2001.
- _____. "Responding to State Failure in Afric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1996.
- Hibbs, Mark. "South Africa's Secret Nuclear Program: the Dismantling." *Nuclear Fuel*. May 24, 1993.
- Hillis, W. Daniel. "Connection Machine." *Scientific American*. Vol. 256, No. 6, 1987.
- Hochman, Dafna. "Rehabilitating a Rogue: Libya's WMD Reversal and Lessons for US Policy." *Parameters*. Vol. 36, No. 1, 2006.
- Hoffman, Chris. "Toward an Agent Based Model of Open Source Software Development," Summer REU Project, University of Notre Dame, 2002.
- Holland, John H. *Emergence: From Chaos to Order*. Reading: Addison-Wesley, 1998.
- Hopkins, A. G. "Quasi-States, Weak States and the Partition of Afric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6, 2000.
- Huberman, B. A. and Hogg, T. "Complexity and Adaptation." *Physica D*. Vol. 22, 1986.

- Jackson, Robert H. and Carl G. Rosberg. "Why Africa's Weak States Persist: The Empirical and the Juridical in Statehood." *World Politics*. Vol. 35, No. 1, 1982.
- Jo, Dong-Joon and Erik Gartzke. "Determinants of Nuclear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1, 2007.
- Johnson, Paul E. "Simulation Modeling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2, No. 10, 1999.
- Kauffman, S. A. and Macready, W. "Technological Evolution and Adaptive Organizations." *Complexity*. Vol. 1, No. 2, 1995.
- King, Gary and Langche Zeng. "Improving Forecasts of State Failure." *World Politics*. Vol. 53, No. 4, 2001.
- Krugman, P. "What Economists Can Learn from Evolutionary Terrorists." Talk given to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Evolutionary Political Economy, 1996.
- Lake, Anthony. "Confronting Backlash States." *Foreign Affairs*. Vol. 73, No. 2, 1994.
- Latham, Robert. "History, Theory, and International Order: Some Lessons from the Nineteenth Centur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3, 1997.
- Lebow, Richard Ned. "Contingency, Catalysts, and International System Chang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5, No. 4, 2001.
- LeoGrande, William M. "Rollback or Containment? The United States, Nicaragua, and the Search for Peace in Central Americ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1, No. 2, 1986.
- Levite, Ariel E. "Never Say Never Again: Nuclear Reversal Revisite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30, 2002.
- Liberman, Peter. "The Rise and Fall of the South African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2, 2002.
- Litwak, Robert S. "What's in a Name? The Changing Foreign Policy Lexico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2, 2001.

- Martin, Lisa. "Credibility, Costs, and Institutions: Cooperation on Economic Sanctions." *World Politics*. Vol. 45, No. 3, 1993.
- Mayer, Joseph. "Scientific Method and Social Science." *Philosophy of Science*. Vol. 1, No. 3, 1934.
- McIntyre, Lee. "Complexity: A Philosopher's Reflections." *Complexity*. Vol. 3, No. 6, 1998.
- Milliken, Jennifer and Keith Krause. "State Failure, State Collapse, and State Reconstruction: Concepts, Lessons and Strategies." *Development and Change*. Vol. 35, No. 5, 2002.
- Morton, Adam David. "The 'Failed Sta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Political Economy*. Vol. 10, No. 3, 2005.
- Musah, Abdel-Fatau. "Privatization of Security, Arms Proliferation and the Process of State Collapse in Africa." *Development and Change*. Vol. 33, No. 5, 2002.
- New England Complex Systems Institute. "Visualizing Complex Systems Science: Characteristics of Complex Systems." NECSI Research Project, 2005.
- Nincic, Miroslav. "The Logic of Positive Engagement: Dealing with Renegade Regimes."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Vol. 7, No. 4, 2006.
- Nowak, M. and May, R. M. "Evolutionary Games and Spatial Chaos." *Nature*. Vol. 359, 1992.
- O'Hanlon, Michael and Mike Mochizuki. "Toward 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 *Washington Quarterly*. Vol. 26, No. 4, 2003.
- O'Reilly, K. P. "Perceiving Rogue States: The Use of the 'Rogue State' Concept by U.S. Foreign Policy Elites." *Foreign Policy Analysis*. Vol. 3, 2007.
- O'Sullivan, Meghan L. "Sanctioning 'Rogue' States: A Strategy in Decline?"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22, 2000.
- Ottaway, Marina and Bethany Lacina. "International Interventions and Imperialism: Lessons from the 1990s." *SAIS Review*. Vol. 23, No.

2, 2003.

- Pabian, Frank V. "South Africa's Nuclear Weapons Program: Lessons for Nonproliferation Policy." *Nonproliferation Review*. Vol. 3, No. 1, 1995.
- Patrick, Stewart. "Weak States and Global Threats: Fact or Fiction?" *Washington Quarterly*. Vol. 29, No. 2, 2006.
- Pepinsky, Thomas B. "From Agents to Outcomes: Simul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1, No. 3, 2005.
- Polley, D. "Chaos as Metaphor and Science: Applications and Risks." Paper presented at the Academy of Management Annual Meeting, 1993.
- Resnick, Evan. "Defining Enga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4, No. 2, 2001.
- Rotberg, Robert I. "Failed States, Collapsed States, Weak States: Causes and Indicators." in Robert I. Rotberg, ed. *When States Fail: Causes and Consequen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Rotberg, Robert I. "The New Nature of Nation-State Failure." *Washington Quarterly*. Vol. 5, No. 3, 2002.
- Rotmans, Jan. "Societal Innovation: Between Dream and Reality lies Complexity." ERIM Inaugural Lectures Research in Management Series,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2005.
- Saperstein, Alvin M. "War and Chaos." *American Scientist*. Vol. 83 (November-December, 1995).
- Saunders, Elizabeth N. "Setting Boundaries: Can International Security Exclude 'Rogue State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8, 2006.
- Sawyer, R. Keith. "Social Explanation and Computational Simulation." *Philosophical Explorations*. Vol. 7, No. 3, 2004.
- Segell, Glen. "A Reflection on War against Rogue States."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 No. 3, 2004.

- Shalizi, C. R. "Methods and Techniques of complex Systems Science: An Overview." *Topics in Biomedical Engineering International Book Series*, 2006.
- Simon, H. A. "The Architecture of Complexity."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Vol. 106, 1962.
- Simon, Herbert A. "Human Nature in Politics: The Dialogue of Psychology with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9, No. 2, 1985.
- Singh, Sonali and Christopher R. Way. "The Correlates of Nuclear Proliferation: A Quantitative Tes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8, No. 6, 2004.
- Sovacool, Benjamin K. "Constructing a Rogue State: American Post-Cold War Security Discourse and North Korean Drug Trafficking." *New Political Science*. Vol. 27, No. 4, 2005.
- Stanley, H. E., et al. "Self-Organized Complexity in Economics and Financ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99, 2002.
- Takeyh, Ray. "The Rogue Who Came in from the Cold." *Foreign Affairs*. Vol. 80, No. 3, 2001.
- Thayer, Bradley A. "Bringing in Darwin: Evolutionary Theory, Realism,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2, 2000.
- Tucker, Aviezer. "Historiographical Counterfactuals and Historical Contingency." *History and Theory*. Vol. 38, No. 2, 1999.
- Wade, Robert Hunter. "Failing States and Cumulative Causation in the World System."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6, No. 1, 2005.
- Watts, D. J. and Strogatz, S. H. "Collective Dynamics of Small-World Networks." *Nature*. Vol. 393, 1998.
- Weaver, Warren. "Science and Complexity." *American Scientist*. Vol. 36, 1948.

Wise, William M. “*American Perspectives on the Threat Posed by Weak and Failing Asian States.*” Paper Presented at the U.S.-China Conferences on Areas of Instability and Emerging Threats. Beijing, 2004.

Wit, Joel S. “Enhancing U.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Washington Quarterly*. Vol. 30, No. 2, 2007.

Zakaria, Fareed. “The Reagan Strategy of Containmen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5, No. 3, 1990.

3. 기타자료

『경향신문』.

『로동신문』.

『미국의 소리방송』.

『북한 제9차 개정 헌법』. 통일부.

『연합뉴스』.

『오늘의 북한소식』.

『월간 북한동향』.

『조선중앙방송』.

『주간 통일정세』.

『조선중앙방송』.

『청년전위』.

『평양방송』.

<<http://www.complexity.or.kr/doc/01/CPCCommon.html?submenu=0101>>.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东北亚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초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저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저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저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공저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공저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저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공저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공저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저	20,000원
2009-16	200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학술회의총서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협동연구총서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 '비핵·개방·3000 구상'을 위한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공저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공저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공저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공저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공저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공저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공저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공저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공저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공저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공저	7,5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이금순 외 공저	20,000원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스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7-01	북핵 '2·13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공저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공저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공저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공저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월간 북한동향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

Studies Series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만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
(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